

주요국 예산안 2022

2022. 6.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우 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송 경 호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정은·박신아·장준희 (국제기구)
구윤모 (미 국)
강민채 (일 본)
김진아·박지혜 (독 일)
이정인 (프랑스)
한혜란 (영 국)
김은숙 (호 주)
김진아 (캐나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PART 1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3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3
가. 세계 경제 전망	3
나. 주요국 경제 전망	8
2 세계 재정 전망	13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13
나. 주요 국가별 재정 전망	16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	21
가. 통화정책	21
나. 재정정책	22

PART 2 각국 예산안 분석

I. 미 국	25
1. 경제 및 재정 전망	29
가. 경제 전망	29
나. 재정 전망	31

2. 예산기조 및 목표	34
3. 예산안 내용	35
가. 세입	35
나. 세출	37
4. 주요 재정정책	46
가. 일자리 창출 / 경제 수용능력 증대	46
나. 글로벌 위협 대응 / 미국의 리더십 회복	47
다. 보건 인프라 강화	47
라. 기후 위기 대응	48
마. 경제 기회 확대 / 형평성(Equity) 추구	48
바. 재정 건전화(조세)	49
II. 일 본	50
1. 경제 및 재정 전망	55
가. 경제 전망	55
나. 재정 전망	58
2. 예산기조	60
3. 예산안 내용	63
가. 세입	63
나. 세출	66
4. 주요 재정정책	70
가. 경제성장	70
나. 안전·재해 예방 및 사회보장	72
다. 지역 발전·창생	73
라. 예산 효율화 및 질 향상	75

Ⅲ. 독 일	79
<FY2022 1차 예산안(2021.6.23.)>	82
1. 경제 및 재정 전망	82
가. 경제 전망	82
나. 재정 전망	83
2. 예산기조	86
3. 예산안 주요 내용	87
가. 재정수입	87
나. 재정지출	89
4. 주요 재정정책	93
가. 기후변화 대응	93
나. 주요 투자 정책	95
<FY2022 2차 예산안(2022.3.16.)>	96
1. 경제 및 재정 전망	96
가. 경제 전망	96
나. 재정 전망	97
2. 예산기조	98
3. 예산안 내용	99
가. 재정수입	99
나. 재정지출	100

IV. 프랑스	104
1. 경제 및 재정 전망	107
가. 경제 전망	107
나. 재정 전망	108
2. 예산기조	114
3. 예산안 주요내용(PLF 2022)	115
가. 세입	115
나. 세출	116
4. 주요 재정정책	118
가. 예외적 경제 지원 제도의 점진적 폐지	118
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위한 투자	118
다. 마크롱 정부 우선순위 정책 이행 지속	120
라. 복지지출 관리 정책	124
V. 영국	126
1. 경제 및 재정 전망	130
가. 경제 전망(2021년 10월 전망 기준)	130
나. 재정 전망(2021년 10월 전망 기준)	132
2. 예산기조 및 정책 방향	136
가. 2021 가을예산안의 재정 기조	136
나. 2021 가을예산안의 정책 방향	137
3.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140
가. 수입 전망(2021년 10월 전망 기준)	140
나. 지출 전망(2021년 10월 전망 기준)	141
4.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의 주요 정책 결정	144
가.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147
나. 성장에 대한 투자	148

다. 국민 및 기업 지원	150
라. 친환경적 재건(Building back greener)	152
마. 지역균형발전(Lavelling up)	153
바.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비전 달성 및 브렉시트의 기회 포착 ..	153
사. 영국 전역을 위한 지원 제공	154
5. 주요 재정정책 이슈	155
가. 2021 지출검토	155
나.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장	158
다. 재정준칙 개정(안)	161
VI. 호주	164
1. 경제 및 재정 전망	167
가. 경제 전망	167
나. 재정 전망	169
2. 예산기조 및 편성 방향	173
3. 예산안 내용	175
가. 수입	175
나. 지출	181
4. 주요 재정정책	186
가. 강력하고 생산적인 경제 건설	186
나. 생활비 지원	188
다. 홍수 피해 복구 지원	189
라. 지역 경제 및 인프라 강화	189
마. 필수 서비스 보장	191
바. 불확실성에 대응	193

VII. 캐나다	195
1. 경제 및 재정 전망	197
가. 경제 전망	197
나. 재정 전망	198
2. 예산기조	200
3. 예산안 내용	201
가. 세입	201
나. 세출	204
4. 주요 재정정책	208
가. 주택·부동산 정책	208
나. 기후 정책	209
다. 성장 및 일자리 창출	212
라. 보건 분야	214
마.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	215
바. 다양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건설	216
사. 글로벌 리더십 강화	217
아. 공평한 조세시스템 및 효율적 정부	218
자. 재정건전화	219

표 목차

PART 1 총론

〈표-1〉 세계 경제 전망	3
〈표-2〉 WEO 세계 경제 전망(GDP 성장률)	4
〈표-3〉 OECD 세계 경제 실질 GDP 전망	6
〈표-4〉 EU의 경제 전망	7
〈표-5〉 EU의 국가별 경제 전망	12
〈표-6〉 OECD의 재정 전망	15
〈표-7〉 EU의 재정 전망	16
〈표-8〉 OECD의 주요국 재정 전망	18
〈표-9〉 EU의 국가별 재정 전망	20

PART 2 각국 예산안 분석

〈표 I-1〉 미국 경제성장률 기관별 비교	29
〈표 I-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30
〈표 I-3〉 미국 재정 전망	33
〈표 I-4〉 미국의 분야별 주요 세입전망	36
〈표 I-5〉 미국의 FY2023 예산안 기능별 지출(Outlays) 규모	39
〈표 I-6〉 미국의 항목(Category)별 지출(outlays) 전망	41
〈표 I-7〉 미국의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내역	44

〈표 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56
〈표 II-2〉 일본의 FY2022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59
〈표 II-3〉 일본의 FY202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64
〈표 II-4〉 일본의 FY2022 일반회계 조세 및 인지수입	65
〈표 II-5〉 일본의 FY2022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68
〈표 III-1〉 독일의 2021년 가을 경제 전망 주요수치	83
〈표 III-2〉 독일의 FY2022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상 지출·수입	84
〈표 III-3〉 독일의 FY2021~2025 주요지표 전망	85
〈표 III-4〉 독일의 2021~2025년 연방 조세수입 및 신규차입 계획	88
〈표 III-5〉 독일의 2020~2025 주요 기능별 연방지출 전망	92
〈표 III-6〉 독일의 2021~2025년 에너지·기후기금 계획	94
〈표 III-7〉 독일의 2022 경제 전망 주요 지표	96
〈표 III-8〉 독일의 2022년 1차, 2차 예산안 및 2023~2026 중기재정계획 상 지출·수입	97
〈표 III-9〉 독일의 2022년 2차 예산안 부처별 재정지출	103
〈표 IV-1〉 프랑스의 거시경제 전망	108
〈표 IV-2〉 프랑스의 2022년 예산법안 주요 재정지표	110
〈표 IV-3〉 프랑스의 2022년 예산법안	111
〈표 IV-4〉 프랑스의 2022년 미션별 세출 내역	117
〈표 IV-5〉 프랑스의 2022년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	124
〈표 IV-6〉 프랑스의 202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전망	125
〈표 V-1〉 영국의 주요 경제 전망(2021년 10월 전망치)	131
〈표 V-2〉 영국의 주요 재정총량 전망(2021년 10월 전망치)	133
〈표 V-3〉 영국의 경상수입 전망(2021년 10월 전망치)	142
〈표 V-4〉 영국의 총관리지출(TME) 전망(2021년 10월 전망치)	143
〈표 V-5〉 영국의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 주요 정책의 재정적 영향	144
〈표 V-6〉 영국의 2021 가을예산안 및 지출검토의 총관리지출(TME) 계획	157
〈표 V-7〉 영국의 재정준칙(안) 달성 전망(2021년 10월 전망치)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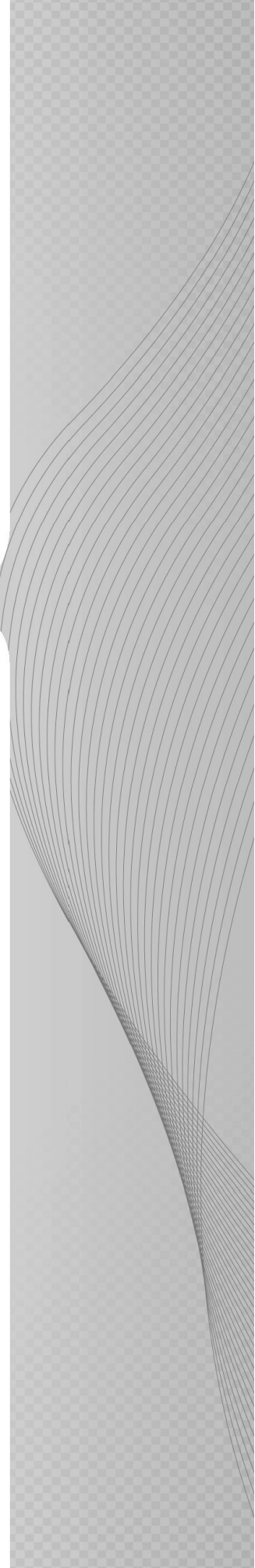
〈표 VI-1〉 호주의 주요 경제 변수 전망(FY2022-23 Budget)	168
〈표 VI-2〉 호주의 주요 경제 변수 전망(FY2021-22 MYEFO)	169
〈표 VI-3〉 호주의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171
〈표 VI-4〉 호주의 2021-22 예산안 및 2021-22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2022-23 예산안의 일반정부 수입(general government receipts) 전망 변화 비교	175
〈표 VI-5〉 호주의 2021-21 예산안 및 2021-22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2022-23 예산안의 조세 수입(taxation receipts) 전망 변화 비교	176
〈표 VI-6〉 호주의 2022-23 예산안 일반정부 수입(general government receipts) 규모	177
〈표 VI-7〉 호주의 2022-23 예산안 세목별 일반정부 수입(general government receipts) 전망	178
〈표 VI-8〉 호주의 2021-22 예산안 및 2021-22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2022-23 예산안의 일반정부 수입(general government revenue) 전망 변화 비교	179
〈표 VI-9〉 호주의 2022-23 예산안 일반정부 수입(general government revenue) 규모	180
〈표 VI-10〉 호주의 일반정부 재정 지출(expenses) 추정	181
〈표 VI-11〉 호주의 FY2022-23 예산안 기능별 지출	183
〈표 VI-12〉 호주의 FY2022-23 상위 20개 지출 프로그램	184
〈표 VII-1〉 캐나다 경제 전망	198
〈표 VII-2〉 캐나다 재정 전망	199
〈표 VII-3〉 캐나다 세입 전망	203
〈표 VII-4〉 캐나다의 프로그램 지출 전망	206
〈표 VII-5〉 캐나다의 2022년 예산안 주요 조치에 대한 투자	219
〈표 VII-6〉 캐나다의 FY2021-22 시장채무(Market Debt)	221

그림 목차

PART 2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I-1] 미국의 2023 예산정책의 장기재정 영향 전망	32
[그림 I-2] 미국의 주요 세입 항목의 GDP 대비 비중 추이	35
[그림 II-1] 일본의 FY2021 일반회계 세입 구성	66
[그림 II-2] 일본의 일반회계 주요경비 추이	69
[그림 II-3] 일본의 FY2022 일반회계 세출 구성	69
[그림 III-1] 독일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85
[그림 III-2] 독일의 2022년 연방정부 재정수입 구조	87
[그림 III-3] 독일의 2022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92
[그림 IV-1] 프랑스의 재정지출 증가율 및 추이	109
[그림 IV-2] 프랑스의 사회보장부문 총재정수지 추이	125
[그림 V-1] 영국의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133
[그림 V-2] 영국의 공공부문 순채무 전망	133
[그림 V-3] 영국의 경기조정 기초재정적자로 측정한 재정 기초	137
[그림 V-4] 영국의 GDP 대비 수입 및 지출 비율 추이	140
[그림 VI-1] 호주의 GDP 대비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as a share of GDP) 전망	173
[그림 VI-2] 호주의 2022-23 예산안 기능별 지출	183
[그림 VII-1] 캐나다 장기 국가채무 전망	220

제 1 부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가. 세계 경제 전망

〈표-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GDP(IMF 전망)				실질GDP(OECD 전망)				실질GDP(EU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미국	-3.4	5.7	3.7	2.3	-3.4	5.7	2.5	1.2	5.7	2.9	2.3
유로지역	-6.4	5.3	2.8	2.3	-6.5	5.3	2.6	1.6	5.4	2.7	2.3
일본	-4.5	1.6	2.4	2.3	-4.5	1.7	1.7	1.8	1.7	1.9	1.8
중국	2.2	8.1	4.4	5.1	2.2	8.1	4.4	4.9	8.1	4.6	5.0
세계	-3.1	6.1	3.6	3.6	-3.4	5.8	3.0	2.8	5.8	3.2	3.5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2022, Table A1&A4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2. 6.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2, 2022, table 1

□ (IMF 전망¹⁾) 세계 경제는 2021년 6.1%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과 2023년 3.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오미크론 변이의 단기적 영향 이후 2분기부터 글로벌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시아 제재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 역시 각각 -0.8%p, -0.2%p 하향 조정됨
-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전망이다
 - 2023년 이후에는 중기적으로 약 3.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²⁾되며, 고용과 생산량은 2026년까지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2022.

2) 단, 이 예측은 분쟁이 우크라이나에 국한되어 있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제외하며(2022년 3월 31일까지 발표된 러시아 에너지 및 금융 조치로 인한 영향은 기준선에 포함),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은 2022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 전망이다

- 전쟁으로 인한 상품 시장, 무역 및 금융 채널을 통한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 및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의 급상승으로 특히 저소득 국가의 취약 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비정상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쟁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하방 리스크 확대
 - 전쟁 악화로 공급망 훼손, 에너지 가격 상승,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난민에 따른 사회적 불안, 코로나 신종 변이 재확산 우려,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인한 중국 성장둔화 장기화, 금리 인상 및 부채부담 증가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표-2〉 WEO 세계 경제 전망(GDP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2021년 7월 WEO Update		2021년 10월 WEO		2022년 1월 WEO Update			2022년 4월 WEO	
	'21	'22	'21	'22	'21	'22	'23	'22	'23
	세계 경제	6.0	4.9	5.9	4.9	5.9	4.4	3.8	3.6
선진국	5.6	4.4	5.2	4.5	5.0	3.9	2.6	3.3	2.4
미국	7.0	4.9	6.0	5.2	5.6	4.0	2.6	3.7	2.3
유로지역	4.6	4.3	5.0	4.3	5.2	3.9	2.5	2.8	2.3
일본	2.8	3.0	2.4	3.2	1.6	3.3	1.8	2.4	2.3
그 외 선진국 ¹⁾	4.9	3.6	4.6	3.7	4.7	3.6	2.9	3.4	2.5
신흥국 및 개도국	6.3	5.2	6.4	5.1	6.5	4.8	4.7	3.8	4.4
아시아	7.5	6.4	7.2	6.3	7.2	5.9	5.8	5.4	5.6
중국	8.1	5.7	8.0	5.6	8.1	4.8	5.2	4.4	5.1
인도 ²⁾	9.5	8.5	9.5	8.5	9.0	9.0	7.1	8.2	6.9
아세안-5 ³⁾	4.3	6.3	2.9	5.8	3.1	5.6	6.0	5.3	5.9

주: 1)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2) 실적/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를 기초, 2011년부터 2011-12년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한 시장가격 기준 GDP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1, 202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1, 202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2, 2022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2022를 편집

- (OECD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세계경제는 글로벌 백신접종 노력, 주요 경제국의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 지원 등으로 인해 2022~2023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을 예상하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주의적 위기와 심각한 경제적 충격으로 2022년 세계 GDP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쟁 이전³⁾) 세계 GDP 성장률은 2022년 4.5%, 2023년 3.2%로 전망하였으며, 2023년 완전고용 전망,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 도달, 통화정책, 긴급 재정조치 등의 단계적인 정상화를 예상하였음
 - '22년 말까지 글로벌 백신보급 노력을 통한 국경 간 활동제한 철회, 거시경제정책 지원, 낮은 가계 저축률을 통한 수요 증대 등을 가정하여 전망
 - 대부분의 선진국 성장추세는 '23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흥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
 - (전쟁 이후⁴⁾) NiGem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초기 1년 간 세계 GDP 성장률을 1%p 이상 감소시키고 세계 소비자물가지수를 2.5%p 증가시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6월 OECD EO 전망⁶⁾) 세계 GDP 성장률을 2022년 3.0%(2021년 12월 OECD 경제 전망 대비 약 1.5%p 낮은 수준), 2023년 2.8%로 전망

3) OECD, 2021.12.1.,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december-2021/>, 검색일자: 2022.05.30.,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Volume 2021 Issue 2: Preliminary version, No.110 OECD Publishing, Paris, 2021.

4)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2022.3.17.,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4181d61b-en.pdf?expires=1647844324&id=id&accname=guest&checksum=5762FA0C0CA0D9BAA03D53782E1A7DD6>, 검색일자: 2022.05.30.

5)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2022.3.17.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3월호, 2022. 참고

6) OECD, 2022.6.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2d0ca31-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62d0ca31-en>, 검색일자: 2022.06.14.,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Volume 2022 Issue 1: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2021.

〈표-3〉 OECD 세계 경제 실질 GDP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2021년 12월 OECD EO				2022년 6월 OECD EO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세계경제	-3.4	5.6	4.5	3.2	-3.4	5.8	3.0	2.8
OECD 국가	-4.7	5.3	3.9	2.5	-4.6	5.5	2.7	1.6
미국	-3.4	5.6	3.7	2.4	-3.4	5.7	2.5	1.2
유로지역	-6.5	5.2	4.3	2.5	-6.5	5.3	2.6	1.6
일본	-4.6	1.8	3.4	1.1	-4.5	1.7	1.7	1.8
비OECD 국가	-2.2	5.8	4.9	3.8	-2.3	6.1	3.3	3.8
중국	2.3	8.1	5.1	5.1	2.2	8.1	4.4	4.9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1. 12.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2. 6.

□ (EU 전망⁷⁾) EU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을 2022년 2.7%, 2023년 2.3%로 전망

- (경제) 높은 에너지 가격이 경제 악화의 주요 요인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데 이어 전쟁 발발 후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 압력이 더욱 증가
 - 다만, 노동 시장 개선, 가계 저축률 감소, 유리한 자금 조달 여건, 회복·복구기금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시행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물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에너지 부문을 넘어 전반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망 기간 동안 에너지 도매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상승 압력이 다른 상품 및 서비스로 전이될 전망
 - EU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6.8%로 크게 상승한 뒤 2023년 3.2%로 하락할 전망
 - 근원 인플레이션은 2022년 4.2%, 2023년 3.3%로 전망되어 3%를 웃돌 전망

7)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2, 20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2022.

- (노동) 지난 해 EU 전역에서 일자리가 520만개 창출되는 등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 시장이 개선되었고, 이러한 흐름이 전망 기간 중 계속될 전망
 - 2022년 고용 증가율은 지난 해 하반기 강력한 성장세에 힘입어 1.2%를 기록할 전망
 - 실업률은 실업자 수 감소, 경제활동 참가자 증가로 2021년 7.0%에서 2022년 6.7%, 2023년 6.5%로 더욱 개선될 전망
 - 임금 상승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인 2022년 3.8%, 2023년 3.7%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에는 못 미쳐, 실질 임금은 올해 하락했다가 내년에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 (위험) 전쟁으로 촉발된 충격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한 가운데 하방 위험이 우세
 - 지정학적 상황이 더욱 심화되어 원자재 시장 및 무역 등에 악영향을 미치면 인플레이션 상승, 성장 위축이 일어날 수 있으며,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 요소로 작용
 - 반면, 회복·복구기금에 의해 촉진된 투자가 부문 간, 국가 간 파급효과를 일으켜 경제 활동이 강화될 수 있으며,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와 친환경 전환 가속화는 에너지 가격 급증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

〈표-4〉 EU의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전망시점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유로 지역	2022년 2월 전망	5.3	4.0	2.7	2.6	3.5	1.7	-	-	-
	2022년 5월 전망	5.4	2.7	2.3	2.6	6.1	2.7	7.7	7.3	7.0
EU	2022년 2월 전망	5.3	4.0	2.8	2.9	3.9	1.9	-	-	-
	2022년 5월 전망	5.4	2.7	2.3	2.9	6.8	3.2	7.0	6.7	6.5

주: EU의 겨울 중간 경제 전망(2022년 2월 전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만 발표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2(Interim), 2022, table 1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2, 2022, table 1

나. 주요국 경제 전망

□ IMF의 주요국 경제 전망⁸⁾

- (선진국) 2021년 5.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점차 둔화되어 2022년 3.3%, 2023년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공급망 훼손 등에 따라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 1월에 이미 하향 조정된 미국과 캐나다는 소폭 하향 조정
 -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등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 전망이 가장 크게 하향 조정됨
-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2021년 6.8%에 이어 2022년 3.8%, 2023년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물가 상승, 타이트한 글로벌 금융상황, 관광 감소 등으로 대부분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산유국은 유가 상승으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됨

□ OECD의 주요국 경제 전망⁹⁾

- (현황 및 전망) 국가별 경제회복 양상 및 속도가 상이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봉쇄로 공급 부족, 유가상승,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요인은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2022년 2.5%, 2023년 1.2%로 전망
 - (일본) 2022년 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약한 외부수요, 주요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 등은 단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의 반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2022년 1.7%, 2023년 1.8%로 예상됨
 - (유로지역)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 둔화로 각각 2.6%, 1.6%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조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추가 자극을 가하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2022

9) OECD, 2022.6.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2d0ca31-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62d0ca31-en>, 검색일자: 2022. 06. 14.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Volume 2022 Issue 1: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2021.

- 고 실질가계소득과 기업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2.5%로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소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초부터 현재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강력한 투자와 수출로 인해 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내수시장의 하방위험으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 등을 지적
 - (중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치 및 강화된 규제, 부동산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4%, 4.9%로 예상

□ EU의 주요국 경제 전망¹⁰⁾

- EU 국가
 - (독일) 높은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 공급 병목이 수출과 투자 반등을 제약하고 있으나, 서비스 지출 회복과 견고한 노동 시장, 누적된 저축액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2022년 1.6%, 2023년 2.4%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 물가상승률은 2022년 4월 7.8%까지 치솟았고 수요 회복, 에너지 가격 급등, 투입비용 상승에 영향을 받아 연평균 6.5%에 이를 전망
 - 실업률이 2022년 3월 2.9%까지 하락하고 고용도 2022년 1분기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고용 개선이 지속
 - (프랑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3.1%, 1.8% 성장할 전망
 - 인플레이션이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아 2022년 4.9%로 상승하고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인 3.1%를 기록할 전망
 - 실업률은 2021년 말부터 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면서 2022년과 2023년 모두 7.6%를 유지할 전망

10)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2, 2022.

- (스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회복·복구기금 투자와 관광 부문 회복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이 지속될 전망(2022년 4.0%, 2023년 3.4%)
 - 인플레이션은 정부 조치에 힘입어 에너지 상승 영향이 올해 중반부터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3.0%에서 2022년 6.3%로 상승할 전망이며 2023년에는 기저효과 역전으로 1.8%로 하락할 전망
 - 팬데믹 중 단기 근로 계획(ERTE) 시행 덕분에 2021년 말 실업률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전환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정책(RED)에 힘입어 2021년 14.8%에서 2023년 13%로 추가 하락할 전망
- (이탈리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기존의 공급망 교란과 가격 압력을 악화시키면서 경제성장률은 2021년 6.6%에서 2022년 2.4%, 2023년 1.9%로 둔화
 - 급상승하는 에너지와 식품 물가가 2022년 인플레이션을 6%까지 끌어올리고, 2023년에는 에너지 가격 영향은 감소하나 투입 및 판매 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2%를 상회할 전망
 - 경제활동 둔화에 따라 고용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2023년에 가서야 8.9%로 떨어질 전망
- (비 EU 국가)
 - (영국) 높은 에너지 가격과 긴축 재정·통화정책이 가처분소득과 민간소비를 억제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이 2022년 3.4%, 2023년 1.6%로 부진할 전망
 - 높은 원자재 가격, 공급망 병목, 견고한(tight) 노동 시장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2022년 말 정점을 찍은 후(2022년 7.0%), 2023년 에너지 가격과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3.6%로 다시 하락할 전망
 -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경제활동 참가율과 총 고용자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낮으며, 실업률은 2022년, 2023년 모두 4.0%로 전망 기간 동안 대체로 안정적인 전망

- (미국) 견고한(tight) 노동 시장과 러시아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민간 소비에 부담을 주고,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긴축이 성장을 제약해 경제성장률이 2022년 2.9%, 2023년 2.3%를 보일 전망
 - 인플레이션은 2022년 2분기에 정점을 찍은 후 공급 제약과 에너지 가격이 점차 완화되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 기간 내 연준의 목표치인 2%에는 도달하지 못할 전망
 - 향후 2년간 일자리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률은 2021년 5.4%에서 2022년 3.6%, 2023년 3.5%로 하락할 전망
- (일본) 2022년 1분기 오미크론 확산과 봉쇄조치로 성장세가 둔화된 뒤, 2분기부터 경제가 재개되면서 2022년에는 1.9%, 2023년에는 경기순환적 반등이 감소하고 재정정책 지원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1.8% 성장할 전망
 - 2022년과 2023년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 일회성 가격 인하 정책 및 보조금 감소 등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각각 1.6%, 1.5%로 반등할 전망이나 일본은행 목표인 2%에는 밀들 전망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임금상승률이 부진한 가운데, 실업률은 2022년 2.7%, 2023년 2.6%를 기록할 전망
- (중국) 빈번한 지역 봉쇄, 특히 부동산 부문의 높은 기업 채무, 대외 환경 악화 등이 성장을 제약함에 따라, 강력한 재정·통화정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22년 4.6%, 2023년 5.0%로 전망됨
 - 당 대회 전까지 코로나19 제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정책은 이미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주요 하락 위협으로 작용

〈표-5〉 EU의 국가별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전망시점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독일	2022년 2월 겨울 전망	2.8	3.6	2.6	3.2	3.7	2.1	-	-	-
	2022년 5월 봄 전망	2.9	1.6	2.4	3.2	6.5	3.1	3.6	3.3	3.2
프랑스	2022년 2월 겨울 전망	7.0	3.6	2.1	2.1	2.8	1.7	-	-	-
	2022년 5월 봄 전망	7.0	3.1	1.8	2.1	4.9	3.1	7.9	7.6	7.6
스페인	2022년 2월 겨울 전망	5.0	5.6	4.4	3.0	3.6	1.1	-	-	-
	2022년 5월 봄 전망	5.1	4.0	3.4	3.0	6.3	1.8	14.8	13.4	13.0
이탈리아	2022년 2월 겨울 전망	6.5	4.1	2.3	1.9	3.8	1.6	-	-	-
	2022년 5월 봄 전망	6.6	2.4	1.9	1.9	5.9	2.3	9.5	9.5	8.9
영국	2022년 2월 겨울 전망	-	-	-	-	-	-	-	-	-
	2022년 5월 봄 전망	7.4	3.4	1.6	2.5	7.0	3.6	4.5	4.0	4.0
미국	2022년 2월 겨울 전망	-	-	-	-	-	-	-	-	-
	2022년 5월 봄 전망	5.7	2.9	2.3	4.7	7.3	3.1	5.4	3.6	3.5
일본	2022년 2월 겨울 전망	-	-	-	-	-	-	-	-	-
	2022년 5월 봄 전망	1.7	1.9	1.8	-0.2	1.6	1.5	2.8	2.7	2.6
중국	2022년 2월 겨울 전망	-	-	-	-	-	-	-	-	-
	2022년 5월 봄 전망	8.1	4.6	5.0	0.9	-	-	4.0	-	-

주: EU의 겨울 중간 경제 전망(2022년 2월)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만 발표하며 전망 대상 국가는 EU 회원국에 한정되므로 영국, 미국, 일본, 중국의 전망치를 포함하지 않음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2(Interim), 2022.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2, 2022.

2 세계 재정 전망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 IMF 전망¹¹⁾

- (재정수지) 팬데믹 초기에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한 후 경제가 회복되고, 예외적 지원을 철회하면서 2022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4.9%로 크게 개선될 전망
 - 2022년 선진국 기초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3%로 2020년의 기록적인 수준에서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안할 때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음
 - 2022년 신흥시장국은 재정적자가 -5.7%로 전년대비 0.4%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의 큰 폭의 재정적자 증가(-9.3%)를 부분적으로 상쇄함
- (채무) 코로나19 대응으로 치솟은 전 세계 국가채무 또한 2022~24년 동안 GDP의 약 94%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의 평균 채무는 2024년까지 GDP의 11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음
 - 주로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 시장국의 채무는 계속 증가하여 2024년까지 GDP의 7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OECD 전망

- (재정수지)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2년 -5.0%, '23년 -3.8%로 예상되며, 재정적 정책지원은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회복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

11) IMF, Fiscal Monitor, April 2022, 2022

- (전쟁 이전¹²⁾) 2020~21년 강력한 확장적 재정기조 이후, 팬데믹 관련 조치의 철회는 회복에 필요한 지원 유지와 자원 재분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속도와 균형을 잘 맞추어 진행되어야 함
 -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관련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유지되었는데, 기초재정수지를 통해 이러한 재정 확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OECD 중위(median) 경제의 기초재정수지는 2022년 잠재 GDP의 0.8%, 2023년 0.6%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대부분 국가에서 2022년과 2023년 기초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전쟁 이후¹³⁾)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내 난민 지원,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뮬레이션 결과 향후 1년간 모든 OECD 회원국에서 GDP 대비 0.5% 규모의 선별적 정부지출이 있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50%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재정지출 확대여력이 부족한 OECD 비회원국에게도 선진국의 수요 및 무역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를 통해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도 제한적인 확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
- (2022년 6월 OECD EO 전망¹⁴⁾) 각 국가별 재정건전화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재검토되고 있으며, 팬데믹 관련 지원조치는 점차 철회하고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2021.12.,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december-2021/>, 검색일자: 2022.05.30.

자세한 내용은 원문 또는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2021 No.8 KIPF 국제기부 보고서 요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참고

13)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2022.3.17.,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4181d61b-en.pdf?expires=1647844324&id=id&accname=guest&checksum=5762FA0C0CA0D9BAA03D53782E1A7DD6>, 검색일자: 2022.05.30.

자세한 내용은 원문 또는 「KIPF 재정동향」, 2022년 3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참고

14) OECD, 2022.6.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2d0ca31-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62d0ca31-en>, 검색일자: 2022.06.14.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Volume 2022 Issue 1: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2021.

-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탄소중립으로 전환,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에 대응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이후 부채상환의 부담이 늘어 공공재정에 어려움이 가증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프레임워크를 통한 공공지출에 대한 개혁이 필요

〈표-6〉 OECD의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3~2019 평균	2020	2021	2022	2023
재정수지(2021년 12월 EO)	-3.2	-10.4	-8.4	-5.2	-3.7
재정수지(2022년 6월 EO)	-3.2	-10.4	-7.4	-5.0	-3.8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2.12., Table 1.1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2.6., Table 1.1□ EU 전망¹⁵⁾

- (재정수지) EU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조치가 감소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2021년 4.7%에서 2022년 3.6%, 2023년 2.5%로 더욱 개선될 전망
 - 2022년 에너지 가격 급증 영향 완화 조치와 우크라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이 증가하는 한편, 대부분의 코로나19 조치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경제 확장에 따른 경기순환적 요소가 개선돼 전반적으로 재정 적자가 감소
 - 2023년에는 코로나19 조치와 에너지 조치가 종료 혹은 축소되고 경기순환적 요인이 증가해 적자가 더욱 감소
 - 3%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회원국 수는 2020년 25개국(덴마크, 스웨덴 제외)에서 2021년 15개국, 2022년 17개국, 2023년 11개국으로 점차 감소할 전망
- (정부채무) EU의 GDP 대비 정부채무는 우호적인 금리-성장률 여건(소위 눈덩이 효과)으로 2021년 89.7%에서 2023년 85.2%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15)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2, 20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2022의 내용을 보강.

- 기초 재정적자가 2020~2021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계속해서 채무 동화에 영향을 줄 전망
- 2023년 회원국의 절반이 GDP 대비 60% 이상의 채무를 보일 전망이며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100%를 상회할 전망
- (재정기조) 재정정책은 2022년까지 지원적(supportive)으로 유지되다가 2023년 정상화될(normalise) 전망
- 2022년은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 및 기업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우크라이나 대피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재정이 확장적일 전망
- 2023년에는 에너지 가격 완화 조치가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긴축적일 전망

〈표-7〉 EU의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일반정부 기준)

구분	재정수지			총채무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유로지역	-5.1	-3.7	-2.5	97.4	94.7	92.7
EU 27개국	-4.7	-3.6	-2.5	89.7	87.1	85.2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2, 2022, table 1.2.6

나. 주요 국가별 재정 전망

□ IMF의 주요국 재정 전망¹⁶⁾

- (선진국) 2022년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채무 비율은 115.5%로 예상되고, 2027년까지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미국)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5.4%p 개선된 -4.8%로 전망되며, 총채무는 전년대비 7%p 개선된 132.6%로 전망됨
- (유로지역)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1.2%p 개선된 -4.3%로 전망되며, 총채무는 전년대비 0.8%p 증가한 95.2%로 전망됨

16) IMF, *Fiscal Monitor*, April 2022, 2022

- (일본)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0.2%p 악화된 -7.8%로 전망되며, 총채무는 전년대비 0.6%p 개선된 262.5%로 전망됨
-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2022년 동안 신흥 시장국(중국 제외)의 전체 재정적자는 평균적으로 GDP의 1% 미만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큼
- (중국) 재정지출 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가 GDP 대비 약 -7%(팬데믹 이전 이상)를 유지하고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73%에서 2024년까지 약 8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OECD의 주요국 재정 전망¹⁷⁾

- (미국) 2022년 및 2023년 재정수지는 각각 GDP의 -6.7%, GDP의 -5.3%로 전망되며, 2021년 만료된 팬데믹 관련 지원조치는 가계와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지출로 그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긴축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일본) 재정 및 통화지원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며, 재정수지는 2022년 GDP의 -6.9%, 국가채무는 GDP 대비 244.7%로 전망됨
- (영국) 2021년 말 코로나19 재정지원 조치가 단계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과 점진적인 재정긴축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2022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5.3%, 국가채무는 GDP 대비 139.2%로 전망
- (유로지역) 유로 지역 내 국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 재정기조는 대체로 중립적이어야 하며 2023년에는 완만하게 통합될 것으로 예상됨
 - 팬데믹 대응 조치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각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재정지원을 도입하고 있음

17) OECD, 2022.6.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2d0ca31-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62d0ca31-en>, 검색일자: 2022.06.14.;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Volume 2022 Issue 1: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2021.

- (독일) 재정적자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에 대한 단기 보조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6월 말 단계적으로 중단되나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GDP의 약 1.1% 수준의 지원 조치)가 2022년 추경에 포함될 예정
- (중국) 세금 삭감 및 예비비(reserve funds) 지출의 형태로 재정정책은 보다 확장적일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시키는 것을 통화정책 목표로 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
 - 2022년 및 2023년 재정수지는 각각 -2.5%, -1.9%로 예상되며, 일반정부 총채무는 2023년까지 GDP의 51.1%로 증가할 전망

〈표-8〉 OECD의 주요국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정수지					
미국	-6.4	-15.4	-11.8	-6.7	-5.3
일본	-3.0	-9.0	-5.7	-6.9	-4.6
영국	-2.3	-12.8	-8.3	-5.3	-4.1
유로지역	-0.7	-7.1	-5.1	-4.1	-3.0
프랑스	-3.1	-8.9	-6.4	-5.4	-4.7
독일	1.5	-4.3	-3.8	-3.4	-1.8
중국	-3.7	-6.9	-6.6	-6.5	-6.6
한국	1.0	-2.3	-3.0	-2.5	-1.9
국가채무					
미국	108.6	134.1	127.6	126.1	126.8
일본	223.5	240.9	240.5	244.7	244.7
영국	118.5	149.1	143.1	139.2	138.6
유로지역	103.1	121.1	115.7	115.0	114.0
프랑스	97.3	114.7	112.6	114.1	114.9
독일	58.8	68.9	69.5	70.5	69.6
중국	-	-	-	-	-
한국	44.2	45.4	47.9	49.9	51.1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2.6., Ch.3의 국가별 경제 및 재정 전망 표 재구성

□ EU의 주요국 재정 전망¹⁸⁾

○ EU 국가

- (독일) 친환경 전환 지출과 국방 지출이 증가하나 세수가 견고하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일반정부 적자는 2022년 2.5%, 2023년 1.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정부채무는 2022년 66.4%, 2023년 64.5%로 하락할 전망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조치와 친환경 투자, 에너지 상승에 따른 가계 지원 등 지출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팬데믹 지원 조치가 점차 종료되고 세수가 강건하게 증가해 재정수지 개선을 이끌 전망
 - 2023년 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국방 지출 증가가 계획됨
- (프랑스) 재정적자는 2021년 6.5%에서 2022년 4.6%, 2023년 3.2%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채무는 2021년 112.9%에서 2022년 111.2%, 2023년 109.1%로 하락할 전망
 - 2022년 에너지 경감 조치가 증가하지만 대부분의 팬데믹 조치와 프랑스 활성화 계획(France Relance) 회복 조치가 감소하면서 지출이 감소
 - 2023년에는 전기세(electricity taxes) 인하 축소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정부 지출은 꾸준히 감소하면서 재정적자가 더욱 감소

○ 비 EU 국가

- (영국) 팬데믹 중 대규모 재정 지원에 따라 적자가 2020년 12.8%, 2021년 8.3%까지 증가했으나 2022년 세수가 증가하고 지출이 둔화되면서 적자가 3.9%, 2023년 2.3%로 감소하고 채무도 2022년 100.2%, 2023년 98.4%로 감소
- (미국) 일반정부 적자가 2022년 5.7%, 2023년 4.9%로 감소하고 일반정부 채무도 2022년 123.5%, 2023년 122%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행 중인 추가 지출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재정 충격은 전망 기간 중 마이너스일 전망

18)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2.

- (일본) 재정적자는 2022년 6.5%, 2023년 4.1%로 감소하고 공공 채무는 2021년과 2022년 265%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261%로 감소하며, 지원 조치가 추가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전망 기간 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표-9〉 EU의 국가별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일반정부 기준)

구분	재정수지			총채무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독일	-3.7	-2.5	-1.0	69.3	66.4	64.5
프랑스	-6.5	-4.6	-3.2	112.9	111.2	109.1
영국	-8.3	3.9	-2.3	102.8	100.2	98.4
미국	-11.7	-5.7	-4.9	128.8	123.4	122.1
일본	-7.6	-6.5	-4.1	264.9	265.2	260.9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2.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

가. 통화정책

□ IMF의 통화정책 권고¹⁹⁾

- 전쟁 노출도, 팬데믹 상황 및 회복 강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과 다국간 대처가 중요함
-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신흥 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해 많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정책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음
 - 전쟁과 그로 인한 제재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었고, 러시아의 신용부도 스와프(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함
- 따라서 각 국 여건에 맞는 통화정책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리, 선진국 통화긴축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국의 금리인상 확대도 고려해야 함

□ OECD의 통화정책 권고²⁰⁾

- 대부분의 국가에서 향후 18개월 동안 통화정책 정상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국가별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의 다양한 전망을 고려할 때 그 속도와 강도는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요국은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조치(정책금리 인상, 순자산 구매 중단, 대차대조표 축소 논의 등)를 시행하거나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19)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20) OECD,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2 Issue 1: Preliminary version, 2022.6.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2d0ca31-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62d0ca31-en>, 검색일자: 2022.06.14.

나. 재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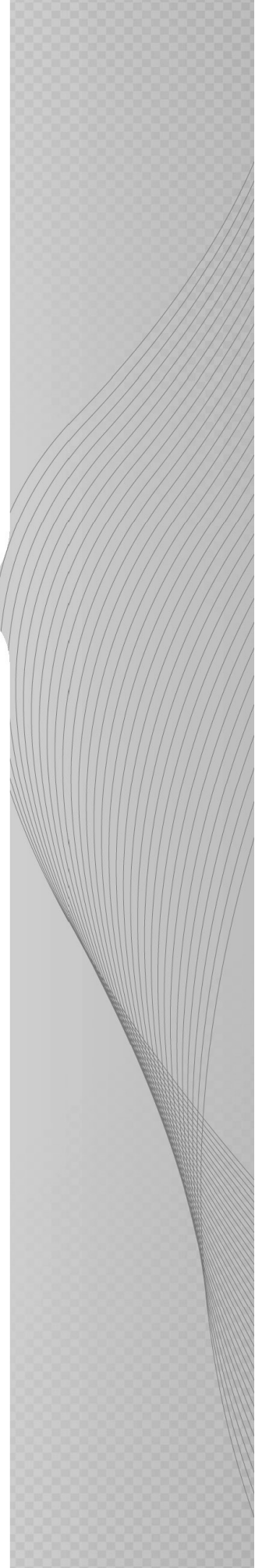
□ IMF의 재정정책 권고²¹⁾

- 팬데믹 기간 동안의 재정 확장 이후 부채관리는 필요하나, 코로나 및 전쟁 취약층에 대한 지원 축소는 신중해야하며,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선별지원 등으로 중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함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 러시아 제재의 영향이 강한 국가는 재정정책으로 인도적 위기와 경제적 혼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층이나 우선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한된 재정 여력과 재정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선택한 정책을 시기적절하고 목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

2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제 2 부

각국 예산안 분석



I. 미 국

□ FY2023: 2022년 10월 ~ 2023년 9월

□ 출처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2. 3. 28.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Analytical Perspectives」, 2022. 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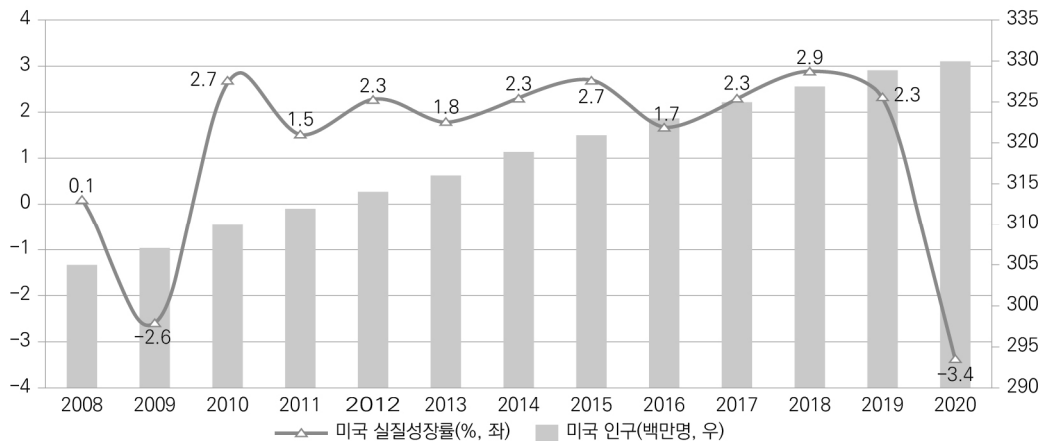
□ 환율: 1USD = 약 1,144.42원(2021년도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2020년 경상GDP 20조 8,937억달러(우리나라의 약 8.9배 수준²²⁾²³⁾)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2020년 기준 23.4%(우리나라는 69.2%)

□ 인구: 3억 3,015만명(2020년 기준)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 GDP, Population and employment by main activity, 검색일자: 2022.4.15.

22)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수치이며, 우리나라 규모는 추정치, 미국은 실적치 기준.

23) 일반적인 명목(current prices, current exchange rates)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 경제규모는 우리나라(1조 6,379억달러)의 12.8배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시〉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21. 07. 01.	의회예산처(CBO), 2021~2031 예산기준선 수정 전망 발표	2021년 하반기 재정동향
2021. 7. 28.~29.	의회 하원, 2022 회계연도 9개 세출분야 예산법안(H.R. 4502) 통과 의결	
2021. 07. 29.	의회, 1월 6일 의사당 난입 관련 추경세출예산안(H.R. 3237) 통과 의결	
2021. 07. 31.	미국 연방 채무한도 유예기간 만료	
2021. 08. 10.	의회 상원, 인프라 법안(H.R. 3684) 의결	
2021. 08. 10.	의회 상원, 휴먼 인프라 법안 및 FY2022 재정 등에 대한 예산공동결의안(S.Con.Res. 14) 통과 의결	
2021. 08. 24.	의회 하원, 단독 하원결의안(H.Res. 601) 도입 의결	
2021. 08. 27.	관리예산처(OMB), 대통령 예산안 수정전망(Mid-Session Review) 발표	
2021. 08. 31.	의회, 미국인들의 본국 송환 긴급 지원 법안(H.R.5085) 통과 의결	
2021. 09. 22.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동결 및 경제 전망 발표	
2021. 09. 30.	의회, 2022 회계연도 1차 임시 예산안(H.R. 5305) 가결	
2021. 10. 08.	의회, 채무한도 이슈 한시적 합의(P.L. 117-50)	
2021. 10. 28.	의회, 육상교통정리 2차 연장 법안 통과(P.L. 117-52) 의결	
2021. 10. 28.	백악관, 1.75조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기후변화 대응 정책안(Build Back Better Framework) 발표	
2021. 11. 05.	의회,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P.L. 117-58) 최종 확정	
2021. 11. 08.	의회예산처(CBO), 2021 회계연도(2020.10.1.~2021.9.30.) 최종 결산 발표	
2021. 11. 19.	의회 하원,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H.R. 5376) 통과 의결	
2021. 12. 03.	의회, 2022 회계연도 2차 임시 예산안(P.L. 117-70) 가결	
2021. 12. 16.	의회, 연방 채무 한도 추가 증액 법안 가결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22. 01. 13.	연방대법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무효화 판결	2022년 상반기 재정동향
2022. 02. 17.	의회, 2022 회계연도 3차 임시 예산안(H.R. 6617) 가결	
2022. 02. 17.	재무부 재정관리국(BFS), 2021 회계연도 발생주의 결산보고서 발표	
2022. 03.	바이든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 요청안 및 대 러시아 제재 방침 발표	
2022. 03. 10.	의회, 2022 회계연도 4차 임시 예산안 가결	
2022. 03. 15.	2022 회계연도 정규 세출예산법안 최종 입법 완료	
2022. 03. 28.	관리예산처(OMB), 2023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	
2022. 04. 08.	의회예산처(CBO), 2022 회계연도 상반기 결산 추정치 발표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올해('22년) 실질성장률은 전년(5.5%) 대비 1.3%p 감소한 4.2%로 전망되며, 이후 2025년에 저점(2.0%) 기록 후 장기적으로 2.3% 전망
 - (재정 전망) FY2023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1조 4,150억달러) 대비 18.5% 감소한 1조 1,154억달러 전망
 - (국가채무) FY2023 연방정부 채무²⁴⁾²⁵⁾(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24조 8,360억달러) 대비 4.7% 증가한 26조 330억달러 전망
- * GDP대비 수치는 감소 (FY2022) 102.4% → (FY2023) 101.8%

□ 예산기조 및 목표

- 국내·외 안보 및 안전 강화
-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
- 법인세율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책임 구현

□ 예산안 내용

- (수입) FY2023 재정수입은 전년(4조 4,370억달러) 대비 4.5%(2,010억달러) 증가한 4조 6,380억달러(GDP 대비 18.1%) 전망
- (지출) FY2023 재정지출은 전년(5조 8,520억달러) 대비 약 1.0%(600억달러) 감소한 5조 7,920억달러(GDP 대비 22.7%) 계획

□ 주요 재정정책

- ①일자리 창출 및 경제 수용능력 증대, ②글로벌 위협 대응 및 미국의 리더십 회복, ③보건 인프라 강화, ④기후위기 대응, ⑤경제기회 확대 및 형평성(Equity) 추구, ⑥재정건전화 등

24) 정부 내부거래 제외

25)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를 제외한 연방정부 채무는 미국 채무의 주요지표로 쓰임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²⁶⁾

- (경제성장률) 올해('22년) 실질성장률은 전년(5.5%) 대비 1.3%p 감소한 4.2%로 전망하며, 이후 2025년에 저점(2.0%) 기록 후 장기적으로 2.3% 전망
 - 정부의 2021년 경제 전망은 Blue Chip Survey²⁷⁾ 전망에 비해 0.2%p 정도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전망
 - 2021년 명목GDP 규모는 22조 8,990억달러, 2027년에 30조달러를 넘어설 전망

〈표 I-1〉 미국 경제성장률 기관별 비교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구분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2032
실질 GDP ¹⁾	1.5	2.2	2.9	2.2	-3.4	정부	5.5	4.2	2.8	2.2	2.0	...	2.3
						Blue Chip	5.7	4.1	2.5	2.1	2.0	...	1.9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Analytical Perspectives*, 2022.3.28., Table 2-3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2.3.28., Table S-9

- (노동시장) 올해('22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1.5%p 감소한 3.9%, 내년('23년)에 저점(3.6%) 기록 후 2025년부터 장기적 수준으로 3.8% 전망
 - 2020년 4월에 14.8%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실업률은 2020년 전체적으로는 8.1%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2021년에도 전년 대비 2.7%p 감소한 5.4% 수준으로 개선됨

26) 경제 전망에서의 연도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아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의미

27) 미국 주요 경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화한 수치

- (소비) 미국 경제의 2/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 소비의 실질 수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은 회복을 보임
- (투자) 실질 비주거(non-residential) 고정투자²⁸⁾는 2020년에 전년 대비 5.3%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7.4% 증가하였으며, 장비 및 지적재산 투자는 각각 13.0%, 10.2% 증가함

〈표 I-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032
명목 규모	21,433	20,894	22,899	24,631	25,853	26,966	28,064	29,200	...	37,437
실질 GDP 성장률 (2023 예산안 전망치)	2.2	-3.4	5.5	4.2	2.8	2.2	2.0	2.0	...	2.3
실질 GDP 성장률 (2022 예산안 전망치)			5.2	4.3	2.2	1.9	1.8	1.8	...	2.0
실업률 ¹⁾	3.7	8.1	5.4	3.9	3.6	3.7	3.8	3.8	...	3.8
CPI-U ²⁾	1.8	1.2	4.6	4.7	2.3	2.3	2.3	2.3	...	2.3
국채 91일 ¹⁾³⁾	2.1	0.4	*	0.2	0.9	1.6	1.9	2.1	...	2.3
국채 10년물 ¹⁾	2.1	0.9	1.5	2.1	2.5	2.7	2.8	3.0	...	3.3

주: 지표의 수치는 2021년 11월 10일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0.05% 또는 이하

1) 연평균

2) 계절 조정(도시 소비자 대상)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1.5.28., Table S-9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2.3.28., Table S-9

28) 기구(tools), 상업용 부동산, 공장 등

나. 재정 전망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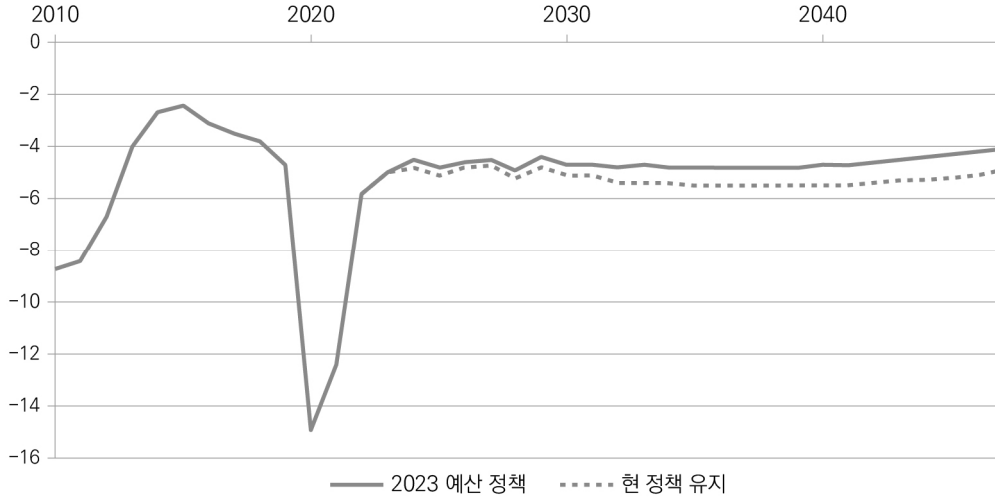
- (재정수입) FY2023 재정수입은 전년(4조 4,370억달러) 대비 4.5%(2,010억달러) 증가한 4조 6,380억달러(GDP 대비 18.1%) 전망
- (재정지출) FY2023 재정지출은 전년(5조 8,520억달러) 대비 약 1.0%(600억달러) 감소한 5조 7,920억달러(GDP 대비 22.7%) 계획
 - (재량지출³⁰⁾) FY2023 총재량지출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1조 5,820억달러 계획
 - FY2023 국방(defense)분야 예산권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8,130억달러 계획
 - FY2023 비국방(non-defense)분야 예산권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6,500억달러 계획
 - (의무지출) FY2023 의무지출(순이자지출 3,960억달러 포함)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4조 830억달러 전망
 - * 순이자지출 전망: 3,570억달러(FY2022) → 3,960억달러(FY2023) → 4,760억달러(FY2024)
- (재정수지) FY2023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1조 4,150억달러)대비 18.5% 감소한 1조 1,540억달러(GDP 대비 4.5%) 전망
 - 올해(FY2022) 재정적자는 전년도 발표된 대통령 예산안의 전망 수치(1조 8,370억달러) 대비 약 23% 개선된 1조 4,150억달러 전망
 - 향후 10년간(~FY2032) 재정적자는 FY2023을 기점으로 GDP 대비 4% 중·후반 구간을 유지할 전망
 - FY2023 예산정책이 반영될 경우, 향후 25년간의 재정적자 수치는 매해 기준선 전망 수치(현 정책 유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그림 I-1] 참고)

29) 2023회계연도 기간은 2022.10~2023.9이며, FY2023 전망 시 비교하는 전년도의 규모는 추정치이며, 예산 기본문서의 <Table S-4 - Proposed Budget by Category>의 수치임

30) Base Discretionary Funding 수치(Table S-7: Funding Levels for Appropriated Programs by Category)

[그림 1-1] 미국의 2023 예산정책의 장기재정 영향 전망

(단위: 년도, %)



주: 흑자는 +, 적자는 -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Analytical Perspectives*, 2022.3.28., Chart 3-1

□ (국가채무) FY2023 연방정부 채무³¹⁾³²⁾(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도(24조 8,360억달러) 대비 4.8% 증가한 26조 330억달러 전망(GDP대비 수치는 감소 (FY2022) 102.4% → (FY2023) 101.8%)

* FY2023 연방총채무³³⁾(32조 5,930억달러; GDP 대비 127.5%)중 정부내부거래를 의미하는 정부부문 소유채무는 6조 5,600억달러(GDP 대비 25.7%) 전망

- 올해(FY2022) GDP 대비 연방채무는 전년도(99.7%) 대비 2.7%p 증가한 102.4% 전망
 - 연방채무는 FY2023에 소폭 하락한 이후, 향후 전망기간(~FY2032) 동안 1%p내에서 단계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전망기간 마지막 년도인 FY2032에는 GDP 대비 10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31) 정부내부거래 제외

32) 정부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를 제외한 연방정부 채무는 미국 채무의 주요지표로 쓰임

33) 연방총채무(Gross Federal Debt) = 비정부부문소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채무) + 정부부문소유채무(Debt held by the Government accounts, 정부내부거래만 포함한 채무)

〈표 I-3〉 미국 재정 전망

재정 전망	실적				추정	전망						
	2008	200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2031	2032	2023~2032
예산총량 (십억달러)												
수입	2,524	2,105	3,421	4,047	4,437	4,638	4,874	5,076	...	6,795	7,083	58,264
지출	2,983	3,518	6,550	6,822	5,852	5,792	6,075	6,406	...	8,477	8,867	72,685
재정적자	459	1,414	3,129	2,775	1,415	1,154	1,201	1,330	...	1,682	1,784	14,421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5,803	7,544	21,017	22,284	24,836	26,033	27,271	28,644	...	37,727	39,542	-
경제규모 (GDP)	14,441	14,119	21,000	22,358	24,256	25,567	26,694	27,787	...	35,498	37,041	-
예산총량 (GDP대비 %)												
수입	17.7	14.8	16.3	18.1	18.3	18.1	18.3	18.3	...	19.1	19.1	18.8
지출	21.0	24.7	31.2	30.5	24.1	22.7	22.8	23.1	...	23.9	23.9	23.4
재정적자	3.2	9.9	14.9	12.4	5.8	4.5	4.5	4.8	...	4.7	4.8	4.7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40.8	53.0	100.1	99.7	102.4	101.8	102.2	103.1	...	106.3	106.7	-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2.3.28., Table S-1

2 예산기조 및 목표

- ① 국내·외 안보 및 안전 강화, ②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 ③ 법인세율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책임 구현을 중심으로 예산안 구성³⁴⁾

-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생산성 개선
 - 국내 생산력 제고를 통한 공급망 강화
 - 가격(비용) 상승 대응 및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기회 확대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및 대외 위협 대응
 - 21세기 위협 대응 및 이민 시스템 강화
 - 유럽 동맹국 지원,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 핵억지 현대화, 국경관리 개선 등
 - 글로벌 보건 안보 리더십 추진
-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 미래 대유행·생물학 위협 대응 등을 위한 세계 최상급 공중보건 인프라 확보
 - 기타 질병 및 전염병 대응 등
- 기후변화 및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추진
 - 청정에너지, 기후 관련 데이터 및 복원력 추진
 - 낙후·농업지역의 청정에너지 지원 및 미국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회복
- 경제적 기회 및 평등 확대
 - 낙후지역 학교 투자 등 교육 개선
 - 소수인종 및 여성 기회 확대, 주거 기회(housing opportunity) 확대
- 건전한 재정 및 경제 확립
 - 공정한 조세 체계를 통한 투자비용 확보
 - 장기 재정적자 감축

34) 미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Joe Biden on the FY 2023 Budget, 2022.3.2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28/statement-by-president-joe-biden-on-the-fy-2023-budget/>, 검색일자: 202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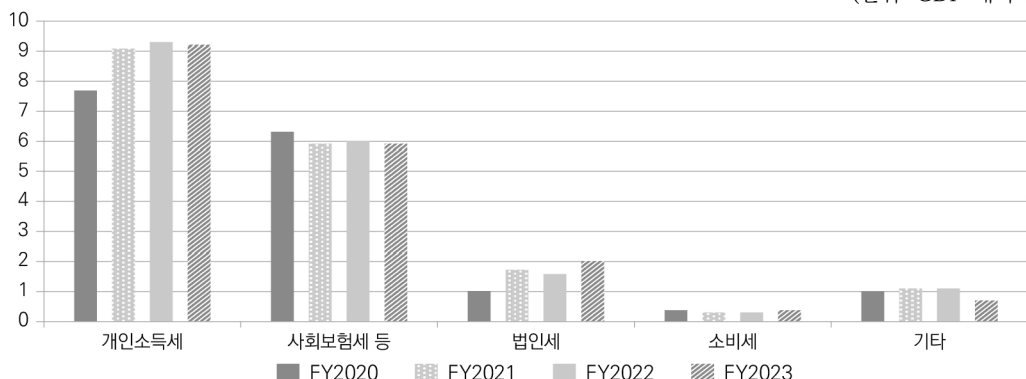
3 예산안 내용³⁵⁾

가. 세입

- FY2023 재정수입은 전년(4조 4,370억달러) 대비 4.5%(2,010억달러) 증가한 4조 6,380억달러(GDP 대비 18.1%) 전망
 - 올해(FY2022) 재정수입은 전년(FY2021) 실적치 대비 약 9.6%(3,900억달러) 증가한 4조 4,370억달러(GDP 대비 18.3%) 추정
 - GDP 대비 재정수입은 FY2028에 19% 수준에 도달한 후, FY2032까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향후 10년간 GDP대비 평균 수입비율은 18.8% 전망)
- 수입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올해(FY2022) 9.3%에서 이후 2개년도 동안 점차적으로 하락하나, FY2025를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FY2027에는 10%대에 도달할 전망
 - * 향후 10년간 GDP대비 평균 개인소득세 수입비율은 9.9% 전망
 - 올해(FY2022) 주요 수입 항목의 GDP 비중 순위는 개인소득세(9.3%), 사회보험세(4.3%), 법인세(1.6%), 메디케어급여세(1.4%), 관세(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2] 미국의 주요 세입 항목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2.3.28., Historical Table 2-3 - receipts by source as a percentages of GDP

35) 2023회계연도 기간은 2022.10.~2023.9.이며, FY2023 전망에서 비교하는 전년도(FY2022) 규모는 추정치임

〈표 I-4〉 미국의 분야별 주요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실적		추정	전망							GDP 대비 평균 비중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2	'23~'32
개인소득세	1,609	2,044	2,263	2,345	2,427	2,549	2,819	3,007	...	3,876	9.9
법인세	212	372	383	501	616	633	612	620	...	625	2.0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¹⁾	1,310	1,314	1,446	1,510	1,651	1,651	1,725	1,794	...	2,238	-
소비세	87	75	84	91	96	95	96	97	...	103	0.3
유산세, 증여세	18	27	26	25	23	25	25	40	...	54	0.1
관세	69	80	93	54	46	47	49	51	...	53	0.2
연방 준비제도 예치 이익금 ²⁾	82	100	108	76	43	34	35	39	...	73	0.2
기타 수입	36	34	35	36	39	42	45	49	...	62	0.2
총 재정수입	3,421	4,047	4,437	4,638	4,874	5,076	5,406	5,696	...	7,083	18.8
GDP대비 %	16.3	18.1	18.3	18.1	18.3	18.3	18.7	18.9	...	19.1	18.8

주: 1) 사회보장급여세, 메디케어급여세, 실업보험, 기타 퇴직 등으로 구성

2) Deposits of earnings, Federal Reserve System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2.3.28., Table S-4

나. 세출³⁶⁾

- (재정지출) FY2023 재정지출은 전년(5조 8,520억달러) 대비 약 1.0%(600억달러) 감소한 5조 7,920억달러(GDP 대비 22.7%) 계획
 - FY2022 재정지출(추정치) 규모는 5조 8,520억달러로 GDP 대비 24.1%로 집계됨
 - 예산 기능별(총 20개 기능) 지출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항목은 사회보장지출, 메디케어, 국방, 보건, 소득보장(income security), 순이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모두 포함한 FY2023의 주요 기능별 지출(outlays by functio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³⁷⁾
 - (사회보장³⁸⁾)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 3,187억달러, 총지출 대비 비중은 22.8% 전망
 - 올해(FY2022)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7.5%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1.2조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FY2027)간 연평균 증가율 6.5% 전망
 - (메디케어³⁹⁾) 전년 대비 12.3% 증가한 8,545억달러, 총지출 대비 비중은 14.8% 전망
 - 2021년에 한차례 감소를 보인 메디케어 지출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6년에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국방) 전년 대비 3.7% 증가한 약 8,086억달러, 총지출 대비 비중은 13.4% 전망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국방 지출은 2026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전년도 예산안 전망 대비 2년 단축)에 8천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36)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년도 규모는 추정치 규모를 의미하며, 기능별 지출은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이 아닌 지출(outlays) 기준임

37) Historical Tables(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7),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2.3.28.

38)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해당

39)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저소득자 및 신체장애인 대상 의료지원 제도

- (보건) 전년 대비 9.9% 감소한 7,824억달러, 총지출 대비 비중은 13.5% 전망
 - 하위 기능인 의료 서비스(health care services), 보건관련 연구·교육 및 소비자 및 직장 내 보건·안전(consumer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지출 모두 감소함
- (소득보장 지원, income security) 전년 대비 25.7% 감소한 6,882억달러, 총지출 대비 비중은 11.9% 전망
 - 소득보장 지원 분야의 하위기능(6개) 중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지원(federal employee retirement and disability) 비용 지출 증가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 모두 감소
 - (감소 분야) ①퇴직/장애보험(general retirement and disability insurance; 사회보장분야지출 제외), ②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 ③주거 지원(housing Assistance), ④식품·영양지원 ⑤기타 소득 보장 지출 등 감소
- (순이자 지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약 3,955억달러, 총지출 대비 비중은 6.8% 전망
 -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2021년 순이자 지출은 증가하였으며, 이후 후속년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표 I-5〉 미국의 FY2023 예산안 기능별 지출(Outlays) 규모

(단위: 백만달러, %)

Outlays By Function	실적			추정	전망	증감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가율 (b-a)/a
국방	686,003	724,645	753,901	779,663	808,565	3.7
국제관계	52,739	67,666	46,947	61,550	63,406	3.0
과학/우주/기술	32,410	34,004	35,512	39,103	41,290	5.6
에너지	5,041	7,083	5,977	5,691	16,962	198.0
천연자원, 환경	37,844	42,450	44,160	50,485	59,552	18.0
농업	38,257	47,298	47,398	35,255	35,464	0.6
상업/주택융자(housing credit)	-25,715	572,071	307,847	-2,371	8,823	-
교통	95,756	145,623	154,291	141,483	147,948	4.6
지역사회/지방발전	26,784	81,878	44,655	81,275	57,887	-28.8
교육/훈련/고용/사회서비스	136,700	237,754	298,406	264,997	226,955	-14.4
보건(의료)	584,816	747,582	796,450	868,442	482,435	-44.4
메디케어	650,996	776,225	696,458	760,940	854,476	12.3
소득보장	514,787	1,263,639	1,647,730	926,051	688,244	-25.7
사회보장	1,044,409	1,095,816	1,134,586	1,219,521	1,318,746	8.1
재향군인	199,843	218,655	234,282	273,965	295,446	7.8
법무행정	65,832	71,997	71,430	79,527	78,459	-1.3
일반정부	23,488	180,109	273,941	140,711	37,772	-73.2
순이자	375,158	345,470	352,338	357,132	395,549	10.8
할당금(Allowances)	-	-	-	267	-	-
기타(상계수입 포함)	-98,192	-106,362	-123,860	-232,111	-125,931	-
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	4,446,956 (21.0)	6,553,603 (31.2)	6,822,449 (30.5)	5,851,576 (24.1)	5,792,048 (22.7)	-1.0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Historical Tables'*, 2022.3.28., Table 1.3; Table 3.2

□ 주요 항목별 지출(outlays)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미국 재정의 항목(category)별 지출은 ①재량지출, ②법정(의무)지출, ③순이자지출로 구분, 재량지출은 다시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 지출로 나누어짐

□ (재정지출) FY2023 재정지출은 전년(5조 8,520억달러) 대비 약 1.0%(600억달러) 감소한 5조 7,920억달러(GDP 대비 22.7%) 계획

○ (재량지출⁴⁰) FY2023 총재량지출(outlays) 규모는 전년 추정치 대비 0.9% 증가한 1조 7,090억달러 계획

- 재량지출은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지속세를 유지할 전망

- 국방 분야 지출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 1.5%)

- 비국방 분야 지출 규모는 두 회계연도(FY2023, FY2025)를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 1.6%)

○ (의무지출) 코로나19 발생 직후 큰 증가폭을 보였던 의무지출은 올해(FY2022)와 내년(FY2023)에는 감소한 이후 지속 증가 전망(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 4.3%)

○ (순이자지출) 향후 약 10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전망(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 11.8%)

□ (지출별 비중) 재량지출, 의무지출(순이자지출 포함)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올해(FY2022) 29:71 수준이며, 내년(FY2023)에는 30:70으로 소폭 조정될 전망

- 향후 10년 뒤인 2032년에는 재량/의무지출 비중은 22:78 수준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

〈참고〉 총재정지출 대비 재량지출/의무지출/순이자지출 비중

연도	재량지출	의무지출	순이자지출	합계
FY2022(올해)	29%	65%	6%	100%
FY2032(10년 뒤)	22%	65%	12%	100%

40)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이 아닌 지출(outlays) 수치 기준(Table S-4: Proposed Budget by Category)

〈표 I-6〉 미국의 항목(Category)별 지출(outlays) 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0	2031	2032	2023~ 2032
재량지출 프로그램												
국방	742	766	795	822	837	843	853	·	879	885	891	8,541
비국방	895	928	915	1,022	1,012	1,019	1,026	·	1,051	1,065	1,083	10,261
소계: (GDP 대비 %)	1,636 (7.3)	1,694 (7.0)	1,709 (6.7)	1,844 (6.9)	1,848 (6.7)	1,862 (6.4)	1,879 (6.2)	·	1,930 (5.7)	1,950 (5.5)	1,974 (5.3)	18,802 (6.1)
법정(의무)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1,129	1,214	1,313	1,398	1,482	1,570	1,662	·	1,957	2,059	2,165	17,222
메디케어	689	753	846	853	971	1,070	1,157	·	1,420	1,513	1,612	12,013
메디케이드 ¹⁾	521	562	536	567	599	631	666	·	799	847	898	7,001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2,495	1,272	993	937	942	953	954	·	1,060	1,088	1,126	10,089
소계 (GDP 대비 %)	4,834 (21.6)	3,800 (15.7)	3,687 (14.4)	3,755 (14.1)	3,994 (14.4)	4,224 (14.6)	4,439 (14.8)	·	5,236 (15.4)	5,508 (15.5)	5,801 (15.7)	46,324 (14.9)
순이자 (GDP 대비 %)	352 (1.6)	357 (1.5)	396 (1.5)	476 (1.8)	564 (2.0)	648 (2.2)	729 (2.4)	·	948 (2.8)	1,019 (2.9)	1,092 (2.9)	7,559 (2.4)
총 재정지출	6,822	5,852	5,792	6,075	6,406	6,734	7,048	·	8,114	8,477	8,867	72,685
GDP 대비 %	30.5	24.1	22.7	22.8	23.1	23.3	23.4	·	23.9	23.9	23.9	23.4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Proposed Budget by Category*, 2022.3.28., Table S-4, S-5

□ 주요 부처(기관)별 2023회계연도 재량지출 사업 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음⁴¹⁾

- (국방부) 국방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도(FY2022) 확정예산 대비 9.8%(690억달러) 증가한 7,730억달러 편성
 - 러시아 침공에 대응한 우크라이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유럽 동맹국 및 지역적 파트너 국가 지원
 -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deterrence) 추진 등 미국이 직면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등의 도전 과제 대응
 -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북한, 이란 및 폭력 극단주의 단체 등의 위협 대응
 -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 현대화 유지
 - 현역군인 및 군무원 봉급 4.6% 인상 및 군인 가족 등 복지 지원
- (보건·복지부⁴²⁾) 보건·복지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도(FY2022) 확정예산 대비 26.8%(269억달러) 증가한 1,273억달러⁴³⁾ 편성
 -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주·지방에 대한 공중보건 역량 강화(주 및 지역별 공중보건 인프라 확대, 보건 인력 강화, 공중 보건 데이터 현대화 등)를 위해 전년대비 약 40%(28억달러) 증가한 예산(재량지출) 배정
 - 50억달러 규모의 연구 투자를 통해 고등보건연구기관(ARPA-H⁴⁴⁾)의 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고, 암, 당뇨 및 치매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 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정신 건강 관련 인력 확충과 함께 관련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등 정신건강 보건 체계 지원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AIDS) 신규 발생 건수 감축을 위해 노출 전 예방요법(PrEP; Pre-Exposure Prophylaxis) 접근성을 높이는 등 관련 정책 적극적 노력

41) 특정 기금 또는 자금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에, <표 I-7>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42)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43)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규모는 인디안 보건 서비스(재량지출에서 의무지출로 전환 추진 중) 규모를 제외함

44) ARPA-H: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 난민 정착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이민자 자녀와 친척 및 후원자와의 통합 보장 등 지원서비스를 실현하고, 2022년 최대 12만 5천명의 난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 재정착 사무국에 63억달러 배정
- **(교육부)** 교육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0.9%(153억달러) 증가한 883억달러 편성
 - 저소득 지역 학교 지원을 위한 365억달러 규모의 Title I funding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재량지출 205억달러 + 의무지출 160억달러)
 -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교육적 혼란(학업성취 관련한 학생·교사·교직원의 육체·정신적 영향) 대응을 위해 학교 상담사, 간호사, 학교 심리학자 및 기타 보건 전문가 등 증원
 - 저소득층 고등교육 학생의 재정지원을 위한 펠 그랜트 장학금 최대한도 2029년까지 2배 인상
- **(국무부 등⁴⁵⁾)** 국무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8%(102억달러) 증가한 676억달러 편성
 - 난민·망명자 등의 지원을 통해 미국의 인도주의적 리더십 회복
 - * 2023년에 약 12만 5천명의 난민·망명자에 대한 입국 허가 프로그램 및 지원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자 계획
 -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한 녹색기후기금 분담 및 2050년까지 제로 탄소배출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 지원 등
 - 지속가능개발, 기아·영양실조 해결 등의 글로벌 현안 과제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
 - 정치적 취약성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권위주의국가(authoritarianism) 등에 대응하여 민주주의·인권·부정부패 방지 등 지원
- **(상무부)** 상무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1.2%(28억달러) 증가한 117억달러 편성

45)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기타 해외 프로그램

- 미국의 제조업 네트워크 지원 및 미국 중소기업 제조업자들의 경쟁력 개선과 함께 전사적 미국내 제조(made in all of America) 확립 등 국내 제조를 통한 유통망 개선을 위해 2억 6백만달러 배정
- 화석 연료에서 클린 에너지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회복 및 투자 촉진
- 미국 상품의 신규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상업외교 강화와 수출 촉진 예산 편성(해외 신규시장 조사 및 미국 기업의 대외수출 지원 등)

〈표 1-7〉 미국의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내역

(단위: 십억달러, %)

	2021 ¹⁾	2022	2023	증가율
	(입법예산)	(임시예산)	(요구액)	('23-'22)/'22
내각 부처(Cabinet Departments)				
농무부(Agriculture)	23.9	23.7	28.5	17.1
상무부(Commerce)	8.9	8.9	11.7	31.2
국방부(Defense)	703.7	709.2	773.0	9.8
교육부(Education)	73.0	73.0	88.3	20.9
에너지부(Energy)	41.8	41.8	48.2	15.1
보건복지부(Health & Human Services)	108.4	110.4	138.0	27.1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54.4	52.7	56.7	5.4
주택·도시개발부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44.5	47.2	60.8	28.8
내무부(Interior)	15.0	15.1	17.9	20.5
법무부(Justice, DOJ)	33.5	33.6	37.7	12.5
노동부(Labor)	12.5	12.5	14.6	17.6
국무부 (State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57.3	57.9	67.6	17.7
교통부(Transportation)	25.3	25.5	26.8	6.0
재무부(Treasury)	13.5	13.5	16.2	19.9
보훈부(Veterans Affairs)	104.6	111.1	135.2	29.4

〈표 I-7〉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

	2021 ¹⁾	2022	2023	증가율
	(입법예산)	(임시예산)	(요구액)	('23-'22)/'22
주요 정부기관(Major Agencies)				
공병단(Corps of Engineers)	7.8	7.8	6.6	-15.3
환경보호청	9.2	9.2	11.9	28.6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0	-1.3	1.3	N/A
항공우주국(NASA)	23.3	23.3	26.0	11.6
국립과학재단	8.5	8.5	10.5	23.6
중소기업청	0.8	0.8	0.9	21.0
사회보장국	9.0	8.9	10.1	12.8
기타 기관들	23.4	23.3	28.1	20.7
의무지출 변화 (Changes in Mandatory Programs offsets)	-26.0 ²⁾	-23.3	-34.7	33.5
합계(FY2022 임시예산(CR) 반영한 수치)	1,375.3³⁾	1,393.5	1,582.0	13.5
(Defense Total)	(740.7)	(746)	(813.3)	(9.0)
(Non-Defense total)	(660.7)	(551)	(649.9)	(17.9)
(Veterans Affairs Medical Care Program) ⁴⁾	-	(96)	(118.7)	(23.6)
합계(FY2022 확정예산(CAA) 반영한 수치)		1,472.9⁵⁾		7.4
(Defense Total)	상동	(782.2)	상동	(4.0)
(Non-Defense total)		(593.6)		(9.5)
(Veterans Affairs Medical Care Program)		(97.2)		(22.2)

주: 1) FY2021 입법예산 수치는 FY2022 예산안(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1.5.28., Table S-7, S-8) 자료 기준

2) 의무지출 변화 수치는 FY2022 예산안 자료에서는 FY2023 예산안 자료와 달리 'Non-Base Discretionary Funding' 항목으로 반영되었기에, 2023년 예산안 분류 기준으로 조정하여 작성

3) FY2022 예산안 기준(의무지출 변화 수치 미포함한 경우)으로 할 경우 1,401.3십억달러

* \$1,375.3bn = \$1,401.3bn(\$740.7bn + \$660.7bn) - \$26.0bn(의무지출변화 수치)

4) Veterans Affairs Medical Care Program 항목은 FY2023 예산안에만 반영됨

5) '2022 임시예산 반영한 수치'는 임시예산(CR)을 근거로 한 내각부처 및 주요 정부기관의 예산권한의 개별 및 합산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2 확정예산 반영한 수치'는 내각부처와 주요 정부기관에 대한 개별 수치가 없으며, 국방과 비국방 분야 등의 주요수치 및 합산수치만 다루고 있음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2.3.28., Table S-7, S-8

4 주요 재정정책

- 행정부 우선순위 정책 -

- ①일자리 창출 및 경제 수용능력 증대, ②글로벌 위협 대응 및 미국의 리더십 회복, ③보건 인프라 강화, ④기후 위기 대응, ⑤경제 기회 확대 및 형평성(Equity) 추구, ⑥재정 건전화 등
-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국 건설(Building A Better America)** 구현 목표

가. 일자리 창출 / 경제 수용능력 증대

- (미국 항만 및 수로 현대화) 인프라 법⁴⁶⁾을 바탕으로, 항만 및 수로에 대한 연방 투자를 통해 해상 화물 수송량 강화
 - 추가적으로, 공급망 효율성을 위해 미국 전역 항만에서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탄소 감축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 진행
- (도로 및 다리 현대화) 도로 및 다리 등의 보수, 개선, 안전 등을 위해 연방 고속도로 사업 예산 투입 및 공공 접근이 가능한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 시스템 배치
 - 도로 및 다리 현대화에서 더 나아가 화물·승객 철도의 안전 확보 및 현대화
- (적정가격 주택 공급 확대) 적정가격의 주택 부족 대응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500억달러(의무지출) 배정
 - 이와 함께, 주택투자협력 프로그램(HOME Investment Partnerships Program)에 약 19억달러 예산을 투입하여 적정가격의 임대주택 재건, 주택소유 기회 지원
- (견습제도 확대) 정보통신·첨단 제조업·보건·교통 등의 고성장 분야에서의 견습제도(Registered Apprenticeships) 확대
 - 유색인종 및 여성 등의 견습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동부의 관련 예산을 2배 확대

46) 인프라 법은 2021년 3월 31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주 연설을 통해 인프라 계획(American Jobs Plan)이 공개된 이후, 이후 정식 법안의 형식(H.R. 3684)으로 상원에서 먼저 통과(2021.8.10.)된 후 약 3개월여 만에 하원(2021.11.5.)을 통과하여 최종 확정됨(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21년 하반기, 2021.12.)

나. 글로벌 위협 대응 / 미국의 리더십 회복

- (글로벌 자유 보호) 전 세계의 민주주의, 자유, 안보 방어를 위한 미국 리더십을 지원하기 위해 약 18억달러 예산 배정
 - 추가적으로, 중국의 해로운 영향력 자금(malign influence fund) 대응 차원의 예산 4억달러,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야기되는 긴급한 안보·에너지·거시경제 안정·시민사회 대응력 수요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6억 8,200만달러 배정
- (글로벌 보건 안보 대비) 글로벌 보건 안보 과제 예산으로 106억달러 배정
 - 코로나19를 포함하여 HIV/AIDS, 당뇨 및 말라리아 등의 대응을 위해 3년 동안 글로벌 기금에 총 60억달러(매해 20억달러) 기여
 - 약 5년 동안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에 65억달러(의무지출)를 투입하여 대유행 및 기타 생화학적 위협 대응 대비 체계 변혁 예정
- (이주민·이민 체계 개선) 중앙 아메리카 이주민 대응, 아이티(Haiti)의 정치·경제 지원, 효율적인 국경 이민 체계 확립 등
 - 비규칙적으로 유입되는 중앙아메리카 이주민에 대한 전략 예산으로 9억 8,700만 달러 배정 및 정치·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티의 국가경찰력, 시민사회 역량, 부정부패 대응 지원을 위해 2억 7,500만달러 배정
 - 미국이민서비스국(USCIS)의 망명 요청건의 효율적 진행 및 적체된 이민신청 처리, 난민 처리 개선 등을 위해 7억 6,500만달러 배정

다. 보건 인프라 강화

- (세계 최상의 보건 인프라 확립) 향후 5년간 보건복지부에 817억달러를 배정하여 미래 대유행 등에 대비한 보건 체계 확립 계획
 - 향후 위협에 대비하여 주·지방 등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중보건 연구 역량, 보건 인력 개발 등에 예산 투입

□ (인디언 보건 서비스 지원) 인디언 보건 서비스에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투입

-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보건 불평등 대응,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 현대화 등 계획

라. 기후 위기 대응

* 바이든 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2030년까지 2005년 수치의 50~52%) 계획을 언급

□ (제로 탄소배출 차량 확대) 연방 조달권한을 통한 미국산(American made) 탄소배출 제로 차량 수요 확대

- 제로 탄소배출 차량 및 이와 관련한 충전·연료 인프라 투자와 함께 19개의 연방기관의 청정에너지 차량 및 부품 산업 가속화 지원 계획에 7억 5,700만달러의 예산 투입

□ (기후 복원력 강화) 연방정부 전반에 걸친 기후 복원력·적응 프로그램에 180억달러 배정

- 기후 복원력 예산을 통해 홍수, 폭우 등으로부터의 피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중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농업지역의 청정에너지 지원) 농업지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전기 공급업자 등에게 보조금, 대출 등 지원에 약 3억달러 배정

- 이 밖에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농무부, 에너지부, 내무부의 탈탄소 협업 촉진을 위해 2천만달러 지원

마. 경제 기회 확대 / 형평성(Equity) 추구

□ (취약한 지역사회 투자) 38억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개발 보조금을 통해 취약 지역의 인프라 현대화, 경제개발 지원, 공원 생활 편의시설 조성

-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100개 지역의 경제 재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 제거와 함께 공평한(equitable) 개발 촉진 계획

- (실업보험 사기 대응) 실업보험의 강화, 안전성 및 현대화 계획
 - 실업보험 프로그램 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신분 검증 및 이와 관련한 주정부의 사기 예방 탐지 및 전략 등 지원
- (주택 기회 확대)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⁴⁷⁾을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 추가 지원
 - 현 임차 지원가구 외에 노숙 및 가정 폭력 또는 젠더 폭력 등을 겪고 있는 신규 20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위해 321억달러 배정
- (국내 범죄 예방) 총기 범죄 대응 주·지방 정부의 범죄 대응력 지원
 - 총기 범죄 대응 및 기타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연방정부의 법 집행력 지원에 174억달러 배정
 - 범죄 예방 및 지역 폭력(community violence) 개입 등 주·지방 정부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 지원 예산으로 32억달러 배정

바. 재정 건전화(조세)

- 재정책임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율 인상 및 부유세(New Minimum Tax on Billionaires) 신설 계획
 - 법인세율은 현행 단일세율인 21%에서 28%로 인상 계획
 - 부유세는 전체가구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세율 20% 신설 계획 등
 - 부유세의 경우, 해당 부유층의 실질적인 세율이 20%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현이익 뿐만 아니라 수입에 대한 미실현(unrealized)이익까지 모두 포함한 추가적인 과세를 통해 최소한 20%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⁴⁷⁾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I. 일본

- FY⁴⁸⁾2022: 2022.4.1. ~ 2023.3.31.
- FY2022 예산편성 일지
 - 2021.7.7 FY2022 예산 개선요구(概算要求)⁴⁹⁾ 기준 발표
 - 2021.9.7. FY2022 일반회계 개선요구(要求)액 및 요망(要望)⁵⁰⁾액 발표
 - 2021.11.26. FY2021 제1차 추경예산안 발표
 - 2021.12.24. FY2022 예산 정부안 발표(2022.1.17. 관련 추가 발표(특별회계 등))
 - 2022.3.22. FY2022 예산 정부안 확정

48) Fiscal year 회계연도

49)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본 행정기관인 각 부(府)·성(省)이 내년도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재무성에 제출하는 것을 말함. 매년 8월말이 기한이나, 2022년 예산안은 COVID-19 영향으로 1개월 연장하여 2021년 9월말에 마감함

50) 일반회계 세출에서 이자지급비와 채무상환비를 제외한 후 '지방 교부세 교부금 등', '연금·의료 등', '재량적 경비', '의무적 경비' 네 개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별로 전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지방 교부세 교부금 등-유지', '연금·의료 등-자연증가분만 반영', '재량적 경비-일정 비율(10%) 삭감', '의무적 경비-재량적 경비 이전 제외' 조치를 통해 요구(要求)액 기준을 설정함

요망(要望)금액은 '재량적 경비' 삭감액(전년도 당초 예산액 10%)의 세 배 한도와 '의무적 경비'에서 재량적 경비로의 전환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일부를 위한 우선 과제 추진'(특별프레임)과 관련된 경우 요망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참의원(상원), 意味合いが変わる概算要求基準, 経済のプリズム, 180호, 2019년 9월, 검색일자: 2022.3.24.; _____, 予算編成過程における「概算要求基準」, 2019년 8월,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_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 검색일자: 2022.3.24.)

□ 출처

일자	발표 내용
2021.7.7	FY2022 예산 개산요구(概算要求) 기준 발표 令和4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1.9.7.	FY2022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및 요망액 발표 令和4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等
2021.11.19.	“코로나 극복·신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경제대책” 발표 コロナ克服・新時代開拓のための経済対策
2021.11.26.	FY2021 제1차 추경예산안 발표 令和3年度補正予算案
2021.12.24.	FY2022 예산 정부안 발표 令和4年度予算政府案
2022.1.17.	FY2022 예산 정부안 관련 추가 발표(특별회계 등) 特別会計について (令和4年1月17日追加)

□ 일본 경제현황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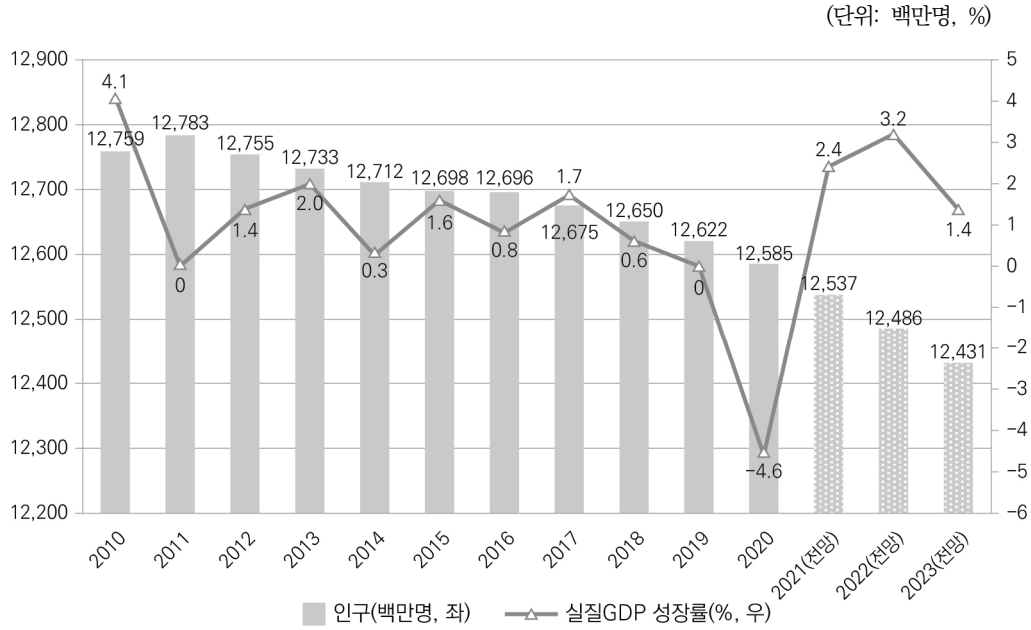
- 환율: 100엔 = 약 0.911달러(2021년도)⁵²⁾
- 경제규모: 2021년 경상GDP 5조 1,031억달러(2021년 실질GDP 성장률 2.4%)
- GDP 대비 수출입 규모의 비율(명목): 2019년 기준 34.9%
- 인구: 1억 2,537만명(2021년 기준)

5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 O/weo-database/2021/October/select-countries?grp=119&sg=All-countries/Advanced-economies/Major-advanced-economies-\(G7\)](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 O/weo-database/2021/October/select-countries?grp=119&sg=All-countries/Advanced-economies/Major-advanced-economies-(G7)), 검색일자: 2022.3.10.

WITS, Trade statistics, <http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jpn>, 검색일자: 2022.3.10.

52) OECD Data, Exchange rates(National currency units/US dollar), <https://data.oecd.org/chart/6DLC>, 검색일자: 2022.3.10.

□ 일본 실질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 검색일자: 2022.3.10.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동향	KIPF 발간 참고자료 ⁵³⁾
2021. 06. 18.	내각부, '경제 재정의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 각의 결정	2021년 상반기 재정동향
2021. 07. 07.	FY2022 예산안 개산요구 기본방침 발표	2021년 하반기 재정동향
2021. 07. 30.	재무성, FY2020 결산개요 발표	
2021. 09. 07.	FY2022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발표	
2021. 11. 19.	내각부, 「코로나 극복·신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경제대책」 발표	
2021. 11. 26.	FY2021 제 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	
2021. 12. 03.	FY202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
2021. 12. 24.	FY2022 정부예산안 발표	2021년 하반기 재정동향

5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list.do?serialNo=0>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재정지원과 함께 소비 회복과 설비 투자에 따른 민간수요 주도 성장, '성장과 분배 선순환'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2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3.2%, 명목GDP 성장률은 3.6%로 전망
- (재정수지) 2022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는 전년도에 비해 -20.3조엔 적자 대비 35.9% 감소한 -13.0조엔을 나타낼 전망
- (국가채무) 2022년도 보통국채 잔고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26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세출 대비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6.6%p 감소한 34.3% 전망

□ 예산기조

- 2022년 예산은 코로나 대유행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함

□ 예산안 내용

- (세입) 회계연도 2022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으로 예상되고, 조세 및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70조 6,350억엔으로 추계됨
- (세출) 회계연도 2022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106조 6,097억엔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으로 편성됨
 - FY2021 1차 추경(31조 5,627억엔)을 2021년 11월에 편성하여 「코로나 극복·신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경제대책」을 뒷받침하고 FY2022 당초 예산과 일체적으로 끊임없는 재정정책을 실행하고자 함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거래 적정화 대책과 사업재생·사업승계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 등과 성장형 중소기업 등 연구개발 지원
- (사회보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지속하며, 2022년 진료보수·약가 개정 등과 간호, 장애 복지, 보육 등 처우 개선을 계획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⁵⁴⁾

- (총평)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등의 단계적 완화로 최근 경제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공급 제약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및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주시할 필요
- (성장률) 2022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3.2%, 명목GDP 성장률은 3.6%로 전망
 - 재정지원과 함께 소비 회복과 설비 투자에 따른 민간수요 주도 성장, ‘성장과 분배 선순환’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
 - (민간최종소비지출) 경제사회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고용·소득환경의 개선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
 - (민간주택투자) 완화적 금융 조건에서 보합세를 보여 전년 대비 약 0.9% 증가
 - (민간기업설비투자) 경제대책 효과와 디지털·그린 전환 촉진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약 5.1% 증가
 - (정부지출) 과거 경제대책들의 시행, 코로나 극복·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에 따른 정부지출, 사회보장관계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일반세출 0.7% 증가(실질 GDP 대비 공적수요 기여도는 0.0% 전망)
 - (해외수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할 전망(해외수요의 실질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전년 대비 약 0.2% 전망)
- (노동·고용) 경제사회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2022년 고용자 수는 전년 대비 0.4% (5,981만명→6,004만명) 증가하고, 완전실업률은 전년의 2.8% 대비 0.4%p 감소한 2.4%로 전망됨
- (광공업 생산)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약 5.0% 증가가 전망됨

54) 내각부, 「2022년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令和4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21.12.23., <https://www5.cao.go.jp/keizai1/mitoshi/mitoshi.html>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01.pdf

□ (물가) 경제회복과 더불어 전년 휴대전화 통신료 인하⁵⁵⁾의 영향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약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0.4% 상승 전망

□ (국제수지) 소득수지⁵⁶⁾ 흑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는 보험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명목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2.8%)

〈표 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대비 %, 조엔)

구분	2020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20		2021		2022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조엔)	535.5	544.9	564.6	-3.9	-4.5	1.7	2.6	3.6	3.2
민간최종소비지출	286.9	293.2	307.3	-5.5	-5.5	2.2	2.5	4.8	4.0
민간주택투자	19.8	21.0	21.5	-7.3	-7.8	5.6	-0.5	2.8	0.9
민간기업설비투자	84.5	88.3	93.4	-7.9	-7.5	4.5	2.5	5.8	5.1
민간재고변동(기여도)	0.1	0.4	0.6	(-0.2)	(-0.2)	(0.1)	(0.0)	(0.0)	(0.0)
재화·서비스 수출	84.1	101.6	109.6	-12.1	-10.5	20.8	11.4	7.9	5.5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84.5	107.5	116.5	-13.4	-6.6	27.2	7.4	8.4	4.1
내수기여도	/			-4.2	-3.9	2.8	2.0	3.8	3.0
민간수요기여도				-4.8	-4.7	2.2	1.7	3.7	3.0
공적수요기여도				0.6	0.8	0.6	0.2	0.1	0.0
외수기여도				0.3	-0.7	-1.0	0.6	-0.2	0.2
국민총소득(GNI)	554.7	566.9	589.0	-4.2	-3.9	2.2	1.4	3.9	3.1

55) 2020년 일본 정부는 3대 대형 이동통신사의 과점을 지적하고, 기업 통신사업 이익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휴대통신 요금(이동통신 대기업 3곳의 종량제 음성통화료는 3분당 120엔(소비세 별도)이 10년이상 바뀌지 않은 점에서 가격인하를 요청했고, 2021년 3월 이동통신사들은 보다 저렴하게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함

56)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되고, 소득수지는 국외에서 발생한 국내 소득의 수령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으로의 소득 지급의 차액으로 임금, 투자소득(이자, 배당금) 등 수취와 지급의 차이를 의미(일본 경제산업성, 我が国における所得収支の動向(일본의 소득수지 동향), 2013, p.2, https://www.meti.go.jp/report/tshuhaku2013/2013honbun_p/pdf/2013_03-03-03.pdf, 검색일자: 2022.4.15.)

〈표 II-1〉의 계속

(단위: 전년대비 %, 조엔)

구분	2020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율					
	실적	추정	전망	2020		2021		2022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노동·고용									
노동력인구	6,863	6,871	6,873	-0.5		0.1		0.0	
취업자수	6,664	6,681	6,705	-1.0		0.3		0.4	
고용자수	5,962	5,981	6,004	-1.0		0.3		0.4	
완전실업률(%)	2.9	2.8	2.4						
생산(%)									
광공업생산지수(증감률)	-9.5	5.7	5.0						
물가(%)									
생산자물가지수(변화율)	-1.4	6.5	2.0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0.2	-0.1	0.9						
GDP디플레이터(변화율)	0.7	-0.8	0.4						
국제수지(조엔)									
무역·서비스수지	0.2	-5.3	-5.8						
무역수지	3.9	-1.4	-3.7						
수출	68.4	83.8	88.7	-8.4		22.5		5.9	
수입	64.4	85.2	92.4	-13.3		32.3		8.5	
경상수지	16.3	13.6	15.2						
명목GDP대비 경상수지(%)	3.0	2.5	2.8						

주: ()안 수치는 GDP 성장 기여도를 의미

출처: 내각부, 「令和4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p1, 2021.12.23., <https://www5.cao.go.jp/keizai1/mitoshi/2021/r031223mitoshi.pdf>

나. 재정 전망⁵⁷⁾

□ (재정수지) 2022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는 전년도의 -20.3조엔 적자 대비 35.9% 감소한 -13.0조엔을 나타낼 전망(〈표 II-2〉 참고)

*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는 (조세수입+기타수입)-(세출총액-채무상환액-이자비용)로 재정통계 국제기준인 국민계정통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중앙정부 기초재정수지와는 다름

○ (세입) 2022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07조 5,964억엔⁵⁸⁾이고, 조세 및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70조 6,350억엔으로 추계됨

○ (세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GDP 대비 19.1%)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83.7조엔(GDP 대비 14.8%)으로 전망

* 채무상환비와 이자지급비로 구성

**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채무상환비와 이자지급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 (국채) 세출 대비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6.6%p 감소한 34.3%로 전망

□ (국가채무) 2022년도 보통국채 잔고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26조엔을 나타낼 전망(〈참고 II-1〉 일본 보통국채 참고)

○ GDP 대비 보통국채 잔고는 전년 대비 2%p 감소한 181.8%로 전망되며, 지방채 등을 포함할 경우 전년 대비 4%p 감소한 220% 규모로 전망

57)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 2021.12.,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04.pdf

_____,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01.pdf

58) 일본은 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로 경상수입으로 정부의 지출을 충당하여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편성함

〈표 II-2〉 일본의 FY2022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¹⁾

(단위: 조엔, %)

구분	FY2016	FY2017	FY2018	FY2019	FY2020	FY2021	FY2022 (정부안)
일반회계 세출							
일반세출 ²⁾	57.8	58.4	58.9	62.0	63.5	66.9	67.3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³⁾	73.1	73.9	74.4	77.9	79.3	82.3	83.7
GDP 대비 %	13.6	13.5	13.5	14.0	13.9	14.7	14.8
일반회계 세출총액	96.7	97.5	97.7	101.5	102.7	106.6	107.5
GDP 대비 %	17.8	17.5	17.6	18.2	19.2	19.6	19.1
일반회계 세입							
조세	57.6	57.7	59.1	62.5	63.5	57.4	65.2
GDP 대비 %	10.6	10.4	10.6	11.2	11.9	10.5	11.6
기타수입	4.69	5.37	4.94	6.30	6.59	5.56	5.43
조세 + 기타수입	62.3	63.1	64.0	68.8	70.1	63.0	70.6
GDP 대비 %	11.4	11.4	11.5	12.3	13.1	11.6	12.5
국채발행 수입	34.4	34.4	33.7	32.7	32.6	43.6	36.9
세입총액	96.7	97.5	97.7	101.5	102.7	106.6	107.5
국채잔고							
GDP 대비 %	152.4	153.5	157.1	159.1	176.8	184.3	181.8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잔고							
GDP 대비 %	194	194	197	198	218	224	220
기초재정수지 ⁴⁾	-10.8	-10.8	-10.4	-9.1	-9.2	-19.3	-13.1
국채의존도 ⁵⁾	35.6	35.3	34.5	32.2	31.7	40.9	34.3

주: 1) 당초예산기준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이자지급비와 채무상환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4)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 조세 + 기타수입 -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5) 국채의존도 = 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

출처: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令和4年度予算政府案)」, 2021.12., pp. 6, 9~10

2 예산기조

□ FY202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2021.12.3.)⁵⁹⁾

- 2022년 예산은 코로나 대유행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함
 - (코로나 대응) 의료 및 검사체계 확보, 변이를 포함한 새로운 위험 대비를 위해 백신·치료약 등의 연구개발, 고용·사업·생활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
 - (경제 재건) 경제·재정 운영의 최대 목표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지출은 주저없이 지원하면서 재정건전화 노력도 지속함
 - (성장) ①과학기술국 실현, ②지방을 활성화하고 세계와 연결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③경제안전보장의 3대 핵심 성장전략을 국가 주도로 추진
 - (분배) 최저임금 인상 촉진, 간호·개호⁶⁰⁾·보육 등 공적 사회보장 기본방향 근본적인 재검토, 저출산 대책 등 지속가능한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구축
-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각지의 재해로부터 부흥과 방재, 국토 강인화 등을 추진하고, 현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해 국가 안전보장을 확실히 확보
-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2021.6.18.)^{*}의 2022년 예산편성 방향을 토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감안한 신축성 있는 예산운용
 -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세출개혁 노력 유지. 사회보장 관련 경비는 고령화 증가분만큼 실질 증가율 설정. 비사회보장 관련 경비는 경제·물가 동향 등을 감안한 세출개혁 지속, 지방 세출은 2021년 지방재정계획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유지함
 - 2021년 추경과 2022년 당초 예산을 연계하여 '16개월 예산'의 개념으로 편성
 - 단년도 기준 예산 운용의 폐해 시정을 위해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금 창설 등 조치를 취하며, 증거기반정책수립(EBPM⁶¹⁾)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재정 운용

59) 내각부, 「令和4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21.12.3.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1/r4_yosanhensei.pdf, 검색일자: 2022.3.4

60) 일본 고령화에 따른 간병

61) 증거기반정책수립(EBPM(Evidence-based Policy Making))은 통계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

□ FY2022 예산의 주요 내용 (2021.12.24.)⁶²⁾

- FY2022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성장 및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예산의 질 향상’을 중점으로 함
- (감염 확산 방지) FY2021 1차 추경의 의료체제 강화, 백신접종 지원, 치료제 확보 등 조치를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코로나 예비비 5조엔 편성
- (성장) “과학기술국” 도약을 목표로 과학기술 진흥비(1조 3,788억엔)를 확보하고, 디지털 전원 도시국가 실현, 양자 암호통신 등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 (연구개발) 「과학기술입국(立國)」 측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진흥비를 확보하고, 디지털, 그린, 양자, AI, 우주, 차세대 반도체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박사과정 학생 지원을 내실화하도록 함
 - (디지털) 「디지털 전원 도시국가 구상^{*}」 실현을 위해서 디지털청에 정보 시스템 관련 예산의 일괄 계상 등 추진에 4,720억엔 지원
 - *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개성을 살린 지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에서 국가 전체로의 상향식 성장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계획. 주요 세부 정책으로 ①지자체 디지털 인프라 통일·표준화, ②디지털 인재 육성, ③디지털을 활용한 지역 과제 해결·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 추진, ④연령·성별·지리적인 제약 등과 관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및 활용 지원으로 구성
 - 지방교부금 1,660억엔(FY2021년도 추경 포함)을 통해 지자체에 의한 디지털기술 구현을 지원
 - (보안기술) 「경제안전보장」을 위해 양자 암호통신 연구개발 추진과 중요 기술의 관리체제, 사이버 보안 등을 강화하고 관련 싱크탱크 구축을 촉진
 - (교육) 초등학교 고학년의 과학, 수학 등 교과목에 ‘교과중심 교원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 집중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과학 교육 강화(174억엔)

62)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政府案 -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index.html

_____, 令和4年度予算及び財政投融资計画の説明, 2022.1.17.,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y030118.html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22.1.14.,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html>

- (분배전략) 의료종사자 처우 개선, 인적자원 투자 증대,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 (의료 종사자) 코로나 의료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의 간호직, 개호⁶³⁾, 보육, 유아 교육 등의 종사자 급여 3% 인상
 - (인재 육성) 3년간 4,000억엔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위한 인력투자 추진(노동보험 특별회계 1,019억엔)
 - 디지털 등 성장분야를 지원할 인재육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원활한 노동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함
 - (노동 환경 개선) 하청 왕따 제로 등을 실현하기 위해, 하청 G멘⁶⁴⁾을 2배 증원 (120→248명)하고, 전국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공청회 등 감독체제 강화
- (탄력적인 예산⁶⁵⁾) 「골태방침 2021」⁶⁶⁾에서 결정된 재정정책의 기초를 지속하며, 동시에 예산의 단년도주의 폐해 시정⁶⁷⁾ 등 예산의 질 향상
 - 사회보장관계비 + 약 4,400억엔(고령화에 의한 증가분), 비사회보장관계비 + 330억엔(지금까지의 지출개혁 계속)
 - 신규 국채 발행액 감액(FY2021 당초 43.6조엔→FY2022 36.9조엔)

63) 介護, 간병·케어의 일본식 표현

64) 2017년 1월부터 중기청에서 파견하는 거래조사원으로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청 중소기업자를 방문하여 의견을 취합, 정부 기준 개정에 반영함

65) 이전 연도까지의 예산안에서는 “세출 개혁”이었으나, 올해 예산안에서 “탄력적인 예산”으로 변경함

66) 골태방침(骨太の方針; Basic Policy on Economic and Fiscal Management and Reform)은 일본 정부가 작성하는 재정이나 경제정책의 기본 운영방침의 통칭

67) ①약 2.1조엔의 신규 국고채무 부담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시기를 평준화하고, 주요 인프라의 수년에 걸친 계획적이고 원활한 정비를 지원함 ②지역 데이터센터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개발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 자금을 사전에 확보(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55억엔), ③과학기술과 경제안보 분야는 사업의 성질을 고려하여 기금을 활용하는 등 복수년도에 걸친 지원 실시(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기술 육성을 위한 신규 기금 조성(약 2,500억엔), 첨단 반도체 생산 인프라 개발을 위한 신규 기금 조성(약 6,200억엔), 백신 개발 강화를 위한 기금(약 7,400억엔))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회계연도 2022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으로 전망
 - (조세 및 인지수입⁶⁸⁾) 전년 당초 예산 57조 4,480억엔 대비 13.6% 증가한 65조 2,350억엔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조세 및 인지수입 비율은 11.6%로 전망(〈표 II-3〉 참고)
 - 전년 당초 예산 대비 법인세는 48.2% 감소하였으며, 국제관광여행객세는 300억엔에서 90억엔으로 70%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음(〈표 II-4〉 참고)
 - 석유가스세와 상속세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각각 25%, 17.5%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석유가스세 40억엔→50억엔, 상속세 2조 2,290억엔→2조 6,190억엔)
 -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일반회계 통상분 기준 전년 당초 예산 5조 5,647억엔 대비 2.3% 감소한 5조 4,354억엔으로 전망
 - (국채발행액) 국채발행액은 전년 당초예산 43조 5,970억엔 대비 15.3% 감소한 36조 9,260억엔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체 세출 대비 국채의존도는 전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6.6%p 감소한 34.3%로 전망

68) 재무성, 「令和4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21.12.24.

〈표 II-3〉 일본의 FY202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

구 분		FY2021 당초(A)	FY2022 정부안(B) ¹⁾	증감액 (B-A)	증감률 (B/A-1)
세 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574,480	652,350	77,870	13.6
	2. 기타 수입	55,647	54,354	-1,293	-2.3
	3. 공채금(세출과 세수 등과의 차이)	435,970	369,260	-66,710	-15.3
	(1) 채무상환비 상당분 (교부 국채분 제외)	147,317	156,325	9,008	6.1
	(2) 이자지급비용 상당분	85,036	82,472	-2,563	-3.0
	(3) 정책적 지출에 의한 적자(기초적 재정수지적자) 상당분	203,617	130,462	-73,155	-35.9
	합계	1,066,097	1,075,964	9,867	0.9
세 출	1. 일반세출	669,023	673,746	4,723	0.7
	(1) 사회보장관계비	358,343	362,735	4,393	1.2
	(2) 사회보장관계비 외	260,681	261,011	330	0.1
	(3)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예비비	50,000	50,000	-	순증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59,489	158,825	-664	-0.4
	3. 국채비	237,585	243,393	5,808	2.4
	(1) 중 채무상환비(교부 국채 제외)	147,317	156,325	9,008	6.1
	(2) 중 이자지급비용	85,036	82,472	-2,563	-3.0
	소계	1,066,097	1,075,964	9,867	0.9
	4. 임시·특별 조치에 의한 일반세출	17,788	-	-17,788	순감
합계	1,026,580	1,066,097	39,517	3.8	

주: 1.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채금 분류는 기초적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직접 채무상환비 및 이자지급비용에 충당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분」으로 표현

1) '사회보장관계비', '사회보장관계비 외' FY2021예산은 FY2022 예산과 비교대조를 위해 재계산

출처: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_____, 「令和4年度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 2021.12.24.

〈표 II-4〉 일본의 FY2022 일반회계 조세 및 인지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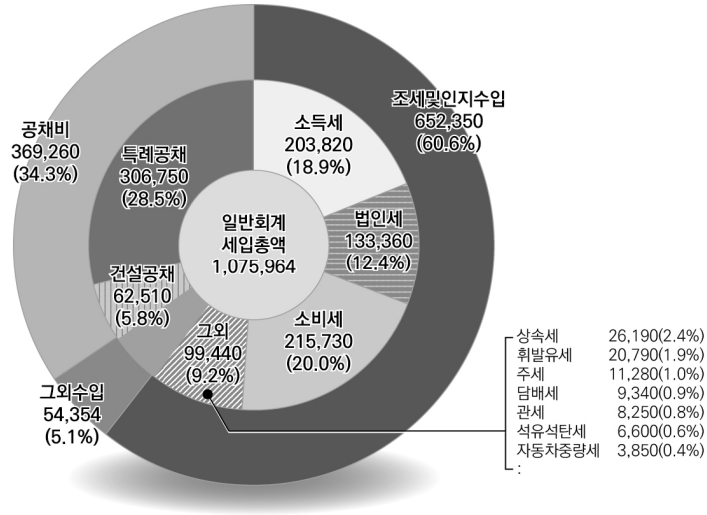
(단위: 억엔, %)

세목 (일반회계)	FY2021		FY2022	전년대비			
	(당초)예산 (A)	추경 후 (B)	예산안 (C)	(당초)예산 대비 (C-A)	증감률	추경 후 예산 대비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57,440	167,390	170,840	13,400	8.5	3,450	2.0
신고소득세	29,230	32,880	32,980	3,750	12.8	100	0.3
(소득세 계)	(-186,670)	(-200,270)	(-203,820)	(-17,150)	(9.2)	(-3,550)	(1.7)
법인세	89,970	128,870	133,360	-43,390	-48.2	4,490	3.4
상속세	22,290	25,550	26,190	3,900	17.5	640	2.4
소비세	202,840	211,080	215,730	12,890	6.4	4,650	2.2
주세	11,760	11,760	11,280	-480	-4.1	-480	-4.3
담배세	9,120	9,120	9,340	220	2.4	220	2.4
휘발유세	20,700	21,280	20,790	90	0.4	-490	-2.4
석유가스세	40	40	50	10	25.0	10	20.0
항공기연료세	370	370	340	-30	-8.1	-30	-8.8
석유석탄세	6,060	6,060	6,600	540	8.9	540	8.2
전원개발촉진세	3,050	3,050	3,130	80	2.6	80	2.6
자동차증량세	3,820	3,820	3,850	30	0.8	30	0.8
국제관광여객세	300	40	90	-210	-70.0	50	55.6
관 세	8,460	8,460	8,250	-210	-2.5	-210	-2.5
톤 세 ¹⁾	90	90	90	0	0.0	0	0.0
인지수입	8,940	8,940	9,940	500	5.6	500	5.0
합 계	574,480	638,800	652,350	77,870	13.6	13,550	2.1

주: 1) 외국무역선 입항 시 무역선의 톤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으로 납부
출처: 재무성, 「令和4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21.12.24.

[그림 II-1] 일본의 FY2021 일반회계 세입 구성

(단위: 억엔, %)



출처: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p10, 2021.12.24.

나. 세출⁶⁹⁾

- (일반회계) 회계연도 2022년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106조 6,097억엔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으로 편성됨(〈표 II-3〉 참고)
 - (일반세출) 전년대비 0.7% 증가한 67조 3,746억엔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대책 예비비 5조엔 편성
 - (국채비) 전년대비 2.4% 증가한 24조 3,393억엔 편성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 당초예산 15조 9,489억엔 대비 0.4% 감소한 15조 8,825억엔 편성

69)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_____, 「令和4年度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 2021.12.24.

-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467.3조엔으로 회계 간 이전을 제외한 순계액은 218.5조엔 규모
 - 세출 순계액의 대부분은 국채상환비⁷⁰⁾(92.9조엔), 사회보장급부비⁷¹⁾(73.6조엔), 재정용자 자금으로 편입(재투채⁷²⁾에 의한 자금조달(25조엔), 지방교부세교부금(19.8조엔) 등에 사용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7.3조엔
 - 동일본대지진부흥경비 0.7조엔을 제외하면 총 6.6조엔이고, 이 중 50%는 보험사업, 20%는 에너지대책에 사용되며, 재원은 일반회계 편입이 1.3조엔(특정재원의 일반회계 경유 편입을 포함), 나머지는 그 외 세입(보험료 등)으로 조달

- FY2022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회보장관계비의 전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가율이 1.2%로 가장 높았으며, 연금관계비의 전년 대비 감소율(-15.7%)이 가장 높았음(〈표 II-5〉 참고)
 - (사회보장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가장 큰 비중(33.7%)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는 전년 대비 4,393억엔(1.2%) 증가한 36조 2,735억엔 규모(〈표 II-5〉, [그림 II-2] 참고)
 - (공공사업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6%를 차지하는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 대비 542억엔 증가한 5조 575억엔 규모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일반회계 세출 중 5.0%를 차지하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전년 대비 24억엔 감소한 5조 3,901억엔으로 편성
 -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는 전년 대비 150억엔(1.3%) 증가한 1조 3,788억엔 규모
 - (방위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0%를 차지하는 방위관계비는 전년 대비 542억엔(1.0%) 증가한 5조 3,687억엔 규모

70) 국채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불에 필요한 비용

71) 연금이나 건강 보험 급여비 등 법률에 근거하는 사회보장 자체에 드는 비용

72) 財投債, 재정용자자금의 운용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국채. 재투채 발행 수입은 '재정용자특별회계 재정용자자금 계정'의 세입의 일부가 되며, 세출로 재정용자자금으로 이월됨. 발행한도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으며 상품성 또한 일반 국채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재정용자자금의 대부 재원이 되는 동시에 상환이 재정용자자금의 대출 회수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의 세출 재원이 되고, 상환이 조세 등으로 충당되는 일반 국채와는 다름. 또한 재투채는 국민계정의 일반정부 부채로 분류되지 않으며 국가 및 지방의 장기 채무 잔고에도 포함되지 않음

-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예비비)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FY2022에도 코로나 예비비 5조엔을 편성

〈표 II-5〉 일본의 FY2022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분	FY2021 ¹⁾ (A)	FY2022 (B)	증감액 (B-A)	증감률 (%)
일반세출²⁾	669,023	673,746	4,723	0.7
사회보장관계비	358,343	362,735	4,393	1.2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925	53,901	-24	0.0
(과학기술진흥비)	13,638	13,788	150	1.1
연금관계비	1,450	1,221	-228	-15.7
방위관계비	53,145	53,687	542	1.0
공공사업관계비	60,549	60,575	26	0.0
경제협력비	5,108	5,105	-3	-0.1
ODA	5,599	5,612	12	0.2
중소기업대책비	1,726	1,713	-13	-0.8
에너지대책비	8,891	8,756	-135	-1.5
식품안정공급관계비	12,723	12,701	-21	-0.2
기타 경비	58,164	58,350	186	0.3
예비비	5,000	5,000	-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예비비	50,000	50,000	-	-
국채비	237,585	243,393	5,808	2.4
지방교부세교부금	159,489	158,825	-664	-0.4
합계³⁾	1,066,097	1,075,964	9,867	0.9

주: 1) FY2021 예산은 FY2022 예산과 비교·대조를 위해 재조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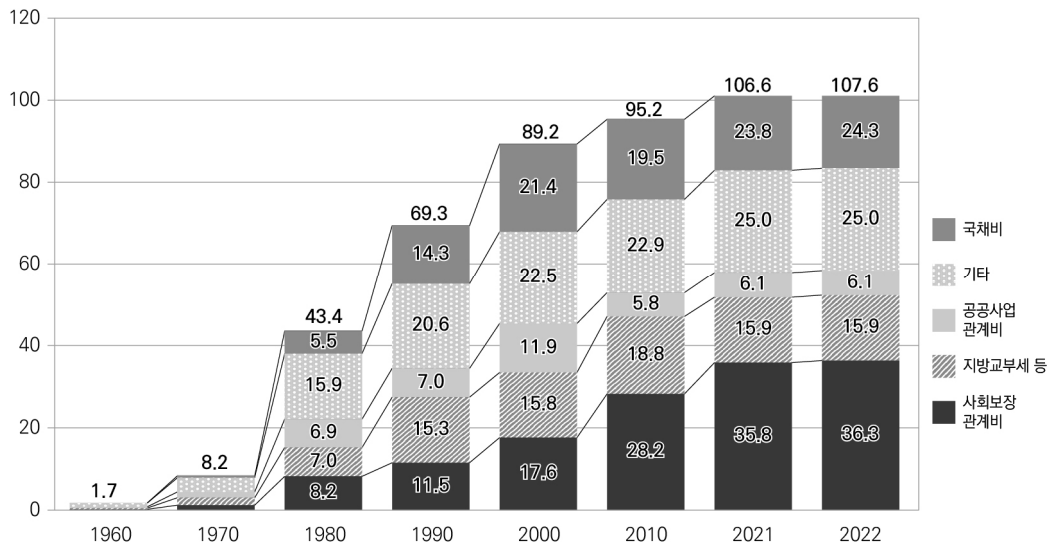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1.12.24.

[그림 II-2] 일본의 일반회계 주요경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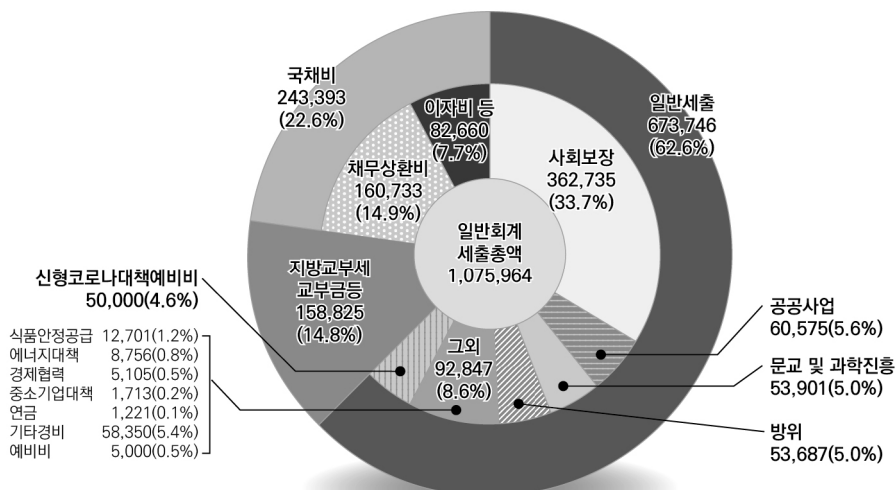
(단위: 조엔)



주: 2010년까지는 결산, 2021년 당초 예산, 2022년 정부안
출처: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令和4年度予算政府案)」, 2021.12.

[그림 II-3] 일본의 FY2022 일반회계 세출 구성

(단위: 억엔, %)



출처: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のポイント」, p10, 2021.12.24.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 (기업) 거래 적정화 대책과 사업재생·사업승계 지원에 주요 예산을 편성하고,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 등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과제 대응 지원
 - 중소기업 대책비는 전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3억엔 감소한 1,713억엔 규모로 편성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동향 등을 기초로 정책 금융에 필요한 경비 54억엔 감액(다른 정책 경비는 41억엔 증가)
 - 거래 적정화 대책으로 하청 왕따 제로 등을 위해 하청 G멘⁷³⁾을 2배 증원(120→248명)⁷⁴⁾
 - 생산성 향상 지원 측면에서 성장형 중소기업 등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104.9억엔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연계강화에 10.2억엔 지원
 - (연구개발) 산학관 제휴를 통한 중소기업의 고도 기반기술 및 서비스 모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성과 교류 및 판로 확대 기회 제공
 - (연계강화) 제조업 등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와 연계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에 지원
- (에너지 대책)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안정적 확보 등을 추진
 -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⁷⁵⁾ 실현을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최대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안정적 확보에 힘써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함

73) 2017년 1월부터 중기청에서 파견하는 거래조사원으로 비밀유지를 전제로 대기업 등 발주처와 수주를 맡은 하청 중소기업 등 사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취합하여 정부 기준 개정에 반영함(일본 중소기업청, 取引調査員(下請Gメン)による訪問調査について, <https://www.chusho.meti.go.jp/keiei/torihiki/Gmenhoumon.htm>, 검색일자: 2022.4.15.)

74) 織研新聞社, 経産省 下請け取引適正化促進へ専門調査員を大幅増員, <https://senken.co.jp/posts/meti-220407>, 검색일자: 2022.4.15.

75) 2050년 탄소중립 달성(2020년10월 표명), 2030년 46% 삭감, 더 나아가 50%로 새롭게 설정한 목표(2021년 4월 표명)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일본 에너지 안정 공급,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구성됨(2021년 10월 22일 각의 결정)

- 재생가능에너지 혹은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설비 등의 도입,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개발, 석유비축의 유지 및 생산·유통 합리화, 원자력 방재 정비 등을 추진
- (농림·수산) 농림·수산업 강화를 위해 수출 지원,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구축, 수산업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할 예정
 - 농림·수산물 수출 5조엔 달성을 목표로 수출 증점 품목과 수출 대상 국가·지역을 선정·지원하고, 관민 제휴를 통한 판로 개척, 수출 산지·사업자 지원 등 추진 (107.9억엔)
 -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탈탄소 등 환경부담 감소에 이바지하는 기반기술을 개발하고(34.7억엔), 화학 농약·비료 사용량 저감(26.5억엔) 등 추진
 - 수자원 관리 어업자의 경영 안정 대책(201.9억엔) 등을 실시하고, 어선어업이나 양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20억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실시함
- (교육·과학기술) 과학기술국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박사과정 학생 등 인재 육성, 초등학생 산수 등 교과외 교원 집중 향상 지원, 대학개혁 등을 계획
 - (중점 연구) 과학기술국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진흥에 1조 3,788억엔을 편성하고, 디지털, 녹색 투자, AI, 우주, 차세대 반도체 등의 연구개발을 추진
 - 양자 컴퓨터와 양자 기술 활용 등 연구개발에 37억엔 지원
 - AI 등 활용, 데이터 플랫폼 연계를 통한 연구데이터 공유 및 구동 10억엔
 - 차세대 반도체 개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9억엔 편성
 - 우주·항공 분야 대형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1,558억엔 투자
 - (연구력 향상) 박사과정 학생 처우와 연구환경 개선에 34억엔 지원하고, 인재 육성(전년 대비 약 1천명 확충) 및 연구비 지원에 2,377억엔 편성
 - (의무교육) 초등학교 고학년의 이과·산수 등 교과외 교과담당제를 추진하고, 교원이 수업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보습, 학습 지도원 배치 등 외부 자원 활용(174억엔)

- 초등·중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시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공공 CBT플랫폼⁷⁶⁾ 구축을 추진
- (고등교육) 2020년부터 고등교육 무상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법인 운영비 교부금 1조 786억엔을 편성하고, 연구 실적 등 개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나. 안전·재해 예방 및 사회보장

- (외교·방위) 전략적 외교를 위한 증원 등 체제 보강과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 대응과 기후변화 대책을 중점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며, 국제 정세를 감안하여 처음으로 5.4조엔 방위 예산 확보
 - (공적개발원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개발·협력,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⁷⁷⁾ 구체화를 위한 협력에 중점적으로 예산 배분(일반회계 ODA 예산 5,612억엔, 전년 대비 12억엔 증가)
 - (외교) 전략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일본 대외 홍보 강화 511억엔(전년 485억엔), 대사관·영사 사무실 신설과 외무성 증원(74명 순증, 정원 6,500명 초과) 등 추진
 - (방위) 주변국 군사력 강화와 일·미동맹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 등 요구를 고려하고, 미사일·어뢰 등 중요 무기 확보,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 위협대응 등을 위해 처음으로 5.4조엔을 초과하는 5조 4,005억엔 방위예산 편성
 - (경찰) 사이버 위협 대처를 위해 사이버대응 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제 정비(37.9억엔), 국제 테러 대비와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사태 대응(62억엔),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 증가에 교통안전 확보 지원(204.4억엔)

76) 문부과학성에서 학생 1인 1대 단말기를 활용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문제를 통해 온라인 학습·평가할 수 있도록 함

77) 인도양과 태평양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더욱 연결시키고, 두 해양 중심에 위치한 ASEAN과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고자하는 전략으로 범치주의, 항해의 자유, 자유무역 등을 보급·정착시키고, 인프라 정비와 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경제번영을 추구하고, 인도적 지원과 테러·해적 대책 등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확보 등을 추진(재무성,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ree and Open Indo-Pacific), <https://www.mofa.go.jp/files/000430631.pdf>, 검색일자: 2022.3.28.)

- (사회보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지속하며, 2022년 진료보수·약가 개정 등과 간호, 장애 복지, 보육 등 처우 개선을 계획
 - 전년 진료보수·약가 개정 등과 함께 사회보장관계비는 고령화에 의한 증가분만 허용하도록 한 방침을 꾸준히 달성
 - (진료보수) 간호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불임치료의 보험 적용, 특정 조건 만족 시 동일 처방전 반복 사용 허용(약 처방만을 위한 진료 감소 목적)하여 국민보험료 부담을 억제(진료보수 개정률 0.43%, 국비 292억엔)
 - 신종 코로나 의료 대응 등 관련 의료기관 간호 종사자, 개호·장애 복지 직원, 보육 교사 등에 대해 2019년 10월 이후 수입 3% 인상 조치
 - 불임치료 보험적용 120억엔, 불임치료 의약품비 54억엔 지원
 - (약가 개정) 의약품의 시장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실제 가격(실제 매매 가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약가 개정률 -1.37%로 설정(국비 1,570억엔 감소)
 - (고용 보험) 실업보험 등 국고 부담에 대해 현행 부담비율을 유지하고, 일반회계를 임의 이월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며,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 고용사정이나 고용보험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 부담 비율을 책정
 - (코로나 대응) 2021년 추경과 2022년 예산을 일체화하여 16개월 예산으로 운영하며, 보건소 인원·체제 강화 등 6.4억엔, 국립국제의료센터 지원 14.3억엔 등

다. 지역 발전·창생⁷⁸⁾

- (공공사업) 소프트웨어 측면의 방재·감재 대책을 강화하고, 노후화 시설에 신기술을 활용하며, 인구 감소에 대응한 광역 집약적 네트워크 등을 추진
 - 방재·감재를 위해 제도·운영 등 소프트웨어를 강화, 노후화 시설에 신기술의 활용을 주요 방향으로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관련 예산으로 3조 8,736억엔(전년 대비 1,144억엔 증액) 편성

78)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화 추진, 경제발전 지원, 청년 고용 기회 증대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활력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해나가고자 함(거리·사람·일자리 창생기본방침 2021(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 2021.6.18.)

- 인구 감소에 대응한 광역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 수준의 집약 시설 정비 설치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광역 콤팩트 플러스 네트워크’의 추진, 인프라 정비를 통해 생산성 향상·성장력 강화
 -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영향을 받은 관광업, 지역 대중교통, 항공 분야에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DX(Digital transformation)추진, 성장 투자, 경영 지속가능성 확보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
 - 단년도 기준 예산 운용의 폐해⁷⁹⁾에 따른 연계성 부족과 건설 현장의 생산성 현상을 위해 신규 국고 채무 부담 약 2.1조원을 통해 시공 시기의 평준화·시공 효율화를 도모하고, 여러 해에 걸친 중요 인프라의 계획적인 정비를 지원
- (지방활성화)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방 활성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실행
- 지방공공단체가 개별적으로 발주·유지·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국가 기준 표준화와 행정 클라우드⁸⁰⁾로의 이전을 계속 추진(4.7억엔)
 - 도시로부터 지방으로의 인재 이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활거점을 옮긴 ‘지역 부흥 협력대원’⁸¹⁾이 지역 브랜드나 제품개발·판매, 주민지원 등 지역 협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정주·정착을 도모함(2.4억엔)
 - 2020년 5,560명에서 2024년 8천명 목표
- (지방재정) 2021년 골태방침을 근거로 국가 일반세출 기조에 맞추면서 안정적 재정은 영에 필요한 일반재원을 2021년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동 수준으로 확보

79)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적용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세출은 금년도 세입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금년도의 세출을 다음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거나, 과거의 세입을 올해 세출로 충당하는 것을 막음. 그러나 이러한 단년도주의는 예산 집행의 유연성 및 연속성이 낮아 차년도 이월 등 예외를 인정함

80) 디지털 정부 실행 계획(2020년 12월 25일 각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클라우드(인터넷 가상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운용)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추진

81)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및 정착을 위해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총무성 기준 대원 1명당 480만 엔 상한(지자체별로 다름)으로 재정 지원하고, 임기는 1년 이상 3년 미만

- (부흥) 「제2기 부흥·창생 기간⁸²⁾」 두 번째 해로 부흥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5,790억엔 계상
 - 재해 피해자 대상 의료케어, 커뮤니티 형성 등 종합적인 지원에 11억엔을 편성하고, 후쿠시마 장기 피난자 지원으로 조기 귀환 및 이주·정주 지원 701억엔
 - 신규 사업으로 동일본 대지진 부흥의 ‘창조적 부흥의 핵심 거점’으로 국제 교육 연구 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25억엔 편성

라. 예산 효율화 및 질 향상

- 예산편성 PDCA⁸³⁾ 사이클을 통해 국회 지적사항, 예산집행 조사, 정책평가 결과를 반영
 - (지적사항 반영) 국회결산심의 내용과 회계감사원의 지적 등을 반영
 - 예시로 국회결산 지적사항인 취업이 어려운 세대의 정규 고용 지원 사업인 헬로 워크의 인원을 증원(1억엔)
 - 회계감사원의 중산간 지역 등 직접 지불 교부금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 개정에 따른 교부 면적 감소분을 반영(-3억엔)
 -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고액 예산 사업의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석유관리 등 위탁비 -6억엔)
 - (예산집행 조사) 2021년 예산집행의 필요성·유효성·효율성 기준 조사(39건) 결과를 반영함
 - (예시) CO₂ 배출감소 대책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폐지(-66억엔)

82)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기본방침」을 기본으로 ‘재해지역의 자립으로 지방 창생 모델이 될 수 있는 부흥을 실현해 나간다’는 ‘제1기 복구·창생기간(2016~2020년)’의 이념을 계승해 실현을 위한 노력을 더 앞으로 나아가 할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2021년도부터 5년간을 ‘제2기 부흥·교정 기간’으로 규정

83) PDCA(Plan-Do-Check-Act)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예산 관리 방법으로 계획(Plan)하고 계획한 대로 집행(Do)하며 피드백(Check& Act)을 반영하는 것을 뜻함. 피드백 단계에서 국회결산심의, 예산집행조사, 정책평가 등을 반영

- (정책결과 반영) 각 행정기관의 정책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
 - (예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근로방식 개혁 사업'의 근로방식 개혁 추진 지원센터의 컨설팅 기능을 전국 센터에서 도도부현 센터로 집약화·중점화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예산 효율화 도모(-23억엔)
- (디지털 추진) 각 부처의 LAN·네트워크 환경에서 부처 간 네트워크(GSS: Government solution service)를 구축하여 고속·대용량의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하도록 함
 - 등기 정보 데이터베이스 거점을 현재 4개에서 1개로 집약하여 기기 임차료 및 보수 비용, 운용 지원 및 유지보수 경비를 절감(2025년부터 5년간 24억엔 감소)
- (단년도 기준 예산 운용의 폐해 시정) 공공사업의 국고채무 부담을 신규로 2.1조엔 설정하여 기간 평준화를 도모하고, 여러 년도에 걸친 중요 인프라의 계획적인 실행을 가능케 함
 - 다년도 집행 사업인 데이터센터 지방 입지 촉진을 위한 기반정비사업 실시를 위해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활용하여 미리 필요한 사업금액을 확보함(2022~2025년 455억엔)
 -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을 위한 기금 신설 약 2,500억엔, 첨단 반도체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기금 신설 약 6,200억엔, 백신개발·생산을 위한 기금 활용 (약 7,400억엔)

〈참고 II-1〉 일본 보통국채⁸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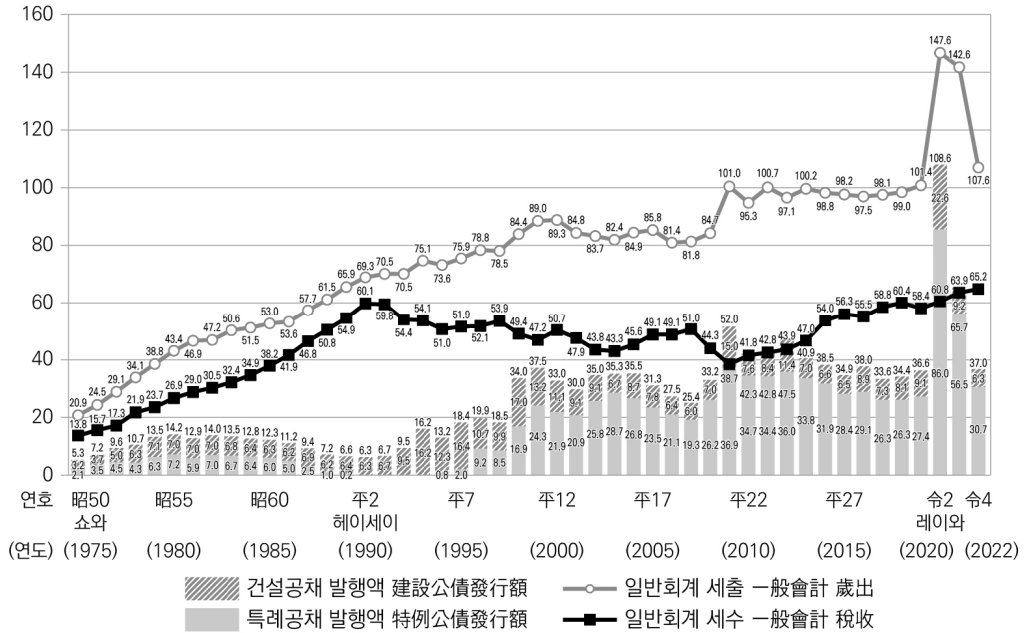
- 일본의 보통국채 종류는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 재원 목적의 '건설공채'와 공공사업비 외 목적의 '특례공채', 이외 '부흥채', '차환채'가 있음
 - (건설공채) 재정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 재원을 목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내에서 발행하는 국채
 - 연도별 상환 예정 금액을 제시하고 상환 방법·상환 기한을 밝혀 상환계획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 일본 재정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나라의 세출은 공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으로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례공채) 건설공채를 발행해도 여전히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공사업비 이외의 세출 목적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그 성질에서 "적자 국채"라고 불리기도 함
 - 국회 심의에서 건설 공채와 마찬가지로 상환계획표를 제출
 - (부흥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하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함
 - 각 연도 예산을 국회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함
 - 다른 공채 상환과는 달리 매년도 예상되는 정부 보유 주식처분 소득, 부흥 특별 세 수입을 순차적으로 상환에 사용하고 2037년까지 상환하도록 함
 - (차환채) 보통국채의 경우 60년 상환 규칙에 근거하여 상환액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

84) 출처: 일본 재무성, 赤字国債と建設国債の違いを教えてください, <https://www.mof.go.jp/faq/budget/01aa.htm>, 검색일자: 2022.4.12.

□ 보통국채 이외 국채에는 주로 재정용자 대출에서 회수금으로 조달되는 재정투용자 특별회계국채와 출자·출연 국채, 교부국채 등이 있음

〈 일본의 일반회계 세수·세출총액 및 공채 발행액 추이 〉

(단위: 조엔)



III. 독일

□ FY2022: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출처: 연방 재무부, 경제기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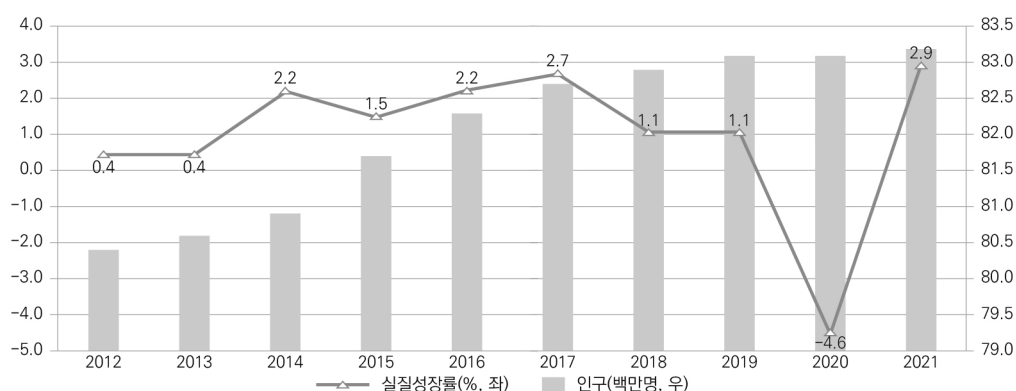
- Finanzplan des Bundes 2021 bis 2025, 2021. 8.
- Finanzbericht 2022, 2021. 8.
-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2021. 10.
- Frühjahrsprojektion 2021, 2021. 4.
- Herbstprojektion 2021, 2021. 10.
- Zweiten Regierungsentwurf des Bundeshaushalts 2022, 2022. 3.
- Jahreswirtschaftsbericht 2022, 2022. 1.

□ 환율: 1유로 = 1,352.79(2021년 평균)⁸⁵⁾

□ 경제규모: 2021년 경상 GDP 4조2,231억달러(2021년 기준, OECD)⁸⁶⁾

□ 인구: 8,319만명(2021년 기준, OECD)

□ GDP 및 인구 추이



출처 : OECD Stat, National Accounts(<https://stats.oecd.org/>, 추출일: 2022.6.7.)

8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https://ecos.bok.or.kr/>, 추출일: 2022.6.7.)

86) OECD Stat, National Accounts, GDP CXC: Current prices, current exchange rates 기준 (<https://stats.oecd.org/>, 추출일: 2022.6.7.)

[요 약]

1. FY2022 1차 예산안(2021.6.23.)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성장) 2021년 가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6%, 2022년 4.1%, 2023년 1.6%로 전망
- (재정 전망) 코로나19 지원 조치 만료 등으로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19.1% 감소할 전망이며, 2021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7.25%를 기록한 후 2025년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예산기조) 미래를 위한 투자 강화, 기후변화, 국제적 책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 연간 약 510억유로 규모의 투자지출 유지 전망

□ 예산안 내용

- (수입) 2022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4,430억유로로 전망되며, 조세수입 3,152억유로, 신규차입 997억유로로 편성
- (지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2021년 대비 19.1% 감소한 4,430억유로로 전망되며, 주로 팬데믹 대응 및 단기 경제안정화 조치 만료 등에 기인

□ 주요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독일 정부는 2023년부터 연간 약 20억유로의 상환을 시작으로 초과차입금 상환 계획 수립
- (기후보호) 2022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추가 80억유로를 배정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주요투자정책) 2022년 연방예산 투자지출은 약 518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교통, 주택, 교육·연구, 디지털화, 환경보호, 개발원조 등에 우선 투자 계획

2. FY2022 2차 예산안(2022.3.16.)

- 2021년 6월 발표된 연방정부 1차 예산안은 2021년 9월 연방선거로 인하여 의회가 승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새 연방정부가 작성한 2차 예산안이 2022년 3월 발표됨
 - 2022년 6월 연방 하원을 통과할 예정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경제 전망) 2022년 1월 연간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2)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경제 전망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영향 및 제재는 반영되지 않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크게 증가
- (재정 전망) 2020년과 2021년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재정적, 사회적 영향을 완화시키며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하기 위하여 신규차입을 늘렸고, 그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
- (예산기조) 2차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처, 에너지 구호 패키지, 경제적 구조 전환, 탄소저감, 교육 및 디지털화 같은 중요한 투자를 위한 추가 부담을 반영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급등에 대한 대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자금, 연방군 비용 확대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산도 포함
- (예산안 내용) 2차 예산안은 1차 예산안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수입) 2022년 2차 예산안의 재정수입은 4,576억유로로 전망되며, 이는 1차 예산안에 비하여 146억유로 증가한 수치
 - 세입은 3,325억유로이고, 신규차입은 1차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997억유로
 - (지출)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7.8% 감소한 4,576억유로이며, 2026년까지 투자 지출 규모를 안정화하여 매년 평균 508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연방정부는 가을 경제 전망(Herbstprojektion)에서 2021년 실질 경제성장률 2.6% (봄 전망대비 0.9%p 하향조정), 2022년 4.1%, 2023년 1.6%로 독일 경제가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경제성장률은 공급망 및 운송 병목현상과 전 세계의 높은 에너지 가격을 고려하여 봄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됨
 - 민간소비가출은 현재 경제회복의 원동력이며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부문도 크게 개선
 - 한편 2021년 3,4분기에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중간재 부족현상으로 인해 산업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나, 운송 병목현상이 해소되면 2022년에는 캐치업 효과가 명확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0년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2021년 말~2022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물가상승률 전망: 2021년 3%, 2022년 2.2%, 2023년 1.7%)

〈표 Ⅲ-1〉 독일의 2021년 가을 경제 전망 주요수치

구분	2020	2021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4.6	2.6	4.1	1.6
명목 GDP 성장률	-3.0	5.6	6.4	3.3
가계최종소비	-5.9	0.3	6.6	1.7
정부최종소비	3.5	3.6	-0.5	-0.3
총고정자본형성	-2.2	2.6	3.9	2.9
설비	-11.2	5.5	4.5	4.0
건설	2.5	1.4	3.2	2.2
내수	-4.0	2.5	4.3	1.6
수출 증가율	-9.3	8.6	6.3	3.7
수입 증가율	-8.6	9.2	7.1	4.1
실업률	5.9	5.7	5.1	4.9

주: 2020년 잠정치, 2021-2025년 전망치.

출처: 연방 경제에너지부, wirtschaftliche-entwicklung, 2021.10.27.

나. 재정 전망

□ (재정지출) 2022년 재정지출은 4,430억유로로 전년대비 19.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감소한 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투자) 연방정부는 기록적인 투자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연간 약 510억유로 규모의 투자를 계획
 - 주요 투자항목으로 교육 및 연구, 디지털·교통 인프라, 기후친화적 경제구조조정 및 특별 기금인 에너지·기후기금, 디지털 인프라, 보육 확대 등에 초점
 - 기후보호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800억유로 이상을 확보한 것에 더하여 2022년 기후보호프로그램에 추가 80억유로 자금 배정

- (일반정부 재정수지) 최근 수정 중기재정계획(2021.10)⁸⁷⁾⁸⁸⁾에 따르면 2021년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21 안정화프로그램(2021.4)⁸⁹⁾ 대비 개선된 -7.25%로 전망되며, 2022년 재정적자는 큰 폭으로 감소해 -3.25%를 기록 한 후 2025년에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신규차입) 2022년 신규차입 규모는 발표 당시 기본수치(Eckwerte)보다 182억유로 증가하여 997억유로가 될 전망
- (국가채무) 수정 중기계획에 따르면 독일의 마스트리히트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1년 72.25%로 기존 전망(2021.4)인 74.5%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2022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67.25%를 기록할 전망
 -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8.7%로 전망(75.25%)보다 큰 폭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막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은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

〈표 III-2〉 독일의 FY2022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상 지출·수입

(단위: 억유로, %)

	2021	2022	중기재정계획		
			2023	2024	2025
재정지출	5,477	4,430	4,034	4,076	4,083
전년대비 증감률(%)	+24.0	-19.1	-8.9	+1.0	+0.2
투자	593	518	509	508	508
재정수입	5,477	4,430	4,034	4,076	4,083
조세수입	2,840	3,152	3,329	3,464	3,592
신규차입	2,402	997	54	120	118

출처: 연방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21 bis 2025*, 2021.8.

87)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2021.1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service/information-material-issued-by-the-federal-government/german-draft-budgetary-plan-2022-1968494>, 검색일자: 2021.10.21.

88) EU 규정에 따라 유로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들은 매년 EU집행위원회에 내년도 예산계획(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독일은 6월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현재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여 제출함

89) 안정화프로그램(Stabilitaetsprogramm 2021, 2021.4.)에 따르면, 2021년 독일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9%로 전망되었으나, 수입부문 개선 및 경제의 긍정적 전망 등의 요인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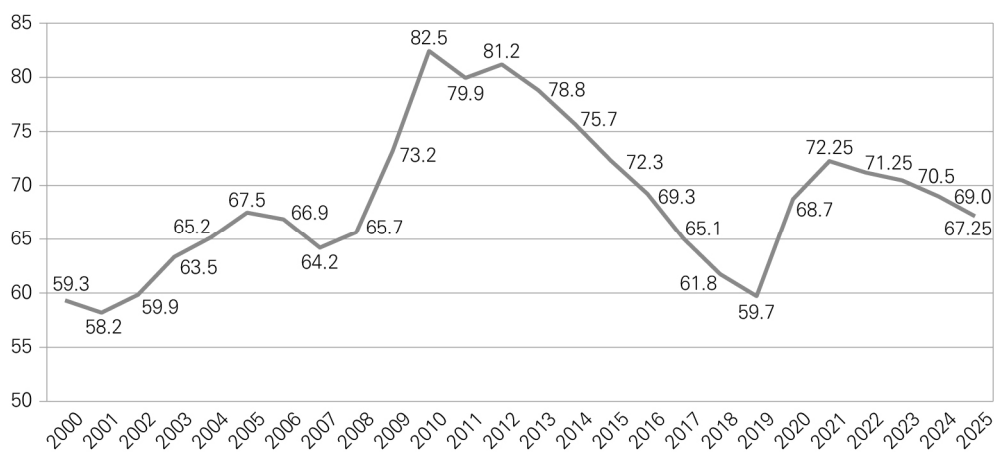
〈표 III-3〉 독일의 FY2021~2025 주요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정부 재정수지	-4.3	-7.25	-3.25	-1.5	-0.5	0
구조적 재정수지	-1.8	-6	-3.25	-1.5	-0.25	0
국가채무	68.7	72.25	71.25	70.5	69.0	67.25

출처: 독일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2021.10.15.

〈그림 III-1〉 독일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2. 2021~2025년 전망 자료: 연방정부(2021)

출처: 연방재무부, *Gesamtwirtschaftliche Ausgangslage und finanzpolitische Konzeption*, 2021.6.23.
연방정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2*, 2021.10.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예산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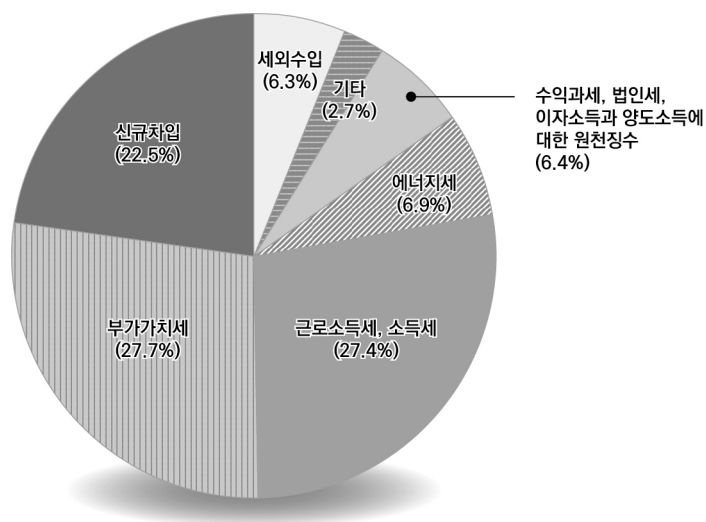
- (우선순위) 2022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 강화, 기후변화, 국제적 책임에 우선순위를 설정
 - (미래투자 강화) 독일은 중장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팬데믹 이후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미래패키지를 통한 투자 강화를 강조
 - 2022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디지털화, 인공지능, 양자기술, 5G/6G 통신기술 추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며, 중앙집권적이었던 투자를 부처에 분배하기로 합의
 - (기후변화) 독일은 기후보호 및 경제부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800억유로를 투입하였으며, “2022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80억유로 규모의 추가 자금을 배정
 - 독일 내각은 2021.5.12. 기후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추가 조치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독일 기후협약(Klimapakt Deutschland)을 통과시켜 기후보호를 위한 도전에 박차를 가함
 - (국제적 책임) 독일은 2022년 경제개발협력부(BMZ), 외무부(AA),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 예산에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국제 기후보호를 위해 24억유로 배정
 - 추가적으로 국제적 코로나 위기 대응 및 기후보호 조치에 20억유로 자금 배정 예정

3 예산안 주요 내용

가. 재정수입

- 2022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약 4,430억유로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조세수입 비중이 약 71%(약 3,152억유로)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조세수입) 2022년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3,152억유로로 전망되며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두드러짐(〈표 III-4〉 참고)
 - (세외수입) 2022년 세외수입은 281억유로 규모이며, 수수료와 요금,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구성
 - (신규차입) 2021년 2,402억유로였던 연방예산안의 신규차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997억유로 규모로 편성

[그림 III-2] 독일의 2022년 연방정부 재정수입 구조



출처: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2*, 2021.8., p.63

〈표 III-4〉 독일의 2021~2025년 연방 조세수입 및 신규차입 계획

(단위: 억유로)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근로소득세(Lohnsteuer)	898	952	1,006	4,062	1,120
소득세(veranlagter Einkommensteuer)	260	259	279	303	323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지 않는 수익과세 (nicht veranlagten Steuern vom Ertrag)	107	109	113	123	126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Bundesanteil an der Abgeltungsteuer auf Zins- und Veräußerungserträge)	33	33	33	33	34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141	144	155	167	174
부가가치세(Steuern vom Umsatz)	1,154	1,285	1,356	1,393	1,433
영업세 이전금액(Gewerbsteuerumlage)	18	19	21	22	23
연방세(Bundessteuern) ¹⁾	986	1,001	1,013	1,024	1,035
EU기금(EU-Finanzierung)	-377	-370	-372	-383	-399
지방분권기금(Regionalisierungsmittel)	-93	-94	-98	-99	-101
보충교부금(Ergänzungszuweisungen)	-92	-94	-99	-104	-109
자동차세 손실보전금(Kompensation Kfz-Steuer)	-90	-90	-90	-90	-90
재정안정보조금(Konsolidierungshilfen)	-8	-8	-8	-8	-8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및 현재 조세추세에 따른 조정분	-14	6	20	21	30
총조세수입(Steuereinnahmen)	2,924	3,152	3,329	3,464	3,592
신규차입(Nettokreditaufnahme)	2,402	997	54	120	118

주: 1) 연방세는 세수가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세목으로 보험세, 담배세, 커피세, 증류주세, 와인세, 샴페인세, 주세, 전기세, 에너지세, 자동차세, 항공세, 연대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소비세입(송원금, 『주요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8.)

출처: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2*, 2021.8., p.72, Tabelle 14; p.76, Tabelle 16 일부발췌

나. 재정지출

-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팬데믹 대응 및 단기 경제안정화를 위한 조치 만료 등으로 인해 2021년 5,477억유로에서 2022년 4,430억유로로 19.1% 감소할 전망
 - (교통·디지털인프라) 2022년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54억유로(13.0%) 감액된 360억유로 배정
 - 감소분의 대부분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손해 보상이 2022년에는 반영되지 않음에 기인
 - 2022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수로 및 철도부문 프로젝트의 일회성 강화 조치 및 철도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6.5억유로)를 포함하여 연방정부는 최근 몇 년간 운송부문 투자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교통네트워크 및 유지·개발 투자에 연간 180억유로 이상을 계획
 - (사회보장·고용) 연방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 영역인 사회지출은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2023년 다시 큰 폭으로 감소, 2024년 이후에는 다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지출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하락(2017년 51.0%→2020년 49.4%)하다가 2021년 52.0%, 2022년 48.7%를 기록한 후 20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5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 2022년 노동사회부(BMAS) 예산은 전년대비 1.2% 감액된 1,630억유로 편성
 - 가장 큰 지출인 연금급여 지출은 2022년 1,080억유로 규모이며, 연금기여율은 2022년 18.6%, 2023년 18.7%, 2024년 19.7%로 증가할 전망
 - 2022년 노동부문에 대한 연방지출은 438억유로로 배정되었으며, 실업급여(SGB II)⁹⁰⁾ 224억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 및 난방비 101억유로, 구직자 관련 고용서비스 및 행정비용 부담 99억유로, 노동시장으로의 난민 편입 3.45억유로 등으로 구성

90)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크게 증가했던 실업급여 예산(344억유로 편성)은 2022년부터 실업자 수 감소 전망으로 큰 폭 감액

- 2022년 사회보장기여금을 40%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보건기금에 70억유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2년부터 장기요양보험에 매년 10억유로를 기여할 계획
- 2022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예산안은 전년 대비 5.8% 감액된 124억 유로 규모이며, 부모수당과 양육비 선지급금⁹¹⁾이 76.3억유로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별기금을 통해 초등 중일돌봄을 위한 투자에 총35억유로를 제공
- (교육·연구) 교육연구부(BMBF) 예산안은 2022유로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편성
 - 2022년에는 총 92억유로가 연구 프로젝트 자금에 사용될 계획이며, 연구 및 교육 강화, 대학교육 혁신, 우수대학육성전략(Exzellenzstrategie)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글로벌 과제를 다루는 연구에도 중점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혁신협약(Paktes für Forschung und Innovation) 예산을 매년 3%씩 증액(연방 및 주정부가 공동 부담)
 - 연방교육지원법(BAföG)⁹²⁾에 따른 지출은 약 21억유로로 추산되며, 교육 부문에서 직업훈련 현대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코로나 이후 캐치업 프로그램, 고급 교육 지원 등에 중점을 둠
- (경제협력·개발) ODA 지출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제협력개발부(BMZ)의 2022년 예산안은 108억유로 규모이며, 추가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및 국제기후 관련 대응 조치를 위한 부처의 요구에 따라 20억유로 지출이 가능
 - OECD 2020년 잠정집계에 따르면 독일은 ODA에 약 250억유로(GNI 대비 0.66%) 규모를 지출했으며, 이는 DAC 회원국 중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규모임
- (보건) 2022년 보건부 예산안은 팬데믹 대응 축소로 전년대비 대폭 감액(47.5%)되어 262억유로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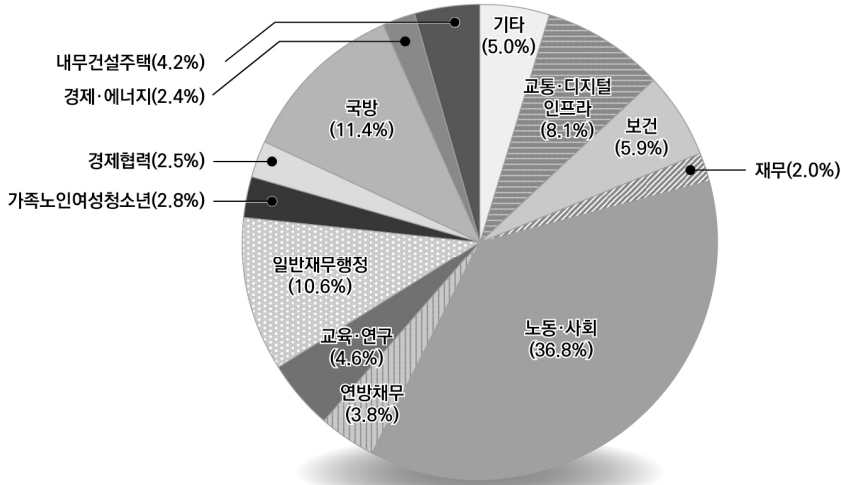
91)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 정책으로,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임

92) 독일은 모든 구성원이 원하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연방교육지원법을 통해 교육기간 교육과 생활전반을 위한 교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연방교육지원법은 독일 정부가 학생과 대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가정형편과 필요를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교육/생활지원금을 규정(정수정, 『독일의 연방교육지원법』, 『외국법제동향』, Vol.2, 2019., p.85~95)

- 코로나 대응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백신조달을 위한 연방보조금(19억유로) 및 건강기금에 대한 추가 연방부담 확대(70억유로) 등이 여전히 우선순위로 편성됨
- 2022년 최초로 연방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정액 기여금 예산 편성(10억유로)
-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022년 환경부 예산은 전년대비 0.9% 증액된 27억유로로 편성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조치를 위한 국제기후금융에 약 6억유로 편성
 - 유럽 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Europäischen Klimaschutzinitiative)⁹³⁾에 2천만유로, 2022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6천만유로,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에 4천1백만유로 지출 계획 등
- (경제·에너지) 2022년 경제에너지부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2.8% 증액된 106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에너지전환, 지역경제발전에 중점
 - 2021~2025년 기간 동안 에너지전환에 총 54억유로 지원, 지역경제 구조개선에 35억유로 지원 확대, 해양·항공 관련 연구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에 지원 확대
- (국방) 2022년 국방부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유로 증액(7.2%)된 503억유로로 편성
 - 경제·미래패키지의 조달 및 디지털화, 디지털 연구센터를 위한 재원 약 12억유로 포함

93)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 개발도상국의 기후 및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08년 설립되었으며, 펀드 재원은 배출권 거래의 경매수익 및 환경부(BMU)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기후보호 기금은 2019년 2,000만유로에서 2021년까지 5,000만유로로 확대할 계획

[그림 III-3] 독일의 2022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출처: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2*, p.21, 2021.8.

<표 III-5> 독일의 2020~2025 주요 기능별 연방지출 전망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0 실적	2021목표	2022예산안	2023	2024	2025
사회보장	233,312	302,307	218,090	205,142	210,671	214,060
국방	40,112	40,822	44,091	41,012	40,772	40,263
식품·농업·건강	2,173	3,333	3,010	2,741	2,545	2,358
경제·에너지	6,505	16,165	17,354	18,341	14,039	11,414
교통	28,061	28,853	32,991	30,740	30,540	31,571
건설·도시개발	1,621	2,831	3,351	3,561	3,601	3,429
교육·과학·연구	24,206	26,905	26,144	24,621	24,638	24,012
문화	3,974	4,313	3,081	2,920	2,942	2,950
환경보호	2,135	4,982	2,599	2,553	2,500	2,519
스포츠	430	484	303	269	253	252
내무·이민	8,231	9,357	9,612	8,828	8,704	8,605
경제협력·개발	12,127	12,324	10,795	9,830	9,654	9,551
일반재무	16,183	20,060	23,751	24,188	25,533	25,063
특별기금	29,387	2,529	5,883	3,202	2,757	2,497

주: 2023~2025는 전망

출처: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2*, 2021. 8., p.22~23, Tabelle 5

4 주요 재정정책

가. 기후변화 대응

1) 2022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Klimaschutz-Sofortprogramm 2022)

- 독일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중점 투자 항목으로 '2022 긴급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추가로 80억유로를 배정함
 - (배경) 독일 연방내각은 2021년 5월에 탄소중립 달성시기를 2045년으로 앞당기고 2030년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65%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은 기후보호법 개정 계획을 발표·채택한 바 있음⁹⁴⁾
 - (내용)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연방내각은 지난 2년간 기후보호 및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약 800억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추가로 80억유로를 배정하기로 결정
 - 2022 기후보호 프로그램에는 건물, 교통 및 산업과 같은 부문별 및 포괄적 조치들이 포함됨
 - (건물) 2025년까지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적 개조, 기후친화적인 신축, 사회주택 개조를 위해 55억유로 추가 배정
 - (교통) 자전거 도로 확충, 철도 디지털화, 신규 고속충전소 설치, 수로 및 기후친화적 운송에 10억유로 이상 투입
 - (산업) 기후친화적 제품생산에 드는 추가 비용 지원, 철강 산업의 수소전환·화학 산업을 위한 투자촉진 프로그램 등 산업 지원에 8.6억유로 지원, 산업 탈탄소화 프로그램에 6.5억유로 추가 지원
 - (기타) 국가 수소전략, 난방 네트워크 확장 등을 위한 에너지부문 추가 투자, 농업 및 저배출 저장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촉진, 기후친화적 농업부문을 위한 추가 자금 배정, 재생에너지(EEG) 부담금 축소를 포함한 부담금 및 세금의 포괄적 개혁 등의 내용도 포함

9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5월호 참고

2) 에너지·기후기금(Energie- und Klimafonds; EKF)

- EKF는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보호를 위한 자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특별기금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신뢰할만하며, 적정 가격의 에너지 공급을 촉진하고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금을 제공
 - (수입) 2021년 대비 탄소배출권 수입 및 연료배출거래 수입, 연방정부 지원금이 증가할 전망이나 준비금이 감소하여 2022년 EKF 수입은 약 342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22년 프로그램 지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21년(265억유로) 대비 약 10% 초과한 293억유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주요 프로그램 지출: 전기가격 인하 보조금 78억유로, 건축부문 연방자금 지원 78억유로, 환경보너스 21억유로, 충전인프라 확충 17억유로, 산업부문 탈탄소화 12억유로, 배터리셀 생산 촉진 7.25억유로 등

〈표 III-6〉 독일의 2021~2025년 에너지·기후기금 계획

(단위: 십억유로)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42.695	34.183	22.162	20.700	22.899
탄소배출권 수입	2.745	3.466	3.585	4.984	5.104
연료배출거래 수입 ¹⁾	7.413	8.672	10.493	13.009	15.348
연방정부 지원금	2.479	5.833	3.152	2.707	2.447
준비금	30.057	16.211	4.933	0	0
지출	42.695	34.183	22.162	20.700	22.899
프로그램 지출	26.494	29.250	23.332	22.168	21.513
준비금	16.211	4.933	-	-	1.385

주: 1)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을 통해 난방, 운송연료 등 EU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배출권 인증서의 형태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연료배출권 거래법(BEHG)이 2021년부터 시행, 주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2020.11.13.

출처: 연방재무부, *bundshaushalt-2022-und-finanzplan-2025*, 2021.8., p.45, Tabelle 8 주요 변수 발췌

나. 주요 투자 정책

- 2022년 연방예산의 투자 지출은 전년도 목표인 약 593억유로 보다 적은 약 518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중기재정 기간(2023~2025년) 동안 연간 약 510억유로 규모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
 - 이는 2024년까지의 이전 재정계획에서의 투자 보다 총 122억유로가 더 높은 수준이며, 교통 인프라, 주택, 교육·연구, 디지털화, 환경보호, 개발원조 등에 우선순위로 재원 배분
 - (교통) 독일 연방정부는 도로(84억유로), 철도(93억유로), 수로(14억유로)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상황 개선을 위한 자금(10억유로) 등 교통 인프라에 가장 많은 투자 재원을 배분
 - (개발원조) 2022년 BMZ(경제협력개발부)에 속한 개발원조를 위한 프로그램 투자지출 74억유로 편성
 - (주택) 사회주택 보조금(10억유로), 환경 친화적 사회주택을 위한 프로그램(10억유로), 도시 개발 촉진(11억유로) 등
 - (교육·연구) 대학 내 연구 건물, 대규모 장비 및 고성능 컴퓨터 자금 지원(3.17억유로), 우수대학육성전략(4억유로), 교육 및 강의 강화를 위한 미래 협약⁹⁵⁾(18.8억유로) 등
 - (환경보호)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환경보호에 대한 공공투자는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므로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연방 지출은 일부에 불과
 - 방사성 폐기물 관련 부지선정(6.45억유로),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소(3.78억유로),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해의 기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재원, 5.98억유로) 등
 - 에너지·기후기금, 디지털 인프라와 같은 연방정부의 특별기금 또한 2022년에 약 194억유로의 투자지출을 계획

95) Zukunftsvertrag Studium und Lehre stärken(교육 및 강의 강화를 위한 미래 협약)은 2019년 연구와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학업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패키지를 승인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2022년 1월 연간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2)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 부문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6.0%, 총고정자본형성도 2.6% 증가
 - 대외무역도 계속 증가하여 수입은 6.3%, 수출은 5.5%로 다소 높게 증가할 전망
 - 노동시장에서도 회복세가 지속되어 고용은 약 4,530만명으로 전망되고, 실업률은 5.7%에서 5.1%로 하락할 전망
 - 물가상승률은 2022년에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평균 3.3%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위험 요소가 있음
 - 이러한 경제 전망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영향 및 제재는 반영되지 않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크게 증가

〈표 III-7〉 독일의 2022 경제 전망 주요 지표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전망)
실질 GDP 성장률	-4.6	2.7	3.6
민간소비	-5.9	0.0	6.0
설비투자	-11.2	3.2	4.1
건설투자	2.5	0.5	1.0
내수	-4.0	1.9	3.9
수출	-9.3	9.4	5.5
수입	-8.6	8.6	6.3
실업률	5.9	5.7	5.1

출처: 연방경제기후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2*, 2022.1.26.

나. 재정 전망

- (재정현황) 2020년과 2021년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재정적, 사회적 영향을 완화시키며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하기 위하여 신규차입을 늘렸고, 그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
- (재정지출) 2022년 2차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은 4,576억유로로 전년 대비 17.8%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투자) 연방정부는 2026년까지 투자지출 규모를 안정화하여 매년 평균 약 508억유로를 투자하며 경제 전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자 함
- (신규차입) 2차 예산안 신규차입의 규모는 1차 예산안과 동일하게 997억유로
 - 신규차입은 2023년부터 100억유로 내외로 줄어들 계획이고, 신규차입을 GDP의 0.35% 이내로 하는 채무규정도 2026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내에 충족할 전망
 - 지속가능한 부채 수준으로의 복귀를 통하여 혁신적인 투자 활동에 필요한 장기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보장할 수 있게 됨

〈표 III-8〉 독일의 2022년 1차, 2차 예산안 및 2023~2026 중기재정계획 상 지출·수입

(단위: 억유로, %)

	2022 1차 예산안	증감	2022 2차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23	2024	2025	2026
재정지출	4,430	146	4,576	4,127	4,157	4,169	4,231
전년대비 증감률(%)	-19.1		-17.8	-9.8	+0.7	+0.3	+1.5
투자	518	-10	508	510	509	512	514
재정수입	4,430	146	4,576	4,127	4,157	4,169	4,231
조세수입	3,152	173	3,325	3,500	3,635	3,769	3,908
신규차입	997	0	997	75	106	118	137

출처: 연방재무부, "Eckwertebeschluss der Bundesregierung zum Regierungsentwurf des Bundeshaushalts 2023 und zum Finanzplan 2022 bis 2026," 2022.3.16.

2 예산기조

- 2차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처, 에너지 구호 패키지, 경제 구조 전환, 탄소저감, 교육 및 디지털화 같은 중요한 투자를 위한 추가 부담을 반영
 -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경로 복귀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처하고, 독일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
 - 기업이나 근로자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금 감면을 지원하고, 사회보장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여율을 안정시킬 계획
 - (미래 투자 촉진) 기후보호·디지털화·교육 및 연구 분야에 투자하고, 이러한 분야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
 - 투자지출은 2026년까지 약 510억유로 수준으로 유지하며, 전통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특히 철도)에 2026년까지 약 205억유로 규모로 투자할 계획
 - 기후보호 및 전환 분야는 민간과 공공에서 최대한 잠재력있고 지속가능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수립
 - 에너지기후기금(EKF)에 60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000억유로 이상을 사용할 계획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 완화 및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
 - 인도적 지원, 위기관리 및 식량 안보 조치를 위해 10억유로 지원
 - 동맹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독일 연방군(Bundeswehr) 특별기금을 설립하고, 최대 1,000억유로의 기금을 자체 신용승인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
 - 급등한 에너지 비용의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할 예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장) 2022년 제2차 예산안은 2023년부터 적정 부채 한도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에 돌입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규모로 늘었던 신규차입은 2023년부터 100억유로 미만으로 줄어들 계획이고, 채무규정(GDP의 0.35% 이내)도 2026년까지의 재정 계획 내에 충족할 예정
 - 정부는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키고, 실행 능력을 유지하며, 혁신적인 투자 자금을 통해 성장을 강화해야 함

3 예산안 내용

- 2022년 2차 예산안은 2022년 6월 발표한 1차 예산안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음

가. 재정수입

- 2022년 2차 예산안의 재정수입은 약 4,576억유로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조세수입은 약 3,325억유로, 이는 1차 예산안보다 173억유로 증가한 수치
 - 2022년 총세수는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도 회복세가 계속되며 4.2% 증가할 전망
 - 2022년 2월 16일 내각에서 통과된 4차 코로나 세제 지원법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들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지원
 - 감소된 세금 수입은 총 26억유로(연방정부는 약 10억유로)로 예측

나. 재정지출

- (경제 및 기후 보호) 연방경제기후부(BMWK)의 예산은 110억유로로, 2021년 예산안 및 2022년 1차 예산안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
 -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촉진프로그램(ZIM)에 예산 4,000만유로 증가, EU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1,000만유로 지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시 및 문화 행사를 돕기 위해 1억 5천만 유로 지원
- (일반 행정) 2022년 2차 예산안에서 연방내무부의 예산은 약 150억유로로, 1차 예산안과 비교하여 약 8억 4천만유로 증가
 - 주요 분야는 연방경찰 예산에 46억유로, 연방형사국 예산에 9억 900만유로, 연방 보안 분야 인건비의 계속적 증가
 - 디지털화, IT 및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약 29억유로 예산이 배정되었고, 1차 예산안과 비교하여 6억 6,700만유로 증가
 - 시민보호 및 재난구호에 약 7억 9천만유로 지원, 반극단주의(Extremismusbekämpfung)에 3,500만유로 추가, 통합 및 이주, 소수자 및 난민을 위해 약 17억유로 지원, 스포츠 홍보에 약 3억 7,800만유로
- (국제협력) 국제적 코로나19 지원(ACT-A: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에 약 13억유로 및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관련 조치에 10억유로 지원
 - 2020년 독일은 국제협력을 위한 공적 자금으로 약 284억달러를 지출하였고, 이는 국민총소득의 0.73%를 달하는 수준으로 공여국 중 2위를 달성함
- (노인, 사회보장, 건강 및 돌봄) 연방노동사회부(BMAS) 예산 중 가장 큰 지출인 연금보험 지출은 1차 예산안과 비슷한 1,077억유로
 - 노년층 및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주 정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83억 5천만 유로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억 5천만유로 감소

- 연방보건부(BMG)의 예산은 약 450억유로이고, 건강보험을 위한 기금에 285억유로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에 매년 10억유로의 정액 기여금 지원
- (노동) 구직자를 위한 기본 사회보장 시스템의 통합 서비스 제공 및 행정 비용에 대한 예산에 약 99억유로 지원
 - 연방정부는 노동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 가정하고 실업급여(SGB II)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 및 난방비용 지원금을 1차 예산안에 비하여 18억유로 줄여든 307억유로 지원
- (국방) 2차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은 35억유로 증가한 약 503억유로
 -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연방군 특별 기금과 함께 국방 예산이 강화될 전망
 - NATO 및 유럽 연합 내의 동맹 관계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의무에 전념
- (식품 및 농업) 연방식품농업부(BMEL) 예산에 약 71억유로 지출을 예상
 - 농업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약 40억유로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 농업과 임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농업 구조개선 및 연안보호에 13억유로 지원
-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 2차 예산안에서는 연방가족노인여성및청소년부(BMFStJ)에 약 126억유로 예산을 지원
 - 부모수당과 양육비 선지급금 부분이 77억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빈곤 아동에게 월 20유로의 수당을 지원하는 즉각적 추가 보조금도 제공될 예정
 - 유아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20억유로 지원
-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교통 예산에 대한 투자는 높은 수준으로 계속될 전망
 - 전통적인 교통수단(도로, 철도 및 수로)에 약 195유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1차 예산안에 비하여 3억유로 증가한 수치

- 철도에 대한 투자는 약 94억유로에 달하며 도로에 대한 투자보다 9억유로 많음
 - Deutsche Bahn AG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하여 6억 5천만유로 지원
-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 안전 및 소비자 보호) 2차 예산안에서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및소비자보호부(BMU)⁹⁶⁾에 약 22억유로의 예산이 배정
- 환경보호조치, 환경보호분야의 국제협력 및 기후변화 적응 등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2차 예산안에서는 국가해양보호조치 및 오염방지기술 수출 지원 등이 추가
 - 연방자연보전기금을 통하여 자연보전분야, 특히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과 야생지역 보호에 2022년 약 9천만유로를 지원하고, 여기에는 초기비용이 140만유로인 새로운 중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
- (교육 및 연구) 연방교육연구부(BMF) 예산으로 2022년에 203억유로를 지원
- 연방교육지원법(BAföG)에 따른 2022년 예산은 약 23억유로이며, 직업훈련촉진법(AFBG) 관련 서비스에 7억 8,600만유로가 사용될 예정
 - 연방 및 주정부가 공동으로 학습 및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19억유로를 지원
 -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개별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이니셔티브 직업 훈련(Exzellenzinitiative Berufliche Bildung)에 2억 9천만유로 지원
-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설) 연방주택도시개발및건축부(BMWSB)가 새롭게 구성되어 건설, 도시개발, 주택, 공간계획, 재건축 등의 업무를 맡게 됨
- 2차 예산안에서 약 50억유로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후친화적 사회주택 분야에 20억유로의 기금 지원, 도시개발자금에 7억 9천만유로 지원
 - 생애 첫 주택구입을 위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9억 9,500만유로, 주택혜택은 8억 9,500만유로,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일회성 난방비 지원금 1억 3천만유로의 예산이 편성

96) 2021년 12월8일 조직법령에 따라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 및 소비자보호부(BMU)의 사업은 연방 법무부(BMJ), 연방경제기후부(BMWK),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에서 나누어지고, 기후보호 및 국제기후 정책에 대한 책임은 연방경제기후부(BMWK) 및 연방 외무성(AA)의 업무로 이전

〈표 Ⅲ-9〉 독일의 2022년 2차 예산안 부처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2021 목표 (A)	2022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대통령실	44.7	44.9	0.2	0.5
연방하원	1,059.8	1,103.2	43.4	4.1
연방상원	41.2	35.3	-5.9	-14.3
총리실	4,647.7	3,697.1	-950.6	-20.5
외무부	6,301.7	6,570.0	268.3	4.3
내무부*	18,457.7	14,955.0	-3,502.7	-19.0
법무부	957.5	935.0	-22.5	-2.3
재무부	8,742.3	8,825.0	82.7	0.9
경제기후부*	10,273.5	10,959.4	685.9	6.7
식품농업부	7,676.1	7,104.8	-571.3	-7.4
노동사회부	164,920.5	160,118.2	-4,802.3	-2.9
교통및디지털인프라부	41,354.5	36,000.0	-5,354.5	-12.9
국방부	46,930.0	50,334.7	3,404.7	7.3
보건부	49,896.4	52,594.5	2,698.1	5.4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및소비자보호부*	2,657.1	2,192.0	-465.1	-17.5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3,206.6	12,581.7	-624.9	-4.7
헌법재판소	37.2	35.9	-1.3	-3.4
회계감사원	168.9	172.9	4.0	2.4
정보보호및자유를위한연방위원회	31.5	43.2	11.7	37.1
독립통제위원회	4.7	12.4	7.7	163.9
경제협력개발부	12,425.7	10,853.9	-1,571.8	-12.6
주택도시개발및건설부*		4,929.3	4,929.3	
교육연구부	20,819.4	20,300.0	-519.4	-2.5
연방채무	15,273.6	13,134.6	-2,139.0	-14.0
일반조세행정	146,797.5	40,064.5	-106,733.0	-72.7
재정지출	572,725.7	457,597.6	-115,128.0	

주: 2021년 12월 8일 조직법령에 따른 조직 변경도 포함
출처: 연방재무부, "zweiter Regierungsentwurf 2022"

IV. 프랑스

□ FY2022: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출처

- PLF 2022(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2021. 9. 22.
- Dossier de presse-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2022, 2021. 9. 22.
-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2021. 10. 4.
- LFSS 2022(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2021. 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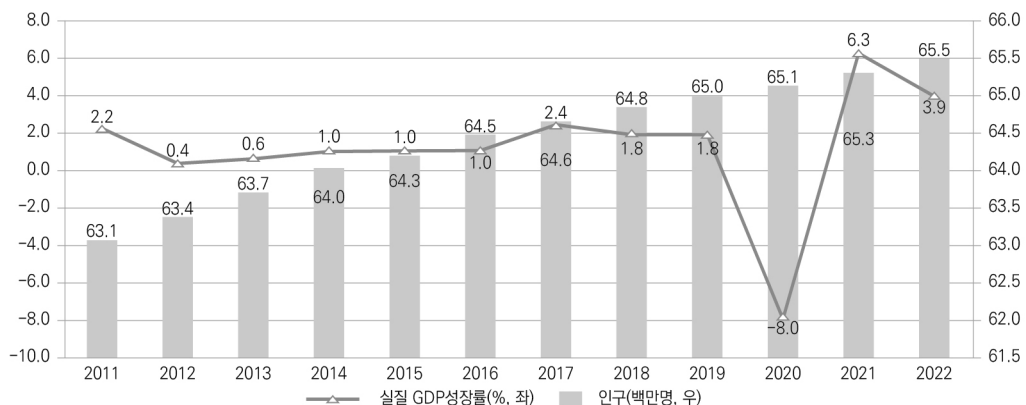
□ 환율: 1유로 = 약 1,354.21원(2021년도 1월 ~ 11월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2021년 추정치 경상GDP 2조 9,404억달러(IMF)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20년 기준 57.8%(World Bank)

□ 인구: 약 6,548만명(2021년 기준, IMF)

□ 실질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및 전망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1, 검색일자: 2021.11.30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1. 04. 14.	2020년 결산보고서(PLR2020) 발표
2021. 04. 14.	2021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2021-2027) 발표
2021. 04. 29.	2021년 프랑스 회복 및 복구 계획(PNRR) 발표
2021. 06. 02.	FY2021 1차 수정예산법안(PLFR) 발표
2021. 06. 30	국가재정방향설정을 위한 준비보고서(DOFP: rapport préparatoire au débat d'orientation des finances publiques) 발표
2021. 09. 22.	FY2022 예산법안(PLF: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발표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성장) 프랑스 경제는 2021년 강하게 반등(+6%)하여 2021년 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하고, 2022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재정 전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55.6%로 감소할 전망

□ 예산기조

- 2022년 프랑스 예산법안은 경제 및 재정의 점진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됨
- 정의와 국방을 지원하여 프랑스의 주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교육·연구·청년을 위한 투자를 정부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재정을 지원함
-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수소 개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노력을 확대

□ 주요 재정정책

- 2022년 프랑스의 예산법안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위해 투자하며, 마크롱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 이행을 지속함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위한 투자
 -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 청년 지원 정책 강화
 - 기업활동 지원 지속 및 취업 지원 강화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2020년 프랑스는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역사적인 GDP 하락을 경험한 이후, 2021년 강하게 반등(+6%)하여 2021년 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할 전망
 - 강한 경제 회복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조치와 백신 접종의 확대에 기인함
 -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하는 보건패스(passe sanitaire)가 시행되고, 백신 접종 대상 연령 대도 확대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
 - 제한 조치의 점진적 해제와 그에 따른 경제 활동의 회복으로 2021년 6%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가계 소비의 반등이 예상되며, 수출 증가도 기대됨
 - 가계 소비는 2020년 크게 하락(-7.2%)한 후 2021년 부분적으로 반등(+4.1%)하고, 2022년에 회복이 가속화(+7.0%)될 전망
 - 2021년 프랑스의 수출이 급격히 반등(+8.2%)하며 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나,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운송장비 수출 회복은 더더 부문 간 회복세가 다르게 나타남
 - 내수의 반등으로 프랑스의 수입은 2021년 9%, 2022년 10.4%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 2020년 말과 비교해 2021년에 약 375,000개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이 크게 개선되고, 2022년에도 약 6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어 고용 개선이 이어지지만 2021년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둔화될 전망

-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반등으로 2021년 1.5% 상승하고,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표 IV-1〉 프랑스의 거시경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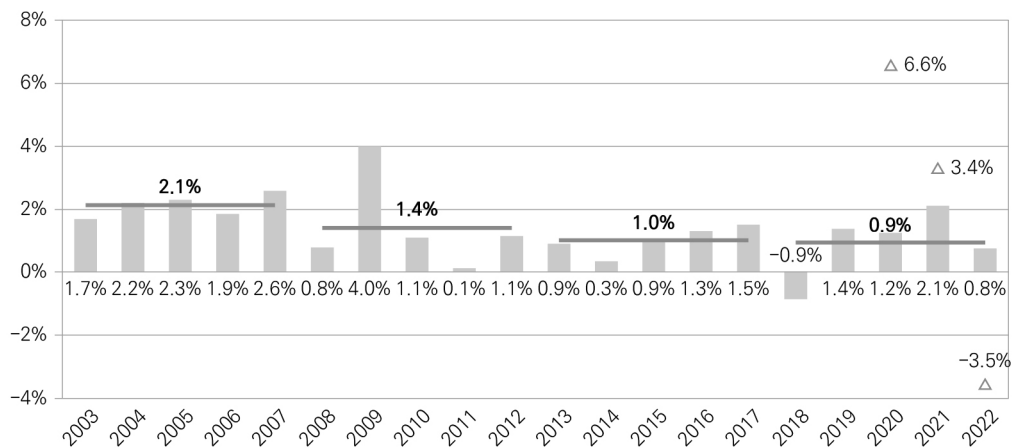
구 분	2021년 4월 안정화프로그램		2022년 예산안	
	2021	2022	2021	2022
GDP성장률	5.0	4.0	6.0	4.0
가계소비지출(Dépense de consommation des ménages)	3.9	5.7	4.1	7.0
총고정자본형성(FBCF totale)	8.3	4.6	12.4	4.7
수입(Importations)	7.5	7.8	9.0	10.4
수출(Exportations)	8.2	9.3	8.6	10.0
소비자물가지수(Indice des prix à la conso. total)	1.1	0.8	1.5	1.5

출처: 프랑스 재무부,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2021., p.60

나. 재정 전망

- (2021년 재정지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지출로 인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2020년 60.8%까지 상승한 이후 2021년에도 59.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재정지원을 지속함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율은 3.4%로 나타남
- (2022년 재정지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의 단계적인 폐지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55.6%로 감소할 전망
 - 2022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3.5%로 2021년의 3.4%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

[그림 IV-1] 프랑스의 재정지출 증가율 및 추이



주: 코로나19 지원 조치와 프랑스 활성화 계획이 제외된 수치는 막대 그래프, 포함된 수치는 ▲로 나타나며, 가로선은 5개년 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의미함

출처: 프랑스 재무부,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2021., p.104.

- (2021년 재정수입) 2021년 재정수입은 3,008억유로로 예산법 대비 153억유로 증가할 전망
 -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으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산법 대비 각각 16억유로, 80억유로 증가
 -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제품소비세도 예산법 대비 각각 41억유로, 4억유로 증가
- (2022년 재정수입) 2022년 재정수입은 3,109억유로로 전년대비 101억유로 증가할 전망
 - 2022년 조세수입은 2021년과 비교해 134억유로 증가한 2,920억유로로 전망됨
 - 경기 개선으로 인해 2022년 소득세는 2021년에 비해 53억유로 증가한 824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법인세율의 지속적 하락에도 경기 개선으로 인해 2022년 법인세는 2021년보다 31억유로 증가한 395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소비 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제품소비세가 전년 대비 각각 51억유로와 9억유로 증가할 전망
- 비금융 회사의 낮은 배당금 지급 전망으로 인해 2022년 세외수입은 222억유로로 2021년에 비해 33억유로 감소할 전망
- (재정수지)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1년 본예산 대비 226억유로 개선된 1,974억유로를 기록하고, 2022년엔 2021년에 비해 540억유로 개선된 1,434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2021년의 재정수지 개선은 거시경제 개선에 따른 세수 증대를 반영한 결과
 - 2022년에는 경제 및 보건 부문의 점진적인 정상화와 그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율의 감소로 인해 재정수지가 개선될 전망
- (공공채무)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받는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2020년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9.1%에 달했고, GDP 대비 공공채무 또한 115.0%까지 증가함
 -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17년 98.1%, 2018년 97.8%, 2019년 97.5%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2020년 급격히 증가함
 - 2021년 GDP 대비 공공채무는 0.5%p 증가한 115.6%를 기록하고 이후 경제의 지속적인 반등으로 인해 2022년에는 114.0%로 약간 하락할 전망

〈표 IV-2〉 프랑스의 2022년 예산법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대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정수지(Déficit public)	-2.3	-3.1	-9.1	-8.4	-4.8
재정지출 증가율 (Croissance volume de la dépense publique, %)	-0.9	1.9	6.6	3.4	-3.5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4.7	43.8	44.5	43.7	43.5
재정지출(Taux de dépenses publiques (hors CI))	54.0	53.8	60.8	59.9	55.6
공공채무(Dette publique)	97.8	97.5	115.0	115.6	114.0

출처: 프랑스 재무부, PLF 2022

〈표 IV-3〉 프랑스의 2022년 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21 본예산	2021 수정예산	2021 전망	2022 예산법안	2020 ~2021 차이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55.5	503.8	494.8	454.6	-40.2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84.9	433.9	424.7	385.0	-39.6
부처별 지출(Crédits des ministères)	270.8	272.4	272.3	282.8	10.5
미래를 위한 투자 미션 (Mission "Investissements d'avenir")	4.0	3.9	4.0	3.5	-0.5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Mission "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6.0	44.7	36.9	0.2	-36.7
프랑스 활성화 계획(Mission "Plan de relance")	21.8	26.7	26.7	12.9	-13.8
특별 할당 계정에 자금 이전(Abondement du budget général au CAS PFE(PLFR 1))	0.0	2.0	1.0	0.7	-0.3
프랑스 개발청 자금 지원(Renforcement des fonds propres de l'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1.5	1.5	1.5	0.2	-1.3
부채비용(Charge de la dette(yc SNCF))	36.8	38.7	38.4	38.4	-0.1
코로나 채무 제한 (Cantonement de la dette covid)	-	-	-	1.9	1.9
연금기여금액(Contributions au CAS "Pensions")	44.0	44.0	43.9	44.4	0.5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70.6	69.9	70.1	69.6	-0.5
지방정부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3.4	43.4	43.7	43.2	-0.4
EU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7.2	26.4	26.5	26.4	-0.1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283.2	285.5	300.8	310.9	10.1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257.9	259.0	278.6	292.0	13.4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73.3	75.4	77.0	82.4	5.3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31.0	28.4	36.4	39.5	3.1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7.1	17.0	17.5	18.4	0.9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85.5	88.3	92.4	97.5	5.1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51.1	49.8	55.3	54.4	-0.9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5.3	26.5	22.2	18.9	-3.3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0.9	-1.7	-3.5	0.3	3.8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0	0.1	0.0	0.0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173.3	-220.1	-197.4	-143.4	54.0

출처: 프랑스 재무부, PLF 2022

〈참고 IV-1〉 2021년 수정예산법안(PLFR: Projet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21)

□ FY2021 2차 수정예산법안(PLFR 2: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pour 2021-2) 발표(2021.11.3.)

- (경제 전망) 2021년 2차 수정예산법안에서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9월 편성된 2022년 예산법안 전망치인 6% 보다 다소 높은 6.25%로 전망
- (재정 전망) 2021년 2차 수정예산법안에서의 재정적자는 2,052억유로(GDP 대비 8.1%)로 1차 수정예산법안(GDP 대비 8.4%) 대비 149억유로 개선
- (공공채무) GDP 대비 공공채무는 115.3%로 전망
- (주요 재정조치) 인플레이션 수당(indemnité inflation) 지급, 장기구직자 고용에 대한 보너스 지급 등이 반영

〈 FY2021 2차 수정예산법안 〉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 예산법 (A)	2021 1차수정 예산법 (B)	2021 수정전망 (2022 예산법안)	2021 2차수정 예산법안 (C)	C-A	C-B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455.5	503.8	494.8	499.8	44.3	-3.9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84.9	433.9	424.7	429.8	44.8	-4.1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70.6	69.9	70.1	70.1	-0.5	0.2
재정수입(Recettes nettes)	283.2	285.5	300.8	299.9	16.8	14.5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57.9	259.0	278.6	277.6	19.7	18.6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73.3	75.4	77.0	77.0	3.8	1.6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31.0	28.4	36.4	36.4	5.4	8.0
에너지제품소비세(TICPE)	17.1	17.0	17.5	17.5	0.4	0.4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85.5	88.3	92.4	92.0	6.5	3.6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51.1	49.8	55.3	54.7	3.6	4.9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5.3	26.5	22.2	22.4	-3.0	-4.1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0.9	-1.7	-3.5	-5.2	-4.2	-3.4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0	0.1	-0.1	-0.1	-0.1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173.3	-220.1	-197.4	-205.2	-31.9	14.9

출처: 프랑스 재무부, 2021년 수정예산법안(PLFR 2021)

출처: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21," 2021.11.3., <https://www.vie-publique.fr/loi/282248-second-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2021-plfr-budget-rectificatif>, 검색일자: 2021.11.30.

〈참고 IV-2〉 최고재정자문위원회의 예산법안 평가

-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High Council of Public Finances)는 2022년 프랑스 예산법안(PLF: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에 대한 의견을 발표 (2021.9.22.)
 - 2022년 예산법안의 기본가정(경제성장률 2021년 6%, 2022년 4%)은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 세입 증대로 인해 2021년 재정적자는 예산법안 전망치(8.4%)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 2022년 재정적자 전망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
 - 경제활동 개선과 재정지출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GDP 대비 공공지출은 2019년에 비해 2%p 정도 높을 전망으로, 재정수지에 지속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공공채무가 2022년 114%로 2019년보다 17%p 증가하여,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경계가 필요하다고 언급
 - 정부가 발표한 투자 계획 등 추가 지출 사항이 예산법안에 포함되지 않고 의회 토론에서 수정을 통해 채택될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반영한 재정전망 평가를 제시할 수 없다고 언급함

출처: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Avis n° HCFP - 2021 - 4, relatif aux projets de lois de finances et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l'année 2022," 2021.9.22.,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1-4-lois-de-finances-2022>, 검색일자: 2021.11.30.

2 예산기조

- 2022년 프랑스 예산법안은 경제 및 재정의 점진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됨
 -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
 - 2020년 시작된 프랑스 활성화 계획(France Relance)은 2022년까지 지원이 계속될 예정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위한 지원을 강화
 - 비상 지원 조치는 점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고 있음
 -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예외적인 비상 지원 조치는 점진적으로 종료되면서 2020년 9.1%까지 증가했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2년 4.8%로 안정화될 전망
 - 코로나19 상황 개선과 경제 반등으로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 미션 지출은 2022년 보건 관련 장비 구매를 위한 금액만 반영
 - 공공재정의 회복을 지원
 - 2042년까지 경제성장과 추가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상환할 계획
- 정의와 국방을 지원하여 프랑스의 주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국방’ 미션 지출은 전년보다 17억유로 증가한 409억유로 할당
 - 2022년 ‘정의’ 미션 지출 증가율은 8%로 높게 나타나고, 지역 사법조직 강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
- 교육, 연구, 청년을 위한 투자를 정부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재정을 지원함
 - 2022년 학교 교육(enseignement scolaire) 미션 지출은 2021년과 비교해 약 17억 유로 증가할 전망이며, 지난 5년의 마크롱 정부 기간 동안 약 60억유로 증가함
 - 연구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미션 지출은 2030년 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2022년 지출은 전년 대비 8억유로 증가

-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1인당 해결책 1개’(1 jeune, 1 solution) 프로그램을 2022년 6월까지 연장

* 청년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동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를 위해 지원

-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수소 개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노력을 확대

3 예산안 주요내용(PLF 2022)

- 2022년 예산법안(PLF 2022: projet de loi de finances 2022)은 2021년 9월 22일 발표됨⁹⁷⁾

가. 세입

- 경제활동의 개선으로 2022년 조세수입은 2021년과 비교해 134억유로 증가한 2,920억 유로로 전망
 - 경제 회복으로 소득세는 전년 대비 53억유로 증가한 824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법인세율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전년 대비 31억유로 증가한 395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소비의 반등과 연료 소비 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제품소비세가 각각 전년 대비 51억유로와 9억유로 증가할 전망

97) 재무부,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2,” 2021. 9. 22.,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2-plf>, 검색일자: 2021. 11. 30.;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LF) pour 2022 en Conseil des ministres,” 2021. 9. 22.,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presentation-du-projet-de-loi-de-finances-plf-pour-2022-en-conseil-des>, 검색일자: 2021.11.30.

- 기타세입은 주택세 인하 등 단계적 세금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억유로 감소한 544억유로로 전망
- 세외수입을 포함한 총 재정수입은 2021년보다 101억유로 증가한 3,109억유로로 전망됨
 - 2022년 세외수입은 2021년보다 33억유로 감소한 189억유로로 전망

나. 세출

- 2022년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은 3,021억유로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18억유로 증가할 전망
 - * 조정가능 지출은 일반 예산의 세출, 조정가능 특별회계의 세출 등 정부가 직접 통제 가능한 지출을 의미
- 총정부지출목표(Objectif de Dépenses Totales de l'État, ODETE)는 2022년 예산법안에서 4,948억유로로 2021년 예산법에 비해 3억유로, 2021년 수정예산법에 비해 196억유로 감소
 -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미션 지출은 위생장비 구매를 위한 2억유로 편성만 반영됨
 - 2021~2022년에 집중된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미션 지출은 2021년 218억유로, 2022년 129억유로를 각각 배정
 - 2022년 예산법안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계획 관련 지출이 감소하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인 방위, 교육, 환경 분야에 대한 지출이 강화됨

〈표 IV-4〉 프랑스의 2022년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33개 미션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¹⁾	2021 본예산 (A)	2022 예산법안 (B)	B/A (%)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8	2.8	0.0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3.5	3.6	2.9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2.8	2.8	0.0
정부개발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3.9	4.9	25.6
퇴역군인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1	2.0	-4.8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15.9	17.1	7.5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6	0.6	0.0
예비비(Crédits non répartis)	0.3	0.4	33.3
문화(Culture)	3.0	3.3	10.0
국방(Défense)	39.2	40.9	4.3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0.8	0.9	12.5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E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	19.2	19.5	1.6
경제(Économie)	2.5	2.9	16.0
정부재정관리·부채관리·국채발행 등(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2.8	3.7	32.1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54.9	56.5	2.9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7.5	7.5	0.0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1.8	1.9	5.6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4.0	3.5	-12.5
정의(Justice)	8.2	8.9	8.5
언론(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0.6	0.7	16.7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4	2.4	0.0
의회·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1.0	1.0	0.0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8.2	29.0	2.8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2	6.1	-1.6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Plan d'urgence face à la crise sanitaire)	6.0	0.2	-96.7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21.8	12.9	-40.8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9	4.2	7.7
보건의료(Santé)	1.3	1.3	0.0
치안(Sécurités)	13.9	14.7	5.8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26.1	27.5	5.4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1.3	1.6	23.1
공공부문 개혁(Transformation et fonction publiques)	0.7	0.8	14.3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3.4	13.2	-1.5
미션별 합계	302.6	299.3	-1.1

주: 1) 투입승인(AE)은 투자될 수 있는 예산지출상한액이며, 지불예산(CP)은 투입승인의 한도 내에서 체결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출명령이 될 수 있거나 지불될 수 있는 지출상한액을 의미(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0, p.80)

출처: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1, 2022.9.22.

4 주요 재정정책

가. 예외적 경제 지원 제도의 점진적 폐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는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지원 조치가 2020년 3월부터 시행됨
 - 부분실업 제도를 통해 고용을 지원하고, 연대기금 지원을 통해 매출 감소에 직면한 회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함
 - 부분실업 제도는 현재까지 약 840만명에 대해 약 350억유로를 지원함
 - 연대기금 제도는 현재까지 약 2백만개 기업에 대해 약 350억유로를 지원했고, 지원 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TPE/PME)에 해당함
 - 또한 최대 3,000억유로 규모의 대출을 보증하는 예외적 대출 시스템을 도입함
- 2021년 여름 이후부터 지원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음
 - 부분실업 지원의 경우 2021년 10월, 연대기금 지원의 경우 2021년 9월 종료되고, 영향이 큰 기업 및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만 연장될 수 있음
- 2022년에는 보건 부문의 정상화와 경제 반등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지원조치는 시행되지 않을 예정
 - 보건 위기 대응 비상계획 미션 지출은 마스크 구매 등 보건 관련 장비 구매를 위해 2억유로가 편성됨

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위한 투자

- 공공 및 민간 부문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Ma Prime Rénov’(my premium renovation)”⁹⁸⁾에 20억유로 지원

98) 주택의 단열 개선, 보일러 교체, 효율적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참고

- 공공 부문 건물의 열에너지 활용 개선에 40억유로 지원
- 생물 다양성 회복 및 토지의 인공적 이용(artificialisation) 제한,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지원
 -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략 2021-2030(Stratégie Nationale Biodiversité 2021-2030)의 시행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보존·복원·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 토지의 인공적 이용(artificialisation) 제한을 위해 농업 지역의 대형 쇼핑몰 건설 제한
 - 프랑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를 위해 지원
- 철도부문 강화를 위해 지원
 - 프랑스철도공사(SNCF)의 채무 중 2020년 250억유로에 이어 2022년 100억유로를 인수할 계획
 - 프랑스 활성화 계획의 일부로 철도 화물 지원에 47억유로 할당
 - 야간 열차 확대 및 철도 부문 현대화를 위해 지원
- 재생에너지 개발 및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지속
 - 2022년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총 61억유로 지원
 -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에 12억유로를 지원해 화석 연료 사용을 저탄소 열생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수소 부문 개발을 지원함

〈참고 IV-3〉 녹색 예산(budget vert)

- 녹색예산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
 -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위험 대비,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및 폐기물,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및 보호 등 총 6가지 환경 목표와 관련하여 2022년 예산안에 담긴 정책들의 등급을 제시함
- 2022년 예산법안에 포함된 총국가지출목표(ODETE) 4,951억유로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전체 535억유로로 나타남
 - 2022년 예산법안에서 6가지 환경 목표 중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적어도 부정적이지 않은 지출은 325억유로로 나타남
 - 프랑스 활성화 계획을 통한 친환경 부문에 대한 추가 지출은 57억유로
 -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합비용은 45억유로로 나타나며, 철도 기반 시설과 관련한 지출을 포함함
 -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108억유로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금 면제 및 감면(64억유로)이 포함됨

다. 마크롱 정부 우선순위 정책 이행 지속

-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 군 전력증강법(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 LPM)에 따라 2022년 국방 미션 지출은 17억유로 증가한 409억유로로 편성
 - 부대와 군사 장비 및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정보 및 사이버 부문을 지원하며 국방 산업의 수출을 지원
 - 사이버 범죄, 환경 피해, 마약 밀매 및 가정 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내무부 (ministère de l'Intérieur)의 경찰·헌병 등 인력 확대 공약을 2022년에도 지속할 계획

- 보호 장비의 갱신 및 강화를 비롯해 근무 조건 개선에도 투자하여 2022년 총 13억유로를 지원
- 지역 사법 조직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등 “정의(Justice)” 미션 지출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 증가

□ 청년 지원 정책 강화

- 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 교원 급여 인상을 위해 2022년 7억유로 지원
 - CP(cours préparatoire,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와 CE1(cours élémentaire1,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의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 이하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2022년 완료될 예정
 - 만 18세 청년⁹⁹⁾에게 최대 2년 동안 문화 생활비 300유로를 지급하는 문화패스(pass culture)를 청소년에게 까지 확대하여 프랑스 청년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도모¹⁰⁰⁾
 - 학교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문화패스 신청자에 대해 15세 청소년 20유로, 16세 청소년 30유로, 17세 청소년 30유로의 문화패스를 지급
- 고등교육, 연구 및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지원
 - 2021년 40억유로와, 2022년 50억유로 등 연구 예산을 2021~2030년 사이에 총 250억유로를 증가시켜 연구 인력에 대한 대우 및 연구 장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원
 - 사회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bourses sur les critères sociaux)이 2022년 1% 인상될 예정
-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6~18세 청소년에 대해 1인당 50유로의 ‘스포츠 패스(Pass Sport)’를 지원

99) 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00유로의 크레딧이 지급되며, 18세 청년에 대해 1회 지급

100) 프랑스 정부, “Le « Pass culture » étendu aux jeunes de 15 à 17 ans,” 2021.11.16., <https://www.gouvernement.fr/le-pass-culture-etendu-aux-jeunes-de-15-a-17-ans>, 검색일자: 2021.11.30.

- 개학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장애아동교육수당(Allocation d'éducation pour enfant handicapé, AEEH), 성인장애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을 수급하는 저소득 가구 및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고용 및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훈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1인당 해결책 1개'(1 jeune, 1 solution) 프로그램을 2022년 6월까지 연장
 -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18세 미만 채용 보조금 5,000유로, 18세 이상 채용 보조금 8,000유로를 고용주에게 지급¹⁰¹⁾
 - 2021~2022년에 25만명 이상의 청년에 대한 노동 훈련 제공에 약 10억유로 지원
 - 16,000명의 보건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 신설을 포함

□ 기업 활동 지원 지속 및 취업 지원 강화

- 부분실업에 대한 소득보전이 최대 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부분활동계획(Activité Partielle de Longue Durée, APLD)¹⁰²⁾은 2022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하여 충격이 큰 부문에 대해 지원을 지속
- 코로나19로 인해 직업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 생태학적 전환, 보건 분야의 유망한 직업과 관련한 훈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지속
-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으로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구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장기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계획을 시행
 - 구직자가 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장기 실업 방지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에 총 14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중소기업 직원의 재교육에 6억유로 지원
 - 장기구직자를 포함한 구직자 교육에 5억 6천만유로 지원

101) 실습생이 실습 계약(Contrat d'apprentissage)이나 전문화 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을 통해 고용된 경우

102)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일정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

- 전문화 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¹⁰³⁾을 통한 장기구직자 채용에 대해 2억 4천만유로의 고용 보너스 지급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혁 및 세제 간소화

- 2017년부터 법인세의 점진적 인하가 계속되어 2022년에는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 세율이 25%로 인하되며, 이에 따라 2017년에 비해 2022년 법인세 수입은 약 110억 유로 감소할 전망
- 2021년부터 시작된 생산세(impôts de production) 인하 지속으로 약 60만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00억유로의 세금 감면이 예상됨
 - 기업부가가치 부담금(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 납부 대상 기업에 대해 납부 세액 절반 감액, 산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Bâties: TFPB)와 기업토지세(composée de la cotisa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감면, 지역경제기여금(Contribution Economique Territoriale: CET) 납부 대상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
 - 사업 인수 비용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2~2023년에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 지도자 교육에 대한 세금공제를 두 배로 확대

103) 전문화 계약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체결되는 고용 계약으로, 전문자격 취득을 통해 구직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출처: 프랑스 내무부, '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 <https://www.demarches.interieur.gouv.fr/professionnels/contrat-professionnalisation>, 검색일자: 2021.11.30.)

라. 복지지출 관리 정책

- 프랑스 재무부는 FY2022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을 발표(2021.9.24.)¹⁰⁴⁾
 - 경제활동 개선으로 인한 수입 증대로 2022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2021년과 비교해 130억유로 개선된 216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2022년 총 의료보험지출목표(ONDAM: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는 2,363억유로로 2021년(2,371억유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코로나19 관련 지출 49억유로가 포함되며, 해당 조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백신 접종 캠페인 및 백신 구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33억유로
 -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PCR 검사에 16억유로
 -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의료보험지출 목표 증가율은 3.8%로 나타남

〈표 IV-5〉 프랑스의 2022년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22년 지출 전망	전년대비 증 가율
의료비지원(Soins de ville)	102.1	-2.3
의료시설 관련 비용(Établissements de santé)	95.3	0.5
노인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지출 (Établissements et services pour personnes âgées)	14.3	2.1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지출 (Établissements et services pour personnes handicapées)	13.3	6.4
지역출자기금 및 국가투자지원 관련 비용(Fonds d'intervention régional et au soutien national à l'investissement)	5.9	43.9
기타지원(Autres prises en charge)	5.4	-26.0
총지출(ONDAM total)	236.3	-0.3

출처: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2021.10.7.

104) 재무부, "L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22," 2021.9.24., <https://www.economie.gouv.fr/presentation-projet-loi-financement-securite-sociale-2022#>, 검색일자: 2021.9.28.

- 202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은 다음의 5가지 주요 정책 지원 조치를 포함
 - 원격 모니터링의 개발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선 등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
 -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치 강화
 - 예방 및 치료 접근성 향상
 - 제약 혁신 장려
 -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위험에 대한 자영업자의 보험 시스템 접근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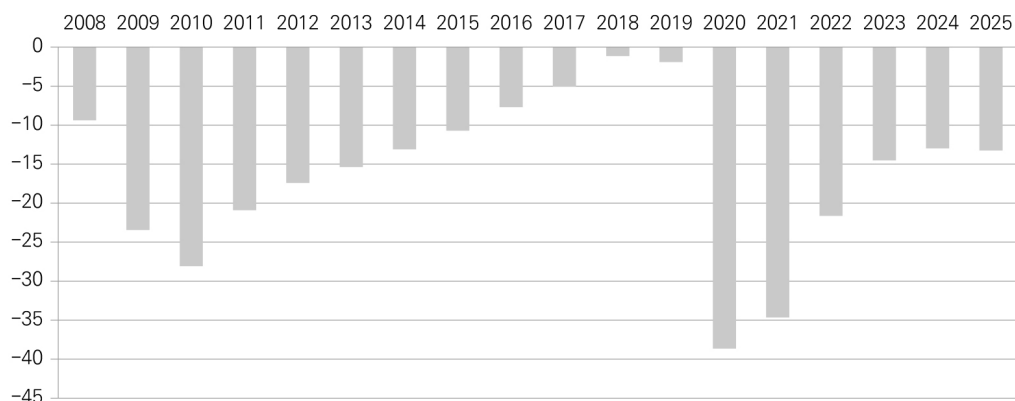
〈표 IV-6〉 프랑스의 202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전망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건강보험(CNAM Maladie)	-30.4	-30.0	-19.7	-13.7	-14.8	-14.8
산재보험(CNAM AT-MP)	-0.2	0.6	1.3	1.6	2.1	2.5
임금근로자 노령보험국가기금(CNAV)	-3.7	-3.7	-2.5	-4.2	-5.8	-7.6
가족수당국가기금(CNAF)	-1.8	1.2	1.7	3.6	4.5	5.4
자율연대국가기금(CNSA)	-	-0.4	-0.9	-0.8	1.6	1.7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RG)	-36.2	-32.3	-20.0	-13.6	-12.4	-13.0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2.5	-2.4	-1.6	-1.0	-0.6	-0.3
사회보장부문 지출(RG+FSV)	-38.7	-34.6	-21.6	-14.6	-13.0	-13.3

출처: 프랑스 재무부, *PLFSS 2022: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2021., p.40

〔그림 IV-2〕 프랑스의 사회보장부문 총재정수지 추이



주: 2021~2025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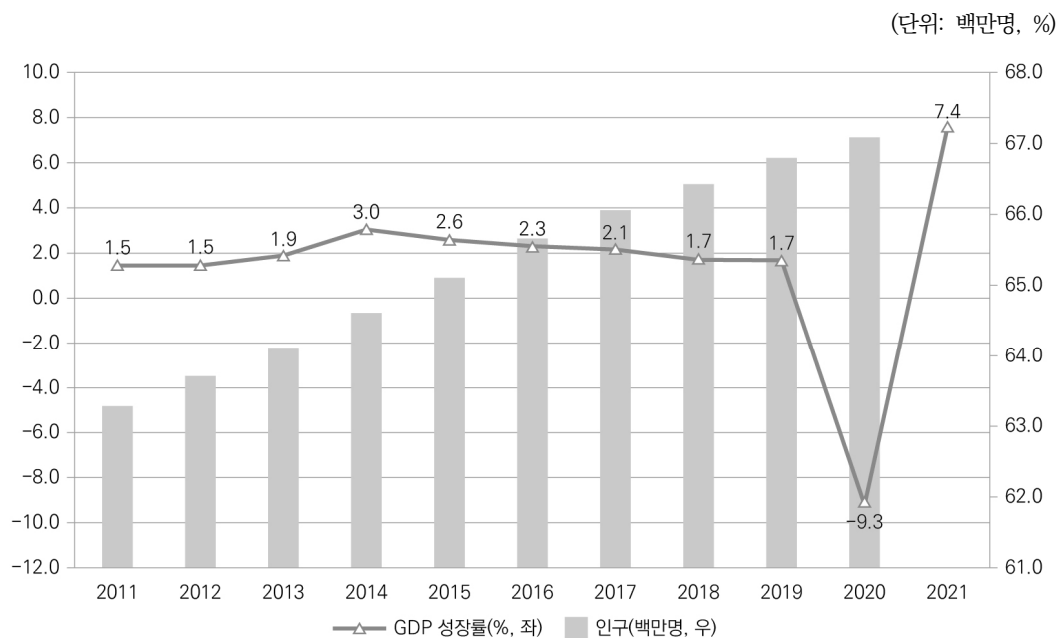
출처: 프랑스 재무부, *PLFSS 2022: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2021., p.40

V. 영국¹⁰⁵⁾

- FY2022-23: 2022년 4월 ~ 2023년 3월
- 출처
 -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 10.
 -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Speech,” 2021.10. 27.
 - HM Treasury, “Budget and Spending Review–October 2021: What you need to know,” 2021. 10. 27.
 - HM Treasury, “A stronger economy for the British people,” 2021. 10. 27.
 -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21*, 2021. 10.
 - HM Treasury, *Spring Statement 2022*, 2022.3.
 -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arch 2022*, 2022.3.
- 환율: 1파운드 = 약 1,573.96원(2021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21년 경상 GDP 3조 4,693억달러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2021년 기준 55.2%
- 인구: 6,708만명(2020년 기준)

105)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22.5.30. 추출, <https://ecos.bok.or.kr/>) 기준; 경제규모, 수출입의 대GDP 비율, 인구, GDP는 OECD Stat(2022.5.30. 추출, <https://stats.oecd.org/>) 기준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출처: OECD, OECD Stat, 2022.5.30. 추출(<https://stats.oecd.org/>)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1. 02. 22.	FY2020-21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1. 03. 03.	2021 봄 예산안(<i>Budget 2021</i>) 발표
2021. 03. 03.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2021년 3월) 발표
2021. 03. 23.	예산책임청(OBR), '2021년 복지 지출 보고서' 발표
2021. 05. 13.	재무부, FY2021-22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발표
2021. 07. 06.	예산책임청(OBR), 2021 재정 리스크 보고서 발표
2021. 09. 07.	NHS 및 성인 사회적 돌봄 개혁을 위한 투자와 신규 자원 조달 계획 발표
2021. 09. 14.	보리스 존슨 총리, 가을·겨울 코로나19 대응 계획 발표
2021. 10. 19.	'넷 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 Build Back Greener)' 발표
2021. 10. 27.	재무부,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 검토 발표
2021. 10. 27.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2021년 10월) 발표
2022. 02. 22.	FY2021-22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2. 03. 23.	'Spring Statement 2022' 발표
2022. 03. 23.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2022년 3월) 발표

[요 약]

- (경제 전망) 영국의 GDP 성장률은 2021년에 6.5%, 2022년에 6.0%로 전망됨 (2021년 10월 전망 기준)
 - (재정 전망)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22-23에 3.3%로 전년 대비 하락하고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FY2021-22에 98.2%로 정점을 기록한 후 나머지 전망기간(~FY2026-27) 동안 매년 감소할 전망(2021년 10월 전망 기준)
 - (수입·지출) FY2022-23에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전년 대비 약 11.6% 증가한 9,624억파운드(GDP의 38.8%), 총관리지출은 전년 대비 미미(약 4억파운드)하게 증가한 1조 454억파운드(GDP의 42.1%)로 전망됨
- (예산기조) 정부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원을 제외한 재정기조는 FY2020-21~FY2022-23 동안 대체로 안정적인
- (정책 방향)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팬데믹 관련 긴급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국민의 우선순위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지출 관련 자금 확대, 교육 캐치업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 배정, 저가 주택 건설 투자 등
 - (성장에 대한 투자) 혁신, 인프라, 역량(skill) 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 계획(Plan for Growth)을 실행
 - (국민 및 기업 지원) 통합급여의 수당삭감을 하향 조정, 취업 및 역량개발 지원, 아동 및 가족 지원, 변화가 회복 지원을 위한 조세 지원 등
 - (친환경적 재건) '10대 녹색산업혁명 계획'의 우선순위 이행과 추가 핵심 분야 지원 등 녹색 산업혁명에 대한 공공 투자 추진
 - 이 외에도 지역균형발전(Levelling up) 추진,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비전 달성, 브렉시트의 기회 포착 등을 위한 정책 추진 예정

영국 재무부는 2021년 10월 27일에 가을 예산안과 함께 지출 검토를 발표하였고 2022년 3월 23일에 최근 경제·재정 전망을 반영한 ‘Spring Statement 2022’를 제시함.

이하 내용은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 검토(*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와 2021년 10월 경제·재정 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October 2021*)을 중심으로 영국의 향후 경제·재정 계획을 정리한 것이며, ‘Spring Statement 2022’와 2022년 3월 경제·재정 전망의 주요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1 경제 및 재정 전망¹⁰⁶⁾

* 이하 내용은 2021 가을예산안의 기준인 ‘2021년 10월’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최근 업데이트 전망인 ‘2022년 3월’ 기준 전망은 <참고 V-1>에 제시함

가. 경제 전망(2021년 10월 전망 기준)

- (경제성장률) 영국의 GDP 성장률은 2021년에 6.5%, 2022년에 6.0%로 전망됨(<표 V-1>)
 - ‘2021년 10월 전망’에서 ‘2021년 3월 전망’과 비교해 2021년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반영해 GDP 성장률을 2.4%p 상향 조정, 2022년은 소비와 주거 투자의 성장 둔화를 반영해 1.3%p 하향 조정함
 - GDP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기를 ‘2021년 3월 전망’보다 수개월 빠른 2021년 말 ~ 2022년 초로 전망
 - 팬데믹이 잠재 생산에 미치는 중장기 경제적 손실을 기존 전망의 3%보다 낮은 2%로 추계함에 따라 중기적으로 실질 GDP를 상향 조정함

106)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21*, 2021.10.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 (노동시장) 영국의 실업률은 2021년에 4.9%로 전년보다 상승한 후, 2022년에는 4.8%로 다소 하락할 전망
- ‘코로나19 고용 유지 보조금 지원제도’가 종료(2021년 9월)된 후 실업률은 2021년 4분기에 5.2%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
 - 실업률은 이후 하락하여 2024년에 4.2%로 예상되며 나머지 전망기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할 것임
 - 생산과 고용의 빠른 회복과 기록적인 빈 일자리 수를 반영해 단기 실업률 전망치를 ‘3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함
- (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1년 9월에 3.1%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몇 달간 더욱 상승해 2022년 2분기에 4.4%로 정점을 기록할 전망
- 유틸리티 가격 상승, 운송 비용 증가, 공급 병목현상 등이 CPI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임
 - 에너지 가격 안정화, 공급 병목현상 완화, 재정 패키지의 추가 부양에 대응한 완만한 통화 긴축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2024년에는 목표치인 2%로 돌아갈 전망

〈표 V-1〉 영국의 주요 경제 전망(2021년 10월 전망치)

(단위: %, 전년 대비 % 변화,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GDP성장률	-9.8	6.5	6.0	2.1	1.3	1.6	1.7
(21년 3월 전망 대비 변화(%p))	0.1	2.4	-1.3	0.3	-0.2	-0.1	.
- 가계소비	-10.9	4.7	9.8	1.3	1.7	1.3	1.0
- 일반정부소비	-6.5	14.7	2.0	1.5	1.2	1.7	2.1
- 기업투자	-10.2	-2.4	15.7	4.7	-0.8	4.8	5.8
- 일반정부투자	3.5	14.7	-2.1	6.5	-1.0	1.1	1.8
- 순수출 ¹⁾	0.8	-0.8	-2.5	0.3	0.1	-0.1	-0.2
소비자물가(CPI)상승률	0.9	2.3	4.0	2.6	2.1	2.0	2.0
고용(백만명)	32.5	32.2	32.6	33.0	33.2	33.3	33.4
평균 임금 상승률	1.2	5.0	3.9	3.0	2.2	2.9	3.5
실업률(LFS)(%)	4.6	4.9	4.8	4.3	4.2	4.2	4.2

주: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21*, 2021.10., Table 1.1; Table 2.9

나. 재정 전망(2021년 10월 전망 기준)

1) 재정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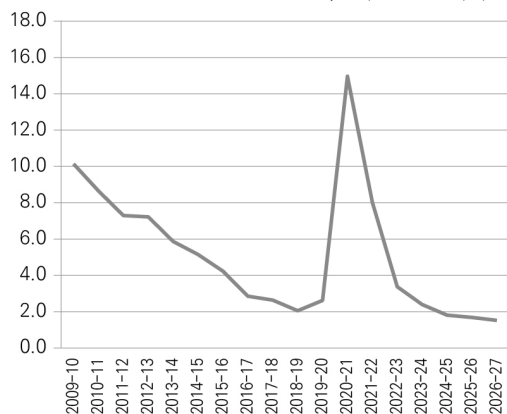
- (공공부문 순차입)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21-22에 7.9%, FY2022-23에 3.3%, FY2023-24에 2.4%를 기록하며 매년 하락할 전망(그림 V-1)
 - 팬데믹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2022년에 차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GDP 대비 공공 부문 순차입 비율이 FY2022-23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
 - 이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26-27에 1.5% 수준까지 점차 감소하여 팬데믹 이전인 FY2019-20의 수준을 하회할 전망
- (경상예산수지) GDP 대비 경상예산 적자는 FY2020-21의 11.8%에서 FY2021-22에 5.3%, FY2022-23에 0.6%까지 급격히 하락할 전망
 - 이후 중기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예산은 FY2023-24에 흑자로 전환되고 FY2026-27에는 GDP 대비 1.1%(330억파운드)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공공부문 순투자) FY2021-22부터 GDP 대비 공공부문 순투자 비율은 3%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

2) 채무 전망

- (공공부문 순채무) 중앙은행을 포함한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1-22에 98.2%로 증가하여 FY1962-63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그림 V-2)
 - 이후 나머지 전망기간 동안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매년 감소해 FY2026-27에는 88.0%에 이를 전망이나,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20년 3월 전망'의 예상치에 비해 약 20%p 더 높은 수준임
 - 전망기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차입 전망 개선을 반영해 '2021년 3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
-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는 FY2021-22에 85.2%, FY2022-23에 85.4%, FY2023-24에 85.7%로 증가한 후 FY2024-25년 ~ FY2026-27에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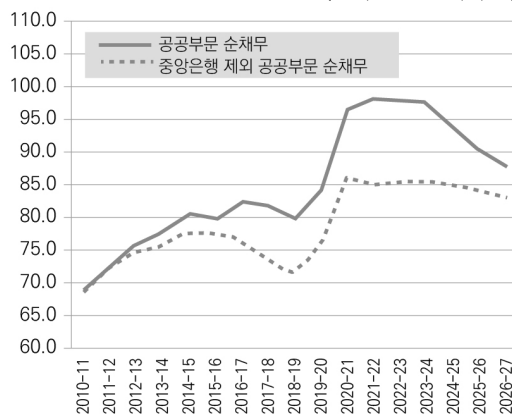
[그림 V-1] 영국의 공공부문 순차입 전망

(단위: GDP 대비 %)



[그림 V-2] 영국의 공공부문 순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21*, 2021.10., Chart 1.8; Chart 3.14 일부 수정

<표 V-2> 영국의 주요 재정총량 전망(2021년 10월 전망치)

(단위: GDP 대비 %,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세입·세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37.9	37.2	38.8	39.6	39.8	39.9	40.0
총관리지출(TME)	53.1	45.1	42.1	41.9	41.6	41.6	41.6
공공부문 경상지출	47.1	40.1	37.1	36.8	36.6	36.6	36.6
공공부문 순투자	3.5	2.6	2.7	2.9	2.7	2.7	2.7
감가상각	2.5	2.4	2.3	2.3	2.3	2.3	2.3
재정적자							
경상예산 적자	11.8	5.3	0.6	-0.5	-0.9	-1.0	-1.1
공공부문 순투자	3.5	2.6	2.7	2.9	2.7	2.7	2.7
공공부문 순차입	15.2	7.9	3.3	2.4	1.7	1.7	1.5
경기조정 순차입	15.1	8.3	3.9	2.7	1.8	1.7	1.5
채무							
영국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 ¹⁾	86.1	85.2	85.4	85.7	85.1	84.2	83.3
공공부문 순채무 ¹⁾	96.6	98.2	97.9	97.8	94.7	90.5	88.0
국제 비교							
일반정부 순차입	15.4	8.1	3.3	2.3	1.8	1.8	1.5
일반정부 총채무	105.9	100.9	98.7	98.2	97.6	96.4	95.1

주: 1) 3월말 기준, GDP는 3월 말에 중심화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21*, 2021.10., Table 1.3; Table 3.38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Table 1.14

〈참고 V-1〉 2022년 3월 경제·재정 전망의 주요 내용¹⁰⁷⁾

- (개요) 예산책임청(OBR)은 ‘Spring Statement 2022’와 같은 날 발표된 ‘2022년 3월 경제·재정 전망’을 통해 지난 2021년 10월 전망을 업데이트함
 - * 예산책임청은 연 2회(봄, 가을) 경제·재정 전망을 발표함
- (경제 전망) 경제 회복 속도, 글로벌 공급망 문제, 러시아 침공의 영향을 고려해 2022년 영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3.8%로 전망
 - (경제성장률)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실질 소득과 소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2년 경제성장률을 2021년 10월 전망치(6.0%) 대비 하향 조정
 - (물가) CPI 인플레이션이 2022년 4분기에 8.7%까지 상승해 최근 40여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며 연간 상승률은 2022년 7.4%, 2023년 4.0%로 예상됨
 - 명목 임금증가율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4월에 시작되는 순조세 증가의 영향으로 FY2022-23에 인당 실질 가치분 가계소득이 2.2% 감소(통계 시작 이후 단일 회계연도 기준 최대 하락)
 - (노동시장)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제도 종료 이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반영해 2022년 실업률을 4%로 직전 전망(21.10.) 대비 하향 조정
- (재정 전망) 팬데믹 대응 이후 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어 FY2021-22에 직전 전망(21.10.)보다 차입이 감소할 전망이나, 정부 채무 비용 부담과 한시적 지원 조치 등으로 FY2022-23에는 직전 전망보다 차입이 다소 상승할 전망
 - (수입 및 지출) FY2022-23에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9,875억파운드, 총관리지출은 1조 870억파운드로 직전 전망(21.10.) 대비 모두 상향 조정함
 -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복지 지출과 채무이자 지출 증가를 반영
 - (재정수지) 채무이자 증가와 물가상승에 대응한 가계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FY2022-23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는 직전 전망(21.10.) 대비 161억파운드 상향 조정되었고 GDP 대비 비율은 3.9%를 기록할 전망

107)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22년 3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3., pp.53~54. 재인용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arch 2022*, 2022.3.

- (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1-22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FY2026-27에 약 83.1%로 떨어질 전망

〈영국의 주요 경제 전망(2022년 3월 전망치)〉

(단위: %, 전년 대비 % 변화,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GDP성장률	-9.4	7.5	3.8	1.8	2.1	1.8	1.7
(21년 10월 전망 대비 변화(%p))	0.5	1.0	-2.2	-0.3	0.8	0.2	0.0
- 가계소비	-10.5	6.1	5.4	1.0	1.5	1.1	1.2
- 일반정부소비	-5.4	14.5	2.6	1.2	1.4	1.6	2.0
- 기업투자	-11.4	-0.7	10.6	5.6	3.6	5.4	4.5
- 일반정부투자	2.7	11.9	-1.1	7.8	-2.0	1.1	1.7
- 순수출 ¹⁾	0.8	-1.2	-0.6	-0.1	0.5	0.0	-0.1
소비자물가(CPI)상승률	0.9	2.6	7.4	4.0	1.5	1.9	2.0
고용(백만명)	32.5	32.4	32.7	32.9	33.1	33.2	33.3
평균 임금 상승률	1.8	6.2	5.3	2.8	2.6	2.9	3.2
실업률(LFS)(%)	4.6	4.5	4.0	4.2	4.1	4.1	4.1

주: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arch 2022*, 2022.3., Table 1.1, Table 2.7

〈영국의 주요 재정총량 전망(2022년 3월 전망치)〉

(단위: GDP 대비 %,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세입·세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37.0	38.0	39.3	40.1	40.0	40.0	40.1
총관리지출(TME)	52.1	43.4	43.2	42.0	41.3	41.2	41.1
공공부문 경상지출	46.2	39.5	38.7	37.0	36.6	36.5	36.4
공공부문 순투자	3.4	1.6	2.2	2.7	2.5	2.5	2.5
감가상각	2.5	2.3	2.3	2.3	2.3	2.3	2.3
재정적자							
경상예산 적자	11.7	3.8	1.7	-0.8	-1.2	-1.3	-1.4
공공부문 순투자	3.4	1.6	2.2	2.7	2.5	2.5	2.5
공공부문 순차입	15.0	5.4	3.9	1.9	1.3	1.2	1.1
경기조정 순차입	14.9	6.1	4.4	1.9	1.3	1.3	1.1
채무							
영국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	83.9	82.5	83.5	82.9	81.9	80.9	79.8
공공부문 순채무	94.0	95.6	95.5	94.1	91.2	85.8	83.1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arch 2022*, 2022.3., Table 1.3; Table 3.38

2 예산기조 및 정책 방향

가. 2021 가을 예산안의 재정 기조

- 2021 가을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동안 경제와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재정의 지속가능한 경로를 유지하는 균형적 접근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음¹⁰⁸⁾
 - 팬데믹 이후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에 3,230억파운드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제공
 - 자본 투자 변화가 포함된 '2020 예산안'까지 고려하면 현 정부의 결정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경제를 위해 3,780억파운드의 직접 지원을 제공
 - 코로나19 지원을 제외한 재정기조(fiscal stance)는 FY2020-21~FY2022-23 동안 대체로 안정적(broadly stable)임¹⁰⁹⁾([그림 V-3])
 - FY2020-21과 FY2021-22에 정부가 예외적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팬데믹의 즉각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정책이었음
 - 코로나19 제한이 종료되고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FY2021-22부터 재정지원이 역사적 평균 수준을 향해 줄어들 전망
 - 또한 경제·재정 전망 개선으로 이번 예산안의 재정정책이 지난 봄 예산안보다 더 확장적이지는 않음¹¹⁰⁾
 - 정부는 차입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FY2024-25에 재정준칙에서의 목표치를 달성할 계획임
 - * 이 시점은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지 2년 후이며 실업률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운 4.2%로 예상되는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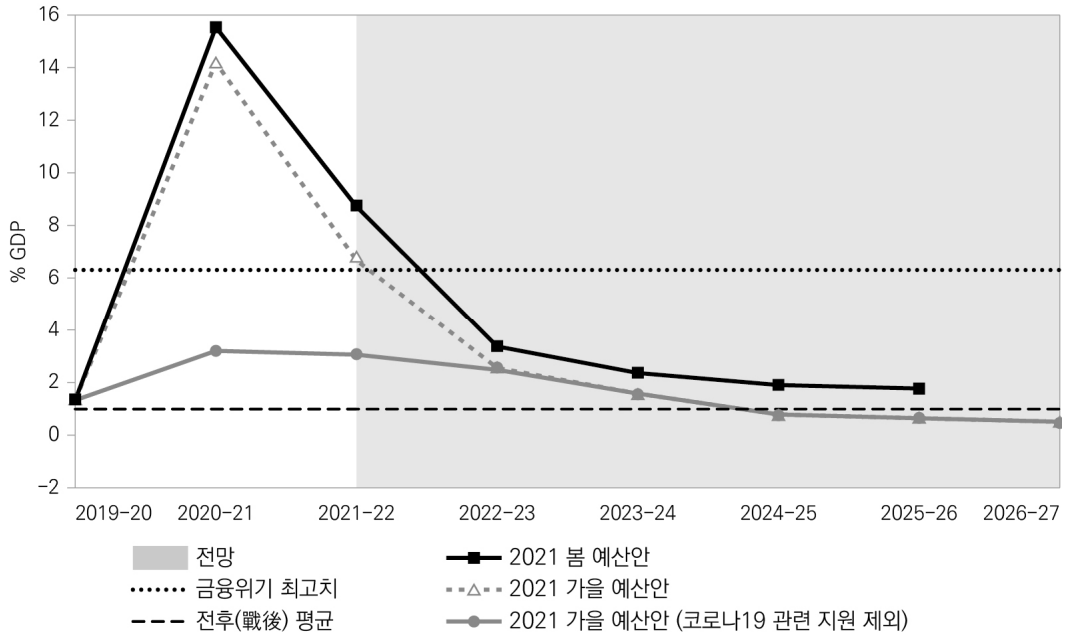
108) 각 연도 예산안의 정책 결정이 차입에 미치는 총영향을 바탕으로 추계

109) 경기조정 기조 재정적자를 바탕으로 추계

110) *Fiscal policy is not significantly more expansionary than Spring Budget.*

[그림 V-3] 영국의 경기조정 기초재정적자로 측정된 재정 기초

(단위: GDP 대비 %)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Chart 1.5

나. 2021 가을 예산안의 정책 방향

□ 2021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강화된 공공서비스, 기회의 레벨 업, 비즈니스 성장, 일하는 가족의 생계비 지원 등 영국 국민의 우선순위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

* 세부 정책 결정은 '4.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의 주요 정책 결정'에 제시됨

-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의 회복, 개혁, 회복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여 미래에 적합한 공공서비스를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
- (성장에 대한 투자) 고임금, 고속련, 고생산성 경제를 위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혁신, 인프라, 역량(skill)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성장 계획(Plan for Growth)'을 이행
- (국민 및 기업 지원)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팬데믹 동안 제공된 지원을 기반으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제공

- (친환경적 재건(Building back greener)) ‘10대 녹색산업혁명 계획’의 우선순위 이행과 추가 핵심 분야 지원 등 녹색산업혁명에 대한 공공 투자 추진
- (지역균형발전(Lavelling up)) 기록적인 투자를 통해 영국 전역에서 국민과 지역의 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보장
- 이 외에도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¹¹¹⁾ 비전 달성, 브렉시트의 기회 포착, 영국 전역을 위한 지원 제공 등을 위한 정책 추진 예정

〈참고 V-2〉 Spring Statement 2022(2022.3.23.)의 주요 내용¹¹²⁾

- (개요) 2022년 3월,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은 ‘Spring Statement 2022’를 발표
 - * 통상 영국의 예산안은 가을에 발표되며, 다음 해 봄에는 재무부 장관이 경제 현황과 예산안 발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예산책임청의 최신 경제·재정 전망을 반영하는 ‘Spring Statement’를 발표함
- (주요 정책)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심화되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조세 개혁 및 감면을 위한 ‘조세 계획(Tax Plan)’을 포함해 가계 및 기업 지원 정책을 추가 발표
 - (가계 지원)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문제, 러시아 침공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 지원
 - 2022년 7월부터 국민보험기여금 면제 기준 소득 인상(9,880→12,570파운드)
 - * 국민보험기여금 인상(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포함)은 4월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
 - 휘발유, 경유에 대한 연료세를 리터당 5펜스 한시적 인하(3월 23일부터 12개월)

111)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언급한 용어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위한 비전’을 의미함. 영국이 유럽 국가들의 파트너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자유·개방 무역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며, 세계의 이익을 위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임

112)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22년 3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3., pp.54~55. 재인용.
 HM Treasury, “Chancellor announces tax cuts to support families with cost of living,” 2022.3.2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tax-cuts-to-support-families-with-cost-of-living>, 검색일자: 2022.3.24.; HM Treasury, *Spring Statement 2022*, 202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statement-2022-documents/spring-statement-2022-html>, 검색일자: 2022.3.24.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저감 자재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 영세율 추진
- FY2022-23에 취약계층의 식품, 유틸리티 등 지원을 위한 가계 지원 자금 (Household Support Fund)을 추가 5억파운드 배정
- (기업 지원)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추가 기업 지원 조치를 발표하고 기업의 투자, 혁신, 훈련 등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
 - 2022년 4월부터 고용주 부담 국민보험기여금에 대한 고용공제(Employment Allowance) 인상(4천→5천파운드)
 - 2022년 4월부터 녹색 기술(태양광 패널, 히트 펌프 등)에 대한 비주거 재산세 (business rates) 면제
 - 데이터 저장, 순수 수학 연구 등 R&D 투자 공제 범위 확대(2023년 4월) 등
- (공정한 성장 수익 공유) 2024년 4월에 소득세 기본 세율 인하(20→19%) 추진, 조세 시스템 정비·개선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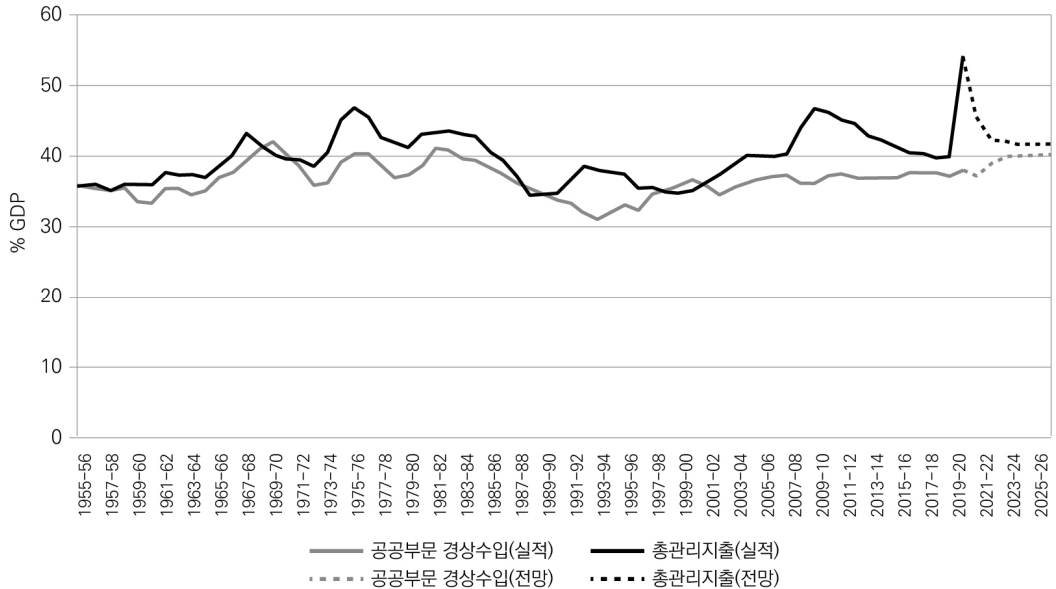
3 수입 및 지출 규모 전망

가. 수입 전망(2021년 10월 전망 기준)

- (중기) GDP 대비 공공부문 경상수입(Public sector current receipt)은 FY2021-22에 37.2%에서 FY2026-27에 40.0%로 증가할 전망([그림 V-4])
 - 봄과 가을 예산안의 주요 조세 정책 조치*들의 영향으로 특히 FY2022-23부터 GDP 대비 공공부문 경상수입 비율이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늘어날 전망
 - * 법인세율 인상, 소득세 개인공제액 및 고세율 과세기준 금액 동결,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도입 등
 - GDP 대비 조세 비율도 팬데믹 이전인 FY2019-20에 33.5%에서 FY2026-27에 36.2%로 증가해 1950년대 초¹¹³⁾ 이래로 최고 수준이 예상됨

[그림 V-4] 영국의 GDP 대비 수입 및 지출 비율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공공부문 경상수입과 총관리지출의 GDP 대비 비율(%)로 직선은 실적치, 점선은 전망치를 나타냄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Chart 1.10

113) 전쟁 후 클레멘트 애틀리의 노동당 정부 후반

- (단기) 공공부문 경상수입 규모는 FY2021-22에 전년 대비 약 8.4% 증가한 8,620억 파운드, FY2022-23에 전년 대비 약 11.6% 증가한 9,624억파운드로 전망됨
 - FY2022-23 기준, 세목별로 소득세(2,296억파운드), 국가보험 기여금과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1,820억파운드), 부가가치세(1,550억파운드), 법인세(566억파운드), 카운슬세¹¹⁴⁾(418억파운드)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표 V-3〉)

나. 지출 전망(2021년 10월 전망 기준)

- (중기) GDP 대비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비율은 FY2019-20에 39.8%에서 FY2020-21에 53.1%로 증가해 정점을 기록한 후, 팬데믹 관련 지출이 종료됨에 따라 FY2021-22에 45.1%, FY2022-23에 42.1%로 하락하고 FY2024-25 이후 41.6%에서 안정화될 전망(〈그림 V-4〉)
 - ‘2021년 3월 전망’과 비교해 FY2022-23년부터의 지출 전망은 2021 지출검토에서 발표한 부처별 예산의 증가를 반영해 상향 조정됨
 - 팬데믹 이전(FY2019-20)부터 FY2026-67 기간에 GDP 대비 지출의 증가 요인은 지출 검토의 자원 DEL 확대, 자본 DEL 조정, 통합급여 지원 강화, 지방 당국 자체 조달 지출(카운슬세 인상 조치 관련) 등임
 - 반면 감소 요인은 브렉시트 관련 비용 감소, 일시적인 연금 트리플 락¹¹⁵⁾ 유예(FY2022-23) 조치 등임
- (단기) 총관리지출 규모는 FY2021-22에 전년 대비 702억파운드 감소한 1조 450억파운드, FY2022-23에 전년 대비 미미(4억파운드)하게 증가한 1조 454억파운드로 전망
 - FY2022-23의 공공부문 경상지출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9,211억파운드, 공공부문 총투자는 8.1% 늘어난 1,243억파운드로 예상됨
 - * 코로나19 관련 자원 DEL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전년보다 늘어남
 - 예산책임청의 항목별 총관리지출 전망은 〈표 V-4〉를 참고

114) 카운슬세(Council Tax)는 주택의 자산 가치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수를 바탕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임

115) 트리플 락(triple lock) : 연금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2.5% 기준 중 최댓값에 연동해 연금을 인상하는 정책

〈표 V-3〉 영국의 경상수입 전망(2021년 10월 전망치)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소득세	198.1	213.2	229.6	240.5	253.0	268.4	284.3
국민보험기여금(NICs)	144.0	157.0	182.0	168.1	171.7	176.5	183.4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	-	-	18.3	18.7	19.3	20.1
부가가치세	118.6	131.9	155.0	159.1	163.1	167.4	172.1
법인세	51.8	52.0	56.6	75.6	85.2	89.3	91.5
석유세	-0.3	-0.4	-0.3	-0.2	-0.2	-0.1	-0.1
연료세	20.9	26.8	28.8	29.9	30.4	30.7	31.1
비주거용 재산세	19.5	22.5	29.8	34.0	34.7	35.2	36.0
지방세(Council tax)	38.4	40.1	41.8	43.6	45.4	46.9	48.4
VAT 환급(refunds)	20.2	21.0	22.9	23.4	23.6	24.6	25.9
자본이득세	10.6	9.2	13.0	15.2	16.7	18.1	19.7
상속세	5.4	6.0	6.4	6.5	6.8	7.2	7.6
부동산취득세	9.5	14.8	15.8	16.5	17.2	18.2	19.4
주식취득세	3.7	4.2	3.9	4.0	4.1	4.3	4.5
담배세	9.8	10.1	10.1	10.0	10.0	9.9	9.8
주세	12.4	12.8	12.6	13.0	13.7	14.2	14.8
항공여객세	0.3	1.1	2.1	3.2	4.4	4.5	4.8
보험료세	6.3	6.5	6.8	7.0	7.1	7.2	7.4
기후변화세	1.8	2.0	1.9	2.0	2.0	2.1	2.2
은행세(Bank levy)	1.9	1.3	1.2	1.2	1.2	1.2	1.2
은행특별세(Bank surcharge)	1.1	1.6	1.2	0.6	0.5	0.5	0.5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3.0	3.2	3.2	3.3	3.4	3.6	3.7
디지털서비스세	0.3	0.6	0.6	0.7	0.8	0.9	1.1
기타 국세(HMRC taxes)	7.4	8.4	9.1	9.3	9.4	9.5	9.7
자동차소비세	6.9	7.1	7.3	7.5	7.6	7.7	7.8
면허료 수입	3.7	3.7	3.9	3.9	4.0	4.0	4.1
환경부담금	8.5	9.5	9.2	10.4	10.9	11.2	12.4
배출거래제	1.3	0.9	4.9	4.3	4.3	4.2	4.2
기타 조세	7.8	8.8	10.0	10.1	10.2	10.3	10.4
국민계정 조세수입	713.0	775.7	869.4	921.1	959.8	996.9	1,038
자체 자원 공제	-2.2	-	-	-	-	-	-
이자 및 배당	23.3	24.3	27.8	30.7	31.2	32.2	33.7
총운영수지	57.6	58.5	61.5	64.1	66.6	69.1	72.1
기타수입	3.6	3.5	3.7	3.8	3.6	3.8	3.9
총 경상수입	795.3	862.0	962.4	1,020	1,061	1,102	1,148
(GDP 대비 %)	37.9	37.2	38.8	39.6	39.8	39.9	40.0
2021년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8.9	42.7	77.0	75.1	67.1	64.1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21*, 2021.10, Table 3.2; Table 3.4; Table 3.6

〈표 V-4〉 영국의 총관리지출(TME) 전망(2021년 10월 전망치)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공공부문 경상지출							
자원 DEL	434.5	406.0	397.6	405.8	417.5	433.7	450.3
자원 AME	554.6	524.0	523.6	542.0	556.8	575.8	597.6
사회복지지출	245.4	246.7	254.0	267.1	278.5	289.9	300.3
바이러스 관련 소득 지원 제도	78.0	17.0	0.0	0.0	0.0	0.0	0.0
지방재정 경상지출	48.9	51.6	56.1	60.3	62.6	62.3	64.4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APF 채무이자 삭감)	22.4	40.4	40.7	37.9	36.5	37.7	39.0
스코틀랜드정부 경상지출	42.0	39.2	38.0	38.9	39.1	41.3	42.9
EU분담금	10.4	8.5	8.8	4.9	1.9	1.0	0.5
순공공서비스연금지출	4.1	3.5	3.6	4.9	4.9	5.0	5.1
기업및기타세액공제	8.7	8.9	9.6	10.9	12.1	13.1	13.8
BBC 경상지출	3.5	4.2	4.1	4.0	4.3	4.2	4.3
국가복권 경상보조금	1.5	1.5	1.3	1.2	1.3		1.3
일반정부 귀속연금	0.8	1.0	0.8	0.8	0.8	0.9	0.9
공기업채무이자	0.2	0.4	0.5	0.5	0.5	0.5	0.6
공공부문연금 제도지원	19.1	19.2	20.1	21.1	21.9	22.8	23.7
감가상각	46.7	48.2	50.3	52.6	54.9	57.1	59.7
경상부가가치세환급	17.8	18.6	20.6	21.0	21.2	22.1	23.3
환경부담금	10.4	10.5	10.2	11.5	11.9	12.2	13.4
기타 경상지출	1.9	2.3	2.8	2.7	2.8	2.8	2.9
기타 회계조정	-7.2	2.1	2.1	1.9	1.8	1.8	1.7
총 공공부문 경상지출	989.1	930.0	921.1	947.8	974.3	1,009.6	1,047.9
공공부문 투자							
자본 DEL	72.7	77.6	87.0	94.6	94.9	99.3	103.0
자본 AME	53.4	37.3	37.3	38.9	38.5	39.5	40.8
지방재정 자본지출	11.0	8.1	8.4	8.0	8.3	8.5	8.8
공기업 자본지출	10.0	10.7	10.7	11.0	11.3	11.4	11.8
학자금 대출	10.6	11.8	12.4	13.1	13.8	14.4	15.0
공공부문 연금 제도 지원	-0.3	1.1	1.3	1.6	1.3	1.1	1.1
스코틀랜드정부 자본지출	4.5	5.5	4.9	5.1	5.0	5.2	5.3
세무소송	0.0	1.9	0.9	1.5	0.7	0.7	0.7
바이러스 관련 대출 제도	20.9	1.5	0.5	0.2	0.0	0.0	0.0
기타 자본지출	-0.1	-0.6	1.1	1.1	0.8	0.8	0.7
기타 회계 조정	-3.2	-2.6	-2.8	-2.7	-2.7	-2.6	-2.6
총 공공부문 투자	126.1	114.9	124.3	133.5	133.3	138.7	143.9
감가상각 공제	-53.5	-54.8	-57.0	-59.5	-61.9	-64.2	-67.0
공공부문 순투자	72.7	60.1	67.2	74.1	71.4	74.5	76.9
총관리지출	1,115	1,045	1,045	1,081	1,108	1,148	1,192
(GDP 대비 %)	53.1	45.1	42.1	41.9	41.6	41.6	41.6
2021년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25.8	-8.3	53.1	51.3	38.9	36.8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21*, 2021.10., Table 3.14; Table 3.16

4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의 주요 정책 결정

- (개요)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팬데믹 관련 긴급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국민의 우선순위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투자를 지속하면서, 장기 성장 추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넷 제로(Net zero)로의 전환을 주도하며, 국민과 기업을 지원할 것임
 - 또한 정부는 영국 전역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
- (정책 결정의 재정적 영향)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 결정이 재정(공공부문 순차입)에 미치는 영향은 FY2021-22에 약 29억 8,500만파운드, FY2022-23에 253억 4,500만파운드로 추계
 - 주요 지출 정책 결정으로 FY2021-22에 7억 1,500만파운드, FY2022-23에 380억 4천만파운드의 지출 증가 효과가 예상됨
 - 주요 조세 정책 결정으로 FY2021-22에 22억 7천만파운드의 세입 감소 효과, FY2022-23에 126억 9,500만파운드의 세입 증가 효과가 예상됨
 - 공공부문 순차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결정의 연도별 비용과 수입 영향은 <표 V-5>에 제시됨

<표 V-5> 영국의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 주요 정책의 재정적 영향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1 지출검토							
자원 DEL: 지출 상한 및 지출 가정에 조정	지출	0	-24,820	-19,165	-12,010	-10,165	-10,755
메모: ODA 지출을 GNI의 0.7%로 복구		0	0	0	-5,220	-5,410	-5,615
자본 DEL: 지출 상한 및 지출 가정에 조정	지출	0	-540	-3,940	+170	+540	+525
지방 당국: 카운슬세 국민투표 원칙의 영향 관련 유보금	지출	0	+20	+35	+55	+55	+60
2022-23년~2024-25년에 비주거 재산세 보전 시범사업 지속	지출	0	-105	-130	-155	-15	0

〈표 V-5〉의 계속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더 나은 재건: 의료 및 사회적 돌봄 계획							
의료 및 사회적 돌봄 계획: 지출	지출	0	-14,050	-11,880	-13,035	-13,415	-13,910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도입('22.4.): 총수익	조세	+45	+16,505	+16,805	+16,905	+17,290	+17,875
메모: 고용주 임금 전가로 인한 수익 감소		0	-2,060	-2,620	-2,720	-2,825	-2,935
메모: 공공부문 고용주에 대한 추가 비용 보상	지출	0	-1,735	-1,765	-1,800	-1,865	-1,935
메모: 의료 및 사회적 돌봄에 할당 가능한 순수익		0	+12,710	+12,420	+12,385	+12,600	+13,005
배당세율 1.25%로 인상('22.4 부터)	조세	-15	+1,340	-540	+650	+815	+905
영국 전역의 생활 수준 제고 및 개인 지원							
통합급여: 수당삭감률 인하(63→55%) 및 근로소득공제액 인상(연간 £500) ('21.12.1.)	지출	-745	-2,220	-2,385	-2,490	-2,755	-2,980
연료세 동결(2022-23년)	조세	0	-1,510	-1,550	-1,580	-1,595	-1,615
주세 개혁	조세	0	-20	-115	-125	-140	-155
주세 동결('22.2.부터 1년)	조세	-80	-545	-560	-585	-600	-620
통합급여 초과 소득기준(£2,500) 추가 1년 동결	지출	0	-70	0	0	0	0
가정학대 피해자 등에 Shared Accommodation Rate 적용 면제	지출	0	-5	-10	*	0	0
기업 및 일자리 지원							
비주거 재산세: 소매, 접객, 레저 부문 50% 감면(2022-23년, £110,000 한도)	조세	+35	-1,860	+40	-10	0	0
비주거 재산세: 승수 동결(2022-23년)	조세	+15	-845	-900	-965	-965	-970
비주거 재산세: 사업장 개선에 감면(2023-24년부터)	조세	0	+5	-145	-140	-145	-150
비주거 재산세: 녹색 기술 지원(2023-24년부터)	조세	0	*	-40	-40	-45	-50
비주거 재산세: 소기업 지원 연장 및 2022-23년 과도기적 감면	조세	*	-30	*	0	0	0
비주거 재산세: 소기업 승수 적용 대상 관련 행정적 변화	조세	0	0	0	-5	-5	-5
연간 투자공제: '23.3.31.까지 £1백만 기준 연장	조세	-65	-240	-165	+115	+60	+50
박물관, 갤러리, 전시 조세 감면 일몰 조항 연장('24.3.까지)	지출	0	0	-5	-10	-5	0
극장, 오케스트라, 박물관 등 조세 감면: 2년 점진적 비율 인상('22.4.부터)	지출	-5	-40	-115	-70	-15	0

〈표 V-5〉의 계속

(단위: 백만파운드)

정책 내용	분류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대형 화물차 도로 이용세 유예(22.8~23.7.31.)	조세	0	-145	-80	-10	-10	-10
대형 화물차의 차량 소비세율 동결(2022-23년)	조세	0	-10	-10	-15	-15	-15
은행특별세: 3%로 설정, 공제 한도 인상	조세	0	-220	-830	-975	-995	-1,020
자산지주회사(AHC) 과세 제도(22.4.부터)	조세	0	0	-5	-10	-15	-20
기타 조치							
항공여객세 개혁	조세	0	0	-35	-35	-30	-30
부동산 처분 후 자본이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세	-60	-5	-5	-5	-5	-5
이자소득 과세의 영세율 구간 유지(2022-23년)	조세	0	0	+5	+5	+5	+5
성인 ISA 연간 한도 유지(2022-23년)	조세	0	0	+5	+10	+15	+20
탄소가격지원 세율 유지(2023-24년)	조세	0	0	-15	-15	-10	-10
Car fuel benefit charge: CPI에 따라 인상(2022-23년)	조세	+5	+5	+5	+5	+5	0
Van benefit charge: CPI에 따라 인상(2022-23년)	조세	0	+5	+5	+5	+5	+5
골재세 동결(2022-23년)	조세	0	-25	-25	-25	-25	-25
담배세: 손말이 담배세 추가 4% 인상, 최저세 추가 1% 인상(2022-23년)	조세	+15	+25	+25	+25	+25	+25
연금 크레딧과 주택수당 통합 일정 연기(25.4)	지출	0	0	+5	+50	+95	+125
저소득자 대상 Net Pay 방식의 연금 조세 감면 변경(24.4부터)	지출	0	0	0	0	-10	-15
BBC 상업 부문의 차입 한도 단계적 인상 (£350→£750)	지출	0	-15	-45	-40	+20	+95
토지등기소: 인력 증대	조세	-5	+65	+50	+35	+35	+40
유럽경제지역의 그룹 공제 폐지	조세	*	+5	+5	+5	+5	+5
주거용 부동산 개발세(4%)	조세	0	+200	+215	+225	+235	+250
기존에 발표된 정책							
중략							
금융 거래							
금융거래 및 보증 변화의 공공부문 순차입 영향	지출	-25	-20	+5	*	*	-5
정책 결정 합계	-	-2,985	-25,345	-21,855	-9,780	-7,455	-7,705
지출 정책 결정 합계	-	-715	-38,040	-34,020	-23,885	-21,730	-22,670
조세 정책 결정 합계	-	-2,270	+12,695	+12,165	+14,105	+14,275	+14,965

1. 추계는 OBR의 최근 경제·재정 결정 요인을 반영
2. 조세와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조세 정책과 지출 정책을 구분
3. 별표(*)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
4. 조세정책 효과에서 마이너스(-)는 세입 감소를 의미, 지출정책 효과에서 마이너스(-)는 정부지출 증가를 의미
5.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세부 내역(19개)과 연도별 금액은 원문 자료의 표를 참고 바람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Table 5.1 일부 수정 인용

가.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 (공공서비스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압력에 대응·회복하고 이로 인한 의료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 지출검토 기간의 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출에 96억파운드를 확정하여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바이러스의 영향에 계속 대응하도록 함
 - 팬데믹으로 지연된 비응급 진료를 지원하는 주요 캐치 업 프로그램에 80억파운드 이상의 지출을 계획
 - 비응급 진료 적체 해결, 디지털 기술 현대화 등을 위해 NHS에 자본 투자(59억파운드)
 - 진단 서비스 혁신(3년간 23억파운드), 의료기관 연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 현대화 지원(3년간 21억파운드), 새로운 수술 허브, 입원 서비스 회복을 위한 병상 및 장비 확대(15억파운드) 등
 -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학습 손실 회복 지원 확대(신규 18억파운드 패키지 등)
 - 팬데믹 기간 적체된 형사·사법 시스템 회복에 3년간 약 5억파운드 지원 등
- (미래에 적합한 공공서비스) 의료, 주택, 교육 등 공공서비스 관련 지원 계획 제시
 -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영국 전역의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지출 관련 자금을 연간 130억파운드 확보하여 NHS, 사회적 돌봄, 공공 의료 및 예방 프로그램 개혁, 인력 훈련 등에 추가 지원
 - *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도입을 통한 추가 재원을 NHS와 사회적 돌봄 분야에 직접 사용
 - NHS의 자원 예산을 FY2024-25까지 1,600억파운드 이상으로 확대, 영국 전역의 커뮤니티 진단 센터를 통한 진단서비스 혁신(23억파운드), 병원 신설 및 업그레이드(42억파운드) 등 추진
 - 의료 인력 신규 채용 확대 및 훈련 강화에 추가 자금 제공
 - 장기적인 사회적 돌봄 개혁을 위한 자금 지원

- (주택)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에 투자하고자 지출검토에서 FY2025-26까지 주택 분야에 약 240억파운드 자금을 배정
 - 115억파운드 투자(2021~2026년)를 통해 18만개의 신규 저가 주택(affordable home)을 건설(이 중 65%는 런던 외 지역에 투자)
 - 신규 주택을 위한 유휴 부지 활용에 추가 18억파운드 투자
 - 위험한 피복재를 사용한 고위험 빌딩 보수를 위해 50억파운드 자금 지원
 - 노숙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FY2024-25까지 약 6억 4천만파운드 자금 확정
- (치안·사법)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에 추가 19억파운드 제공, 신규 경찰관 2만명 채용에 자금 지원,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간 자금 확대 등
- (교육) '2019 지출검토'에서 편성한 자금에 추가로 향후 3년간 잉글랜드의 핵심 학교 예산(core schools budget)을 47억파운드 확정
 - 이 외에도 교사 초임 연봉을 3만파운드로 인상하고 향후 10년간 500여개 학교의 재건축을 지원하며, 특수교육 학교 지원(26억파운드) 등도 추진

나. 성장에 대한 투자

- (혁신 제고)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R&D 투자를 2024-25년까지 200억파운드 규모로 확대
 - R&D 지출을 FY2026-27에 220억파운드까지 확대하고, 경제 전체의 R&D 투자를 2027년에 GDP의 2.4%까지 늘린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
 -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자금 증액
 - 항공 우주 분야의 R&D 지원 및 산업계와 공동 투자
 -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생물 정보학, 우주 기술 등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에서 합의한 우선순위에 지원
 - 국가 우주 전략에 따라 상업용 소형 위성 발사체 부분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영국이 2022년에 유럽에서 로켓을 궤도로 발사하는 최초 국가가 되도록 지원

- 영국의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해 Innovate UK¹¹⁶⁾에 최소 25억파운드 자금(지출 검토 기간 동안 36% 증가)을 제공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자본, 기술 등에 접근할 수 있게 지원
 - 또한 탈탄소화, 녹색 에너지 등 혁신적인 녹색 기술에도 정부가 투자
 - 이 외에도 R&D 조세감면 제도 개선, 과학 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Global Talent Network 신규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 등을 추진
- (인프라 개혁) 2020년에 정부는 영국 전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국가 인프라 전략(NIS)’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예산안 및 지출 검토에서 이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제시
- 2020년에 발표한 경제적 인프라 투자에 대한 1,000억파운드 이상의 다년도 자금 배정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 인프라 전략 발표 이후 경제 인프라에 투입된 총금액을 1,300억파운드로 확대
 -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 철도, 디지털, 지역 인프라에 추가로 투자할 예정
 - 지역 교통 네트워크 혁신을 위해 8개 영국 도시 지역에 57억파운드의 투자 패키지 제공, 자전거 도로 건설, 지방 도로 개선 등
 - 지출 검토 기간의 철도 투자에 350억파운드 이상 자금 확정 등 철도 네트워크 확대
 - 50억파운드의 ‘프로젝트 기가비트¹¹⁷⁾’ 지속 추진, 고품질 4G 모바일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투자 등 디지털 연결성 제고 및 농촌 고립 문제 해결
 - 정부는 인프라를 더욱 우수하게, 신속하게, 친환경적으로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국가 인프라 전략에서 발표한 50개 개혁을 의회 회기 말까지 이행

116) 혁신을 촉진하고 R&D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연구 협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117) 프로젝트 기가비트(Project Gigabit)는 영국 전역에 초고속 기가비트 광대역 통신을 보급하기 위한 정책임

- 정부에 대한 '국가 인프라 위원회'의 권고 시, 2050년 순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지원하도록 고려

□ (역량(skill)) 제고) 양질의 기술 교육에 투자, 직무 역량 향상 및 재교육 촉진, 견습직 지원 확대, 성인의 수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

- T-레벨(기술 교육 과정) 학생들에게 양질의 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등 FY2024-25까지 16~19세 교육에 추가 16억파운드를 지원
- 이 외에도 Skills Bootcamp 확대, 평생 숙련 보장(Lifetime Skills Guarantee)¹¹⁸⁾ 지원 확대, 신규 성인 수리 능력 향상 프로그램(Multiply scheme) 지원을 계획
- 중소기업 견습직 채용 서비스 강화, 유연한 견습직 훈련 모델 지원 등 잉글랜드 내 견습직 지원 자금을 FY2024-25에 27억파운드로 확대

다. 국민 및 기업 지원

□ (영국 전역의 생활 수준 향상) 근로자의 기술 개발 및 소득 보장, 보육,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여 영국 전역의 생활수준을 제고

- (고용 및 역량 개발 지원) 향후 3년간 노동연금부(DWP)에 60억파운드 이상 자금을 통해 근로자들이 소득을 높이고 적절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
 - 통합급여 수급자가 취업 지원을 받도록 '워크 코치'에 매년 9억파운드 투자, Restart 제도(장기 실업자 대상 맞춤형 구직 지원)에 대한 자금 지원, Job Entry Targeted Support Scheme(3~12개월 실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 연장에 9천만 파운드 지원 등
 - 역량(skill) 관련 지출을 FY2024-25까지 총 38억파운드 확대하는 등 역량 개발에 투자¹¹⁹⁾

118) 학자금 대출을 유연화하여 성인이 대학이나 평생교육 기관에서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119) 자세한 내용은 '성장에 대한 투자' 중 '역량 제고'의 정책을 참고 바람

- (근로 소득 보장)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급여의 수당 삭감률¹²⁰⁾ 하향 조정(63%→55%), 근로소득공제액(Work Allowance)¹²¹⁾ 연간 500파운드 인상, 국가생활임금 인상(시간당 9.5파운드, 2022년 4월) 등 추진
 - (아동 및 가족 지원) 정부의 무료 보육 제공자에 대한 지원금 인상에 추가 1억 7천 만파운드(FY2024-25),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는 Supporting Families Programme에 추가 2억파운드 투자
 - 맞춤형 모유 수유 서비스, 부모-영아 정신건강 지원 등 새로운 영유아 프로그램, 잉글랜드 전역의 패밀리 허브 구축 지원 등 3억 2백만파운드의 신규 투자
 - 휴일 활동 및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연간 2억파운드 이상 제공
 - (기타) 연료세, 주세 동결을 통한 소비자 지원, 취약계층에 식품, 의복, 유틸리티 등 필수품 비용 지원(가계 지원 자금 5억파운드), 참전용사 지원 등
- (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정책) 기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를 통해 기업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되면서 투자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
- (비주거 재산세(business rates) 개선) 향후 5년간 비주거 재산세로 인한 부담을 70억 파운드 이상 경감하고 관련 세제를 더욱 공정하고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 변화가 회복 지원을 위해 40만개의 적격 소매,接客, 레저 부동산에 대해 약 17억 파운드 규모의 한시적 비주거 재산세(business rates) 감면 시행
 - 비주거 재산세 승수¹²²⁾ 추가 1년 동결 등 5년간 46억파운드 규모의 조세 감면
 - 시설 개선, 신규 녹색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과세 완화 및 조세 경감
 -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연간 투자 공제 금액 한시적 확대(1백만파운드) 조치를 2023년 3월 말까지, 기업 회복 대출 제도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

120) 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비율

121)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근로능력이 제한적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가 수급 자격이 있으며 근로소득 공제액 이상의 소득에 수당삭감률이 적용됨

122) 부동산 평가 가치에 승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함. 승수는 전년도 승수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지만 FY2021-22와 FY2022-23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

- 이 외에도 R&D 조세감면 개혁, 법인세율 인상을 고려한 은행 특별세 세율 인하(8% →3%, 2023년 4월), 팬데믹 피해 업종(공항, 문화·예술 부문 산업 등) 지원 연장 및 맞춤형 지원 등 추진

라. 친환경적 재건(Building back greener)

□ 영국의 녹색산업혁명을 위해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 규모는 2021년 3월 이래로 총 300억파운드에 달함

* 영국 정부는 2021년 10월, '10대 녹색산업혁명 계획(2020.11.)'을 바탕으로 2050년 순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 하에 영국 경제 전부문의 탈탄소화 종합 계획을 담은 '넷 제로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친환경적 운송) 운송 부문 탈탄소화 계획 이행을 위해 61억파운드 확정
 - 저·무공해 운송 기술 상업화 지원 관련 R&D 자금에 4억 1,600만파운드, 전기차 보급 지원에 추가 6억 2천만파운드, 버스·자전거 관련 인프라 투자 등 제공
- (친환경적 건물) 저소득 가구의 넷 제로 전환 및 에너지 비용 경감에 18억파운드, 히트펌프(heat pump) 시장 성장을 위해 4억 5천만파운드 등 건물 탈탄소화에 39억 파운드 확정
- (신기술을 통한 에너지 및 산업 탈탄소화) 2035년까지 영국 전력 시스템을 탈탄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기술과 산업에 투자
 - 넷 제로 수소 기금(2억 4천만파운드), 탄소 포집 사용·저장 인프라 기금(10억파운드) 등 주요 신산업에 투자
 - 신형 저탄소 기술, 차세대 소형 및 첨단 모듈형 원전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해상풍력 부문 3억 8천만파운드를 제공
- (자연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2억 5천만파운드 이상 지원, 이탄지 복원과 산림 조성을 위해 Nature for Climate Fund에 추가 6억 2,500만파운드 배정 등

마. 지역균형발전(Lavelling up)

- ①기회 확산 및 취약 지역 공공서비스 개선, ②생활 수준 제고, ③지역의 자부심 회복, ④지역 리더 및 커뮤니티에 권한 부여라는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취업 및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26억파운드의 영국공동번영기금(UK Shared Prosperity Fund)을 통해 영국 전역에서 인적자본에 투자
 - 이 외에도 커뮤니티 의료 진단센터,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저가 주택 제공 등 앞서 제시된 공공서비스 관련 정책들을 영국 전역에서 추진
 - 그레이터 맨체스터, 리버풀 시티 등에 런던 스타일의 교통 네트워크 구축(5년간 57억 파운드), 2020~2025년에 50여개 지방 도로 개선(26억파운드), 지방도로 유지보수(50억파운드) 등 인프라에 투자
 - 영국 전역의 Levelling Up Fund 1차 배정으로 17억파운드의 지방 투자 예상
 - 선정 지역에 의료 훈련 시설, 시장, 지역 어업 커뮤니티, 아트 센터 등 신설·재개발
 - 이 외에도 영국 전역에 최신 커뮤니티 축구 경기장 건설·개조, 300여개 유스 클럽(향후 3년간 5억 6천만파운드) 등 지원

바.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비전 달성 및 브렉시트의 기회 포착

- 영국이 G7 중 개발 강대국이자 최대 ODA 공여국으로서 세계를 이끌고,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등 주요 문제에 대응해 나갈 예정
 - 팬데믹 이후 축소했던 영국의 ODA 지원 비율(현재 GNI 대비 0.5%)을 FY2024-25에 재정 상황이 충족되면 0.7%로 다시 확대
 - 지출검토 기간 동안 국제 기후 금융에 최소 66억파운드, 자연 및 생물 다양성 보전에 17억파운드 이상 지출하고 팬데믹 종식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

-
- 영국의 독립적인 무역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자금을 제공하고 규제 개혁도 추진
 - 14억파운드의 신규 Global Britain Investment Fund를 통해 국제 기업이 생명과학, 자동차 등 영국의 주요 혁신 산업에 투자하도록 보조금 제공
 - 국내선 항공여객세 인하로 영국 내 항공 연결성을 강화하도록 지원
 - 영국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영국의 톤세¹²³⁾ 제도를 현대화

사. 영국 전역을 위한 지원 제공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지역 니즈에 맞는 특화된 조치와 주요 지역에 대한 지원 제공
 - 2021 지출검토에서 지출검토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46억파운드), 웨일즈(25억파운드), 북아일랜드(16억파운드)에 약 87억파운드(연간 평균)를 추가로 지원하여 학교, 주택, 의료 및 사회적 돌봄, 교통 등에 투자하도록 함
 - 이양 정부의 상황과 강점에 맞게 조정된 특화 계획을 Levelling Up Fund, Community Ownership Fund, British Business Bank Fund 등을 통해 지원

123) 해운기업에 실제 영업이익 대신 운항하는 선박의 수와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한 이익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5 주요 재정정책 이슈

가. 2021 지출검토

- (지출검토 제도) 영국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는 일반적으로 2~4년마다 이루어지며 검토 기간 각 연도의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함¹²⁴⁾
 - 보통은 3년 검토기간을 포괄하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의 다년도 지출검토 이후, 2019년(Spending Round 2019)과 2020년(Spending Review 2020)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단년도 검토가 이루어짐
- (2021 지출검토의 자금 배정) 2021 지출검토에서 FY2022-23부터 FY2024-25까지 총 3조 2,340억파운드의 지출 계획을 발표¹²⁵⁾(〈표 V-6〉)
 - (총액)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총 부처별 지출 규모를 FY2024-25까지 연평균 3.8% 증가하도록 하여 금세기 의회 회기 중 가장 큰 실질 증가가 나타날 전망
 - FY2024-25까지의 총 부처별 지출 규모가 연간 현금 기준 1,500억파운드, 실질 기준 900억파운드 증가
 - (자원 DEL) 이는 주로 부처 자원 지출(경상 지출)의 대규모 증가에 기인하며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연간 자원 DEL은 1,000억파운드 넘게 늘어날 전망
 - (자본 DEL)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총투자(gross public sector investment)에 6,000억파운드 이상 투자하는 야심찬 목표를 계속 이행할 예정이며 자본 DEL은 이번 의회 기간 동안 연평균 6.7%의 실질 증가율이 예상됨
 - (부처별 지출) 재무부 장관은 2021 지출검토의 결과로 이번 의회 기간(FY2019-20~FY2024-25) 동안 모든 중앙 부처의 예산이 실질 기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
 - * 부처별 예산 배정 규모 및 상세 정책 내용은 예산안 원문 자료¹²⁶⁾를 참고 바람

124) Philip Brien and Matthew Keep, "Background to the 2020 Spending Review," Briefing Paper No.09055, House of Commons Library, 2020.11.

125) 이하 내용은 Daniel Harari, Lorna Booth, Philip Brien, and Matthew Keep,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A summary,"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10.28.; Chris Smith,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House of Lords Library, 2021.10.29., <https://lordslibrary.parliament.uk/autumn-budget-and-spending-review/>, 검색일자: 2021.12.20.을 참고함

- 지출검토 기간 동안 전체 배정 자금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보건복지부(DHSC)와 교육부(DfE)에 배정됨
 - 보건복지부의 총연간자금은 320억파운드 증가(FY2021-22~FY2024-25 연평균 실질성장률 4.1%)할 전망이며 특히 NHS가 현금 기준으로 예산 증가의 혜택을 크게 받을 전망
 - * 코로나19 관련 대응, 비응급 진료 지연 해결, 사회적 돌봄 개선, 생명 과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 등에 배정
 - FY2021-22 ~ FY2024-25에 교육부 배정액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2.0%로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부진 회복, 역량(skill) 제고 등에 지출 예정
- ‘레벨링업·주택·커뮤니티부’ 예산도 연평균 4.1%의 증가율이 예상되며 levelling up fund, community ownership fund, UK shared prosperity fund 등을 위한 자금 포함
- 외무부 예산의 실질성장률은 4.4%로, 2021 지출검토에서 ODA 지원 비율을 FY2024-25에 GNI의 0.7%로 복구하기 위한 예비 자금을 별도 편성함
 - * 정부는 재정준칙이 충족되면 ODA 지출 수준을 0.7%로 회복시키겠다고 발표함
- 지출검토 기간 동안 지방정부에 사회적 돌봄과 기타 서비스를 위해 48억파운드의 신규 보조금을 제공 예정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예산은 주로 자본 예산 증가의 영향으로 연평균 7.5% 증가하며 넷 제로 전략 지원을 포함해 R&D 공공 투자 증대 및 혁신 장려를 위한 자금이 포함됨
- 다만 국방부의 경상 예산은 실질 기준으로 FY2021-22 ~ FY2024-25 사이 평균적으로 감소할 것임

126)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pp.93~131.

〈표 V-6〉 영국의 2021 가을예산안 및 지출검토의 총관리지출(TME) 계획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

구분	실적	계획						연평균 실질성장률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1-22 ~ 2024-25	2019-20 ~ 2024-25
공공부문 경상지출	989.1	930.0	921.1	947.8	974.3	1,009.6	1,047.9	1.9%	1.8%
자원 AME(Resource AME)	480.2	427.2	433.5	450.7	463.7	479.0	497.0		
자원 DEL(감가상각 제외) (Resource DEL excluding depreciation)	475.8	454.7	435.2	442.5	453.7	471.3	489.2	3.3%	3.1%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자원 DEL(감가상각 제외)	354.6	384.9	-	-	-	-	-		
코로나19 관련 자금	121.2	69.8	-	-	-	-	-		
감가상각 (Ring-fenced depreciation)	33.1	48.2	52.4	54.6	56.9	59.3	61.7		
공공부문 총투자	126.1	114.9	124.3	133.5	133.3	138.7	143.9	2.9%	4.6%
자본 AME(Capital AME)	32.4	15.7	17.4	22.1	21.5	21.6	22.3		
자본 DEL(Capital DEL)	93.7	99.3	106.8	111.5	111.9	117.1	121.5	1.9%	6.7%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제외한 자본 DEL	87.9	98.7	-	-	-	-	-		
코로나19 관련 자금	5.8	0.5	-	-	-	-	-		
총관리지출 (GDP 대비 비중(%))	1,115.2 (53.1)	1,045.0 (45.1)	1,045.4 (42.1)	1,081.4 (41.9)	1,107.6 (41.6)	1,148.3 (41.6)	1,191.7 (41.6)	2.0%	2.2%
총 DEL	569.5	553.9	542.1	554.0	565.6	588.3	610.8	3.0%	3.8%

주: 총관리지출(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자원 DEL+자원 AME)과 공공부문 총투자(자본 DEL+자본 AME)의 합으로 구성. 부처별지출한도(DEL)은 지출검토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가능한 지출이며, 연간관리지출(AME)은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임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10., Table 1.15.

나.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장¹²⁷⁾

- (배경) 저금리에 힘입어 현재는 추가 차입을 감당할 수 있으나 높은 채무 수준으로 인해 재정이 미래 충격에 취약한 상황임
 -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 변동에 따른 공공 재정 민감도가 증가
- (주요 조치)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 정부가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전환하기 위한 조기 조치를 취함
 - 2021년 봄 예산안에서 정부는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과 최고 소득의 가계가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공정하고 누진적인 조세 조치를 발표함
 - 법인세의 기본세율을 인상(19%→25%, 2023년 4월)하고 수익 5만파운드 미만 기업에는 별도 세율(19%)을 적용
 - 개인소득세의 기본공제액(personal allowance)와 고세율 과세기준 금액(higher rate threshold)을 2022-23년부터 2025-26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하지 않고 동결
 - 2022년 4월부터 새로운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Health and Social Care Levy)’을 도입할 예정(〈참고 V-3〉)
 - 모든 세대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2022년에는 국가연금 인상(uprating)에 있어 임금 상승률 연동을 중단함
 - 팬데믹으로 인한 연간소득 증가율의 왜곡을 고려해 연금 인상 시 적용하는 트리플 락¹²⁸⁾의 임금 요인을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
 - 이를 통해 연금 인상 왜곡을 방지해 재정 압력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
 -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장기 자금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추가 차입보다는 조세로 자금을 조달해야한다는 입장임

127) 이하 내용은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 제시된 ‘Medium-term fiscal strategy and outlook’(pp.31~37)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128) 트리플 락(triple lock): 연금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2.5% 기준 중 최댓값에 연동해 연금을 인상하는 정책

- 지난 1년간 이루어진 결정들의 결과로 공공부문 경상수입이 FY2021-22에 GDP의 37.2%에서 FY2026-27에 40.0%까지 늘어날 전망

□ (새로운 재정프레임 워크)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새로운 재정준칙*에 의해 뒷받침될 예정

* 재정준칙의 상세 내용은 ‘다. 재정준칙 개정(안)’을 참고

- 중기에 GDP 대비 기초 채무 비율을 감축하는 것은 채무이자 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재정 완충 장치(buffer)를 구축할 것임
- 재정준칙에 따라 차입비용이 낮을 때 높은 수준의 투자 지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 상환 부담가능성 등 다른 고려사항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함
- (모니터를 위한 추가 지표) 재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는 ‘공공 채무의 부담가능성(affordability)’과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강화’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 근거를 고려할 것임

* 이번 예산책임현장 개정안에서 새롭게 제시된 부분이며 명확한 목표는 설정되지 않음

- (공공 채무의 부담 가능성) 거시경제 상황 및 전망의 변화에 대한 채무 상환 부담가능성의 민감도, 광범위한 리스크(eg. 외채 발행 비율)를 모니터링
- (공공부문 대차대조표의 지표 강화) 공공부문 순채무(PSND: public sector net debt), 공공부문 순금융부채(PSNFL: public sector net financial liabilities), 공공부문 순자산(PSNW: public sector net worth) 등 모니터링

□ (지출 효율화) 정부는 2021 지출검토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을 우선순위 분야에 집중해 사용하도록 비효율적 지출을 절감하는 추가 조치를 취함

- 2021 지출검토에서 중앙부처 경상예산에 대한 5% 절감분을 확정

〈참고 V-3〉 NHS 및 성인 사회적 돌봄 개혁을 위한 신규 자원 조달 계획¹²⁹⁾

- (개요) 영국 정부는 2021년 9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지연 문제 해결, 성인 사회적 돌봄 개혁,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장기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¹³⁰⁾함
- (투자 규모) 향후 3년간 의료 및 사회적 돌봄 개혁에 약 360억파운드를 투자
- (자원 조달) 2022년 4월부터 새롭게 ①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1.25%)’을 도입하고 ②배당세율을 현행 세율 대비 1.25%p 인상하여 추가 자금을 조달
 -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은 2022년에는 국가보험기여금(NIC¹³¹⁾) 시스템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2023년부터 국가보험기여금과 분리하여 부과
 - *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고용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공제(Employment Allowance)를 동 부담금에도 적용¹³²⁾
 - 2023년 4월부터는 국가연금 수급연령 이상의 근로자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대상을 확대

〈영국의 신규 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부담금 기여율〉

구분	피고용자		고용주	자영업자	
	main rate	higher rate		main rate	higher rate
2021-22 NIC 기여율(현재)	12%	2%	13.8%	9%	2%
2022-23 NIC 기여율	13.25%	3.25%	15.05%	10.25%	3.25%
2023-24	NIC 기여율	12%	13.8%	9%	2%
	부담금	1.25%		1.25%	

주: higher rate은 특정 구간 이상 소득 금액에 적용하는 기여율임
출처: HM Government,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21.9.7., Table 1

〈영국의 배당세율〉

구분	기본세율	상위세율	최상위세율
2021-22 배당세율(현재)	7.5%	32.5%	38.1%
2022-23 배당세율	8.75%	33.75%	39.35%

출처: HM Government,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21.9.7., Table 3

12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21년 9월호, 2021. 9. pp.49~50. 일부 재인용

다. 재정준칙 개정(안)

- (제도 개요) 영국은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에서 재정정책 목표(objective for fiscal policy), 재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목표(fiscal mandate)와 보완적 목표(supplementary target)를 규정
- (재정준칙 개정(안)) 영국 정부는 2021 가을 예산안 및 지출검토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거시경제적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지원하고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정
 - * 변경된 재정준칙은 예산책임헌장 개정안에 반영
- 주요 기준
 - (재정 목표(fiscal mandate)) 영국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전망기간(연동(rolling))의 세 번째 연도까지 감축
 - (보완적 목표(supplementary target)) 재정수지와 지출상한 기준의 보완적 준칙 제시
 - (경상예산수지) 전망기간(연동(rolling))의 세 번째 연도까지 경상예산수지 균형 달성
 - (공공부문 순투자) 5년 전망기간(연동(rolling))의 공공부문 순투자 평균이 GDP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복지지출 상한) 복지지출을 재무부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와 마진 이내로 유지
 - * 한도는 국가연금과 경기 주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지출을 계속 제외함
 - (특징) 경상지출을 조세로 조달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이행하면서 상당한 투자를 허용해 영국 전역에서 인프라 투자 및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 가능

130)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Record £36 billion investment to reform NHS and Social Care," press release, 2021.9.7.,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cord-36-billion-investment-to-reform-nhs-and-social-care>, 검색일자: 2021.12.20.; HM Government,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21.9.7.,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15736/Build_Back_Better_-_Our_Plan_for_Health_and_Social_Care.pdf, 검색일자: 2021.12.20.

131)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132) 중소기업의 NIC 고용주 기여금 부담을 4,000파운드까지 감면

- 전망기간의 세 번째 연도 전에는 경상예산 흑자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재정정책이 지속적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지연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함
 - 3개년 연동(rolling) 목표는 재정정책이 미래의 충격에 대응해 불필요하게 긴축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
 - 재정정책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1~2년 기간 동안 작동하여 경제성장을 안정화하고 이자율이 낮을 때 통화정책을 지원 가능
 - 재정준칙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하며 미래 충격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
 - (예외조항) 영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충격이 있는 경우 재무부는 일시적으로 재정준칙을 중단할 수 있음
 - 정부는 의회에 이를 진술해야 하며, 이후 각 예산에서 재무부 장관이 이러한 중단에서 복귀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
- (달성 가능성 평가) 예산책임청 분석¹³³⁾에 따르면 2021년 10월 전망 기준으로 개정 재정준칙의 네 지표 모두 달성될 가능성이 높음(〈표 V-7〉)
- FY2024-25에 중앙은행을 제외한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전년 대비 0.6%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 FY2024-25 경상예산수지는 251억파운드(GDP 대비 0.9%) 흑자가 예상되고, GDP 대비 공공부문 순투자 비율의 평균도 2.7%로 3% 기준을 하회할 것이며, 복지지출도 28억파운드의 마진을 두고 상한 이내로 유지될 전망이다

133) 예산책임청은 현 정책을 바탕으로 정부가 재정준칙을 달성할 가능성이 50%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평가

〈표 V-7〉 영국의 재정준칙(안) 달성 전망(2021년 10월 전망치)

(단위: GDP대비 %, 십억파운드)

구분	평가	GDP 대비 비율(%)		규모(십억파운드)	
		전망	마진	전망	마진
FY2024-25의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 전년 대비 변화	충족	-0.6	0.6	-	17.5
FY2024-25에 경상예산 흑자	충족	0.9	0.9	25.1	25.1
5년 전망기간의 공공부문 순투자 평균	충족	2.7	0.3	-	7.3
FY2024-25에 대해 설정된 복지지출 상한	충족	-	-	138.3	2.8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21*, 2021.10., Table 4.3

VI. 호주

□ FY2022-23: 2022년 7월 ~ 2023년 6월

□ 출처

- The Treasury, Budget Paper No.1 ~ No.2 2022-23, 2022.3.29.
- The Treasury, Budget Overview, 2022.3.29.
- Budget 2022-23 홈페이지, <https://budget.gov.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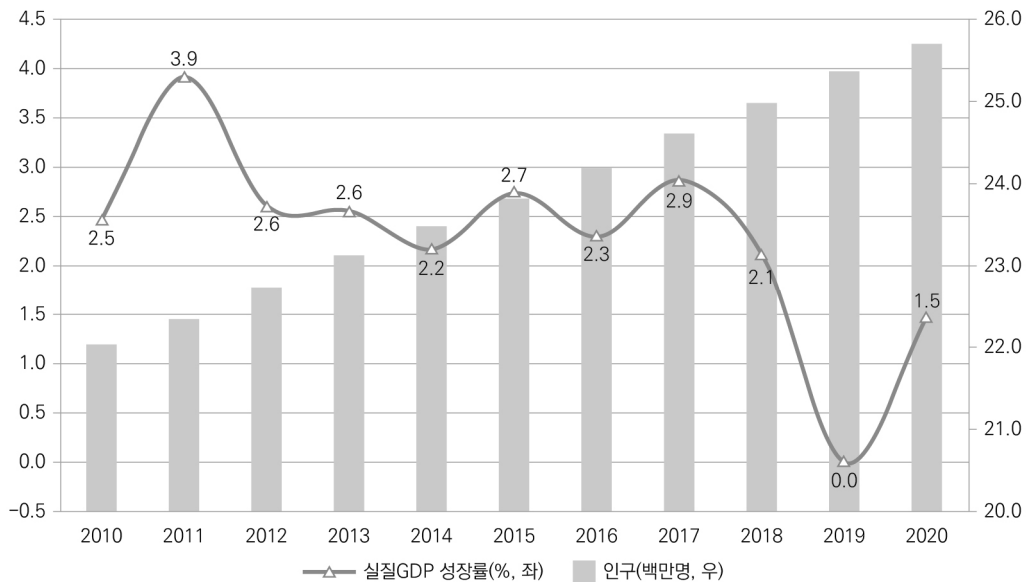
□ 환율: 1호주달러 = 약 813.48원(2021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9년 경상GDP 1조 3,360억달러(우리나라 0.6배 수준)
2020년 경상GDP 1조 4.295억달러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20년 기준 40.02%

□ 인구: 2,537만명(2019년), 2,570만명(2020년)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소비, 기업 투자 및 수출 부문의 성장세로 실질 GDP 성장률은 FY2022-23에 3.5%, FY2023-24에는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22년 3사분기에 3.75%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년 전 예산안 상의 예측치 대비 약 3%p 낮고, 약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2023년 2사분기 3%, 2024년 2사분기 2.5% 전망
- (재정 전망) 노동시장의 강한 회복과 단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세수가 확대되면서, FY2022-23 예산수지 적자는 지난 MYEFO(반기 경제·재정 전망) 대비 209억 호주달러 개선된 780억호주달러(GDP의 3.4%)가 될 것으로 예상
 - 총채무(Gross debt)는 단기적으로 안정되고 중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FY2021-22에 GDP의 39.5%, 2025년 6월 30일 기준 GDP의 44.9%)

□ (예산 기초) 채무 안정 및 감소를 위해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예산수지 적자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FY2022-23 예산수지는 GDP 대비 3.4%(780억호주달러) 적자, FY2025-26에는 GDP 대비 1.6%(431억호주달러) 적자

□ 예산안 내용

- (수입) 현금주의 기준 일반정부 수입(cash receipts)은 지난 MYEFO 대비 312억 호주달러 증가한 5,476억호주달러
- (지출) 발생주의 기준 일반정부 지출(accrual expenses)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6,285억호주달러로 예상

□ 주요 재정정책

- (경제 강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직업 훈련, 숙련 노동자의 이주 장려, 견습생 교육 및 국경 재개, 제조 전략 현대화¹³⁴⁾ 등에 투자하여 더욱 강력하고 생산적인 경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 패키지(임시·선별적), 유류세 감면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
- (홍수피해 복구 지원)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응하고 해당 지역의 복구를 위해 지원
- (지역 경제 및 인프라 투자) 4개의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도로 및 철도 인프라 10년 계획을 시행하며, 지역 성장 및 생산성 촉진을 위해 지역발전 가속화 프로그램¹³⁵⁾을 수립
- (필수 서비스 보장) 동절기 COVID-19 유행에 대비하고,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연구, 노인 돌봄, 교육, 여성 안전, 격차 해소, 재향 군인을 위해 추가 지원
- (불확실성 대응) 국가 안보 및 국방 능력에 투자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

134) Modern Manufacturing Strategy: 호주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6가지 중점 분야(자원 기술 및 주요 광물 처리, 식음료, 의료용 제품, 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국방, 우주)에 대해 로드맵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참고: <https://www.industry.gov.au/sites/default/files/October%202020/document/make-it-happen-modern-manufacturing-strategy.pdf>, 검색일자: 2022.5.11.)

135) Regional Accelerator Program: 기반시설, 첨단제조, 견습 및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다각화하고 신규·기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호주는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였고, 특히 노동시장 및 소비 지출에서 예상보다 강한 모멘텀을 보이면서 지난 FY2021-22 MYEFO¹³⁶⁾ 대비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됨
- (경제 성장률) 소비, 기업 투자 및 수출 부문의 성장세로 실질 GDP 성장률은 FY2022-23에 3.5%, FY2023-24에는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예상보다 강한 소비 지출 및 고용 상황으로 인해 FY2021-22 실질 GDP 성장률은 4.25%로 지난 MYEFO 수치(3.7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
 - FY2024-25 및 FY2025-26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 MYEFO 수준인 2.5%로 전망
- (고용) 노동 참여율이 기록적인 수치¹³⁷⁾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회복세는 다시 고용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2022년 3사분기에 3.75%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년 전 예산안 상의 예측치 대비 약 3%p 낮고, 약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 노동 시장의 빠른 회복으로 약 10년 만에 임금 상승이 가장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물가) 인플레이션은 재화에 대한 수요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완만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4사분기에 3.5%를 기록하였고,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사분기에는 4.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136)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반기 경제·재정 전망으로 보통 7월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12월경 발표

137) 2022년 2월 기준 66.4%

-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을 받았으나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되어 2023년 2사분기 3%, 2024년 2사분기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리스크) COVID-19 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급망 차질 및 물가 상승 압력은 세계와 국내 경제 전망의 주요 위협
 - 치명률이 높거나 백신에 내성이 있는 COVID-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이는 국내 경제에 상당한 하방 위협으로 작용할 것임
 - 반대로, 접종률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향상된다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 높아졌던 가계 저축률이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가 소비가 촉진될 것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물가와 경기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
 - 호주는 러시아 무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갈등이 고조되거나 장기간 유지된다면 이는 호주 경제에 하방 위협으로 작용할 것임
 -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높고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계속된다면 이는 국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

〈표 VI-1〉 호주의 주요 경제 변수 전망(FY2022-23 Budget)

(단위: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실질 GDP 성장률	1.5	4.25	3.5	2.5	2.5	2.5
고용 성장률	6.5	2.75	1.5	1.5	1	1
실업률	5.1	4	3.75	3.75	3.75	4
소비자물가지수	3.8	4.25	3	2.75	2.75	2.5
임금물가지수	1.7	2.75	3.25	3.25	3.5	3.5
명목 GDP 성장률	4.4	10.75	0.5	3	5.25	5

주: 실질GDP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고용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임금물가지수는 2분기(June Quarter)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분기(June Quarter) 기준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6 〈Table 1.1〉

〈표 VI-2〉 호주의 주요 경제 변수 전망(FY2021-22 MYEFO)

(단위: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실질 GDP 성장률	1.5	3.75	3.5	2.25	2.5	-
고용 성장률	6.5	1	2	1.5	1.25	-
실업률	5.1	4.5	4.25	4.25	4.25	-
소비자물가지수	3.8	2.75	2.5	2.5	2.5	-
임금물가지수	1.7	2.25	2.75	3	3.25	-
명목 GDP 성장률	4.4	6.5	1.25	4.5	5	-

출처: 호주 연방정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1-22*, 2021.12., p.2, Table 1.2

나. 재정 전망

- 성공적인 방역 정책과 COVID-19에 대응한 경제 지원이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오미크론 발병과 최근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재정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예상보다 노동 시장 회복이 강하게 이루어졌고, 단기 원자재 가격 또한 상승하면서 세수가 확대되었기 때문
- (재정수지) FY2025-26까지 5년 동안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지난 MYEFO 대비 총 1,036억호주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수입(Receipts)은 FY2022-23에 GDP의 23.8%에서 FY2032-33에 GDP의 25.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출(Payments)은 FY2022-23에 GDP의 27.2%에서 FY2025-26에 GDP의 26.3%까지 감소한 후, FY2032-33에 26.5%에 이르는 등 중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FY2022-23 예산수지 적자는 지난 MYEFO 대비 209억호주달러 개선된 780억호주달러(GDP의 3.4%)가 될 것으로 예상
 - 중기적으로는 FY2025-26에 431억호주달러(GDP의 1.6%)에서 FY2032-33에 GDP의 0.7%까지 계속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채무) 경제 성장이 채무 비용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채무비율은 단기적으로 안정되고 중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COVID-19에 대응한 상당한 재정 비용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채무 부담은 여전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여러 선진국 대비 낮은 채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명목 GDP가 크게 증가하여 순채무(Net debt)는 FY2020-21에 GDP의 28.6%에서 FY2021-22에 27.6%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2023년 6월 30일 기준, 순채무는 GDP의 31.1%(7,149억호주달러)로 추정되는 데, 이는 지난 MYEFO의 GDP의 34.7%(7,731억호주달러) 대비 낮은 수준
 - 중기적으로는 2033년 6월 30일 기준, GDP의 26.9%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총채무(Gross debt)는 FY2021-22에 GDP의 39.5%에서 2025년 6월 30일 기준 GDP의 44.9%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중기적으로는 2033년 6월 30일 기준 GDP의 40.3%로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지난 MYEFO 대비 9.6%p(2,360억호주달러) 낮은 수치

〈표 VI-3〉 호주의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추정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TOTAL
수입(Receipts) ¹⁾	519.9	556.6	547.6	585.2	615.2	643.9	2,392.0
GDP 대비 비율	25.1	24.3	23.8	24.7	24.7	24.6	-
지출(Payments) ¹⁾	654.1	636.4	625.6	641.7	662.3	687.0	2,616.6
GDP 대비 비율	31.6	27.8	27.2	27.1	26.6	26.3	-
예산수지 (Underlying Cash Balance) ²⁾	-134.2	-79.8	-78.0	-56.5	-47.1	-43.1	-224.7
GDP 대비 비율	-6.5	-3.5	-3.4	-2.4	-1.9	-1.6	-
재정수입(Revenue) ³⁾	523.0	566.4	560.9	595.7	621.7	655.2	2,433.6
GDP 대비 비율	25.3	24.7	24.4	25.2	25.0	25.1	-
재정지출(Expenses) ³⁾	651.9	639.6	628.5	643.8	665.4	686.8	2,624.5
GDP 대비 비율	31.5	27.9	27.3	27.2	26.7	26.3	-
순영업수지 (Net operating balance)	-128.9	-73.2	-67.5	-48.2	-43.6	-31.6	-190.9
GDP 대비 비율	-6.2	-3.2	-2.9	-2.0	-1.8	-1.2	-
순자본투자 (Net capital investment)	7.2	11.1	11.3	10.6	7.4	8.2	37.5
GDP 대비 비율	0.3	0.5	0.5	0.4	0.3	0.3	-
재정수지(Fiscal balance) ⁴⁾	-136.1	-84.2	-78.8	-58.8	-51.1	-39.8	-228.4
GDP 대비 비율	-6.6	-3.7	-3.4	-2.5	-2.1	-1.5	-
순채무(Net debt) ⁵⁾	592.2	631.5	714.9	772.1	823.3	864.7	-
GDP 대비 비율	28.6	27.6	31.1	32.6	33.1	33.1	-
총채무(Gross debt) ⁶⁾	817.0	906.0	977.0	1,056.0	1,117.0	1,169.0	-
GDP 대비 비율	39.5	39.5	42.5	44.6	44.9	44.7	-

주: TOTAL은 FY2022-23부터 FY2025-26까지 수치의 합

1) 현금주의 기준

2) 현금주의 기준. 예산수지=수입-지출, 2020-21 이전은 미래기금(Future Fund) 순예상수익 제외

3) 발생주의 기준

4) 발생주의 기준.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5) 채무(예금, 정부채권(시장가), 대출 및 기타 차입금)에서 자산(현금 및 예금, 선금금, 투자, 대출 및 출자 금액)을 차감

6) 정부채권(액면가)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75, Table 3.2; p.102, Tabl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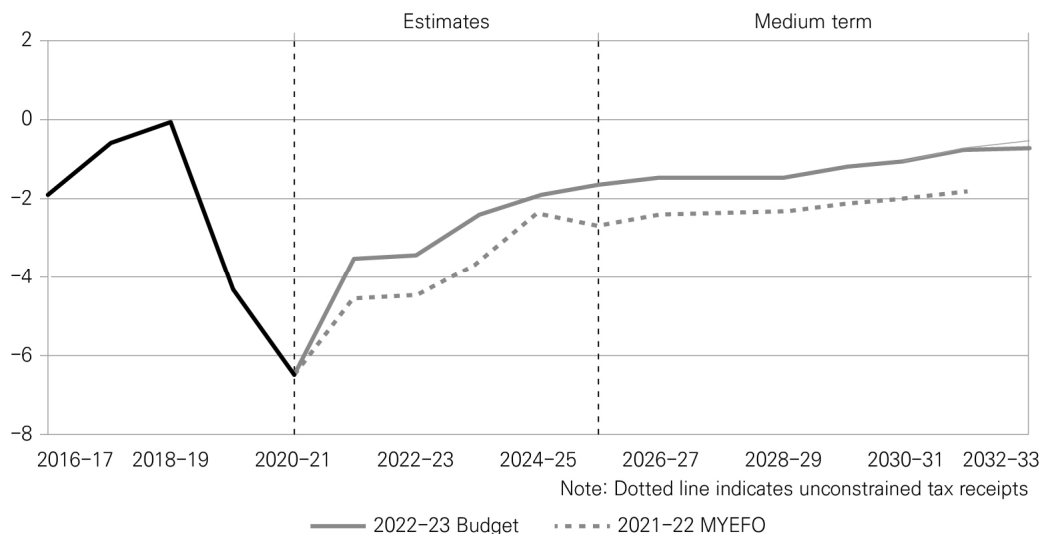
-
- (경제·재정 전략) 호주 정부는 강한 경기 회복과 저실업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재정 전략을 “중기 재정 전략” 단계로 전환함
 - 경제·재정 전략은 지속가능한 민간 주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미래의 충격에 잘 대응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
 - FY2021-22 예산안에서 “COVID-19 경제 회복 계획”과 “중기 재정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COVID-19 경제 회복 계획) 고용 및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및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기 재정 전략) 채무의 안정과 감축을 위해 경기 성장에 집중하는 재정 전략
 - “중기 재정 전략”으로의 전환은 긴급 재정지원의 시대는 지났고 채무 안정화 및 감소를 위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재정 정상화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2 예산기조 및 편성 방향

- (예산기조) 저실업 목표를 달성한 정부는 채무 안정 및 감소를 위해 경제·재정 전략을 “중기 재정 전략” 단계로 전환하여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둠
 - 노동시장이 강한 회복을 보였고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세수가 증가하여 예산수지 전망치가 MYEFO 대비 개선됨
 - FY2022-23 예산수지는 GDP 대비 3.4%(780억호주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며, FY2025-26에는 GDP 대비 1.6%(431억호주달러)의 적자를 보이면서 중기적으로 개선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그림 VI-1] 호주의 GDP 대비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as a share of GDP)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79, Chart 3.2

- (편성 방향¹³⁸) 더 많은 일자리 제공, 생활비의 선별적 지원, 지역 경제 강화, 의료 시스템 등의 필수 서비스에 대한 투자 강화, 국가 안보 및 회복력 있는 경제 투자 등 더욱 강력한 미래 건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 (경제 강화) 소기업의 디지털화, 직업 훈련, 숙련 노동자의 이주 장려, 견습생 교육 및 국경 재개, 제조 전략 현대화¹³⁹) 등에 투자하여 더욱 강력하고 생산적인 경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 패키지(임시·선별적), 유류세 감면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
 - (홍수피해 복구 지원)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응하고 해당 지역의 복구를 위해 지원
 - (지역 경제 및 인프라 투자) 4개의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도로 및 철도 인프라 10년 계획을 시행하며, 지역 성장 및 생산성 촉진을 위해 지역발전 가속화 프로그램¹⁴⁰)을 수립
 - (필수 서비스 보장) 동절기 COVID-19 유행에 대비하고,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연구, 노인 돌봄, 교육, 여성 안전, 격차 해소, 재향 군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
 - (불확실성 대응) 국가 안보 및 국방 능력에 투자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

138) 주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동 보고서 pp.21~29를 참고바람

139) Modern Manufacturing Strategy: 호주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6가지 중점 분야(자원 기술 및 주요 광물 처리, 식음료, 의료용 제품, 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국방, 우주)에 대해 로드맵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참고: <https://www.industry.gov.au/sites/default/files/October%202020/document/make-it-happen-modern-manufacturing-strategy.pdf>, 검색일자: 2022.5.11.)

140) Regional Accelerator Program: 기반시설, 첨단제조, 견습 및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다각화하고 신규·기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3 예산안 내용

가. 수입

- 현금주의 기준 일반정부 수입(cash receipts)은 예상보다 강한 회복을 보인 노동 시장과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FY2021-22 MYEFO 및 예산안 전망치 대비 높게 나타남
 - FY2021-22 예산안 기준 FY2021-22 수입은 4,820.5억호주달러였으나 FY2022-23 예산안에서는 745.7억호주달러 증가한 5,566.3억호주달러로 추정됨
 - 개선된 경제 전망으로 인하여 FY2022-23 이후 전망 기간 전반에 걸쳐 수입 전망치가 상향 조정됨
 - 지난 MYEFO 이후 수입은 FY2022-23에 312억호주달러, FY2025-26까지 총 1,205억호주달러 상향 조정

〈표 VI-4〉 호주의 2021-22 예산안 및 2021-22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2022-23 예산안의 일반정부 수입(general government receipts)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추정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1-22 예산안 수입(a)	482,053	494,000	532,855	571,969	*
변동(b-a)	50,077	22,449	17,399	19,196	*
2021-22 MYEFO 수입(b)	532,130	516,449	550,254	591,165	613,560
변동(c-b)	24,496	31,183	34,954	24,072	30,339
2022-23 예산안 수입(c)	556,626	547,632	585,208	615,237	643,900

주: 현금주의 기준이며, * 표시는 데이터 없음을 의미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116, Table 4.2

- 현금주의 기준 조세 수입(taxation receipts)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과 경제 전망 개선으로 인해 FY2021-22 MYEFO 및 예산안 전망치 대비 높게 나타남
 - FY2021-22 예산안 기준 FY2021-22 조세 수입은 4,456.0억호주달러였으나 FY2022-23 예산안에서는 668.8억호주달러 증가한 5,124.8억호주달러로 추정됨

- 세목별 수입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FY2022-23 이후 전망 기간 전반에 걸쳐 조세 수입 전망치가 상향 조정됨
- 지난 MYEFO 이후 조세 수입은 FY2022-23에 299억호주달러, FY2025-26까지 총 1,261억호주달러 상향 조정

〈표 VI-5〉 호주의 2021-21 예산안 및 2021-22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2022-23 예산안의 조세 수입(taxation receipts)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추정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1-22 예산안 수입(a)	445,599	455,328	493,106	525,353	*
변동(b-a)	44,888	23,200	14,502	14,119	*
2021-22 MYEFO 수입(b)	490,487	478,528	507,609	539,472	563,285
변동(c-b)	21,993	29,872	34,148	27,153	34,948
2022-23 예산안 수입(c)	512,480	508,400	541,757	566,625	598,233

주: 현금주의 기준이며, * 표시는 데이터 없음을 의미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117, Table 4.3

□ 주요 세목별 수입 변화

- (개인소득세) 지난 MYEFO 대비 개인소득세 수입¹⁴¹⁾은 FY2022-23에 138억호주달러, FY2025-26까지 4년 동안 900억호주달러만큼 상향 조정됨
 - 이는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고 평균 임금이 높아져 세금 징수액이 지난 MYEFO 대비 높게 추정되었기 때문
- (부가급부세) 지난 MYEFO 대비 부가급부세 수입¹⁴²⁾은 FY2022-23에 4천만호주달러, FY2025-26까지 4년 동안 5억 8천만호주달러만큼 상향 조정됨
 -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부가급부 혜택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추정기간 동안 수입 기반이 개선되었기 때문

141) 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ation receipts

142) Fringe benefits tax receipts: 부가급부(Fringe benefits)는 임금 외에 근로자가 고용주의 부담으로 받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혜택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이러한 혜택이 직원에게 제공된 경우 고용주는 부가급부세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됨.

- (법인세) 지난 MYEFO 대비 법인세 수입¹⁴³⁾은 FY2022-23에 103억호주달러, FY2025-26까지 4년 동안 98억호주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FY2021-22 및 FY2022-23 법인세 수입 증가는 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원 부문에서 세수입이 늘어난 결과로, 이러한 강세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난 MYEFO 이후 발표된 새로운 조세정책은 FY2025-26까지 4년 동안 법인세 수입을 6억호주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표 VI-6〉 호주의 2022-23 예산안 일반정부 수입(general government receipts) 규모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추정		변동	
	2021-22 MYEFO(a)	2022-23 예산안(b)	금액(b-a)	비율
조세수입(Taxation Receipts)	478,528	508,400	29,872	6.2
소득세(Income taxation Receipts)	347,650	375,790	28,140	8.1
개인소득세(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	250,100	263,900	13,800	5.5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3,590	3,630	40	1.1
법인세(Company tax)	79,900	90,200	10,300	12.9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12,660	15,660	3,000	23.7
석유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1,400	2,400	1,000	71.4
간접세(Indirect taxation Receipts)	130,878	132,610	1,732	1.3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76,861	79,432	2,571	3.3
주류세(Wine equalisation tax)	1,100	1,170	70	6.4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	720	880	160	22.2
소비세 및 관세 (Total excise and customs duty)	43,600	42,560	-1,040	-2.4
주요 은행세(Major bank levy)	1,600	1,550	-50	-3.1
농업세(Agricultural levies)	541	560	19	3.4
기타간접세(Other taxes)	6,456	6,458	2	0.0
세외수입(Non-taxation Receipts)	37,921	39,232	1,311	3.5
재정수입(Total Receipts)	516,449	547,632	31,183	6.0

주: 현금주의 기준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126, Table 4.6

143) company tax receipts

〈표 VI-7〉 호주의 2022-23 예산안 세목별 일반정부 수입(general government receipts) 전망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실적	추정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조세수입(Taxation Receipts)	473,850	512,480	508,400	541,757	566,625	598,233
소득세(Income taxation receipts)	349,058	390,940	375,790	402,240	420,380	446,640
개인소득세(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	232,961	252,300	263,900	289,000	290,300	308,200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3,569	3,330	3,630	3,930	4,120	4,330
법인세(Company tax)	98,786	109,100	90,200	87,500	103,000	109,600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12,956	24,560	15,660	19,410	20,560	22,110
석유세 (Petroleum resource rent tax)	786	1,650	2,400	2,400	2,400	2,400
간접세(Indirect taxation receipts)	124,792	121,540	132,610	139,517	146,245	151,593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72,932	72,782	79,432	82,921	86,603	90,362
주류세(Wine equalisation tax)	1,119	1,140	1,170	1,200	1,250	1,300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	914	880	880	850	890	940
소비세 및 관세(Total excise and customs duty)	42,582	39,350	42,560	44,950	47,600	49,170
주요 은행세(Major bank levy)	1,619	1,500	1,550	1,600	1,650	1,750
농업세(Agricultural levies)	525	600	560	572	578	589
기타간접세(Other taxes)	5,101	5,289	6,458	7,424	7,673	7,483
세외수입(Non-taxation receipts)	46,063	44,146	39,232	43,451	48,612	45,667
판매수입(Sales of goods and services)	16,390	17,626	18,346	19,520	20,413	20,943
이자수입(Interest received)	2,812	2,557	2,820	3,393	3,670	3,932
출자수입 (Dividends and distributions)	9,757	9,142	5,284	5,672	6,048	6,418
기타세외수입(Other sources of non-taxation receipts)	17,105	14,821	12,783	14,866	18,481	14,374
재정수입(Total Receipts)	519,913	556,626	547,632	585,208	615,237	643,900

주: 현금주의 기준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127, Table 4.7

※ 발생주의 수입

- 발생주의 기준 일반정부 수입(accrual revenue)은 지난 MYEFO 이후 FY2022-23에 306억호주달러 높게 추정되었고, FY2025-26까지 4년 동안 1,162억호주달러 상향 조정됨

〈표 VI-8〉 호주의 2021-22 예산안 및 2021-22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2022-23 예산안의 일반정부 수입(general government revenue)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추정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1-22 예산안 수입(a)	496,621	505,145	544,487	577,959	*
변동(b-a)	45,907	25,195	19,482	19,364	*
2021-22 MYEFO 수입(b)	542,528	530,340	563,969	597,323	*
변동(c-b)	23,889	30,606	31,691	24,417	*
2022-23 예산안 수입(c)	566,417	560,947	595,660	621,741	655,232

주: 발생주의 기준이며, * 표시는 데이터 없음을 의미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128, Table 4.8

〈표 VI-9〉 호주의 2022-23 예산안 일반정부 수입(general government revenue) 규모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추정		변동	
	2021-22 MYEFO(a)	2022-23 예산안(b)	금액(b-a)	비율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491,087	520,959	29,872	6.1
소득세(Income taxation Revenue)	355,870	384,010	28,140	7.9
개인소득세(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	256,300	270,100	13,800	5.4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3,540	3,580	40	1.1
법인세(Company tax)	81,900	92,200	10,300	12.6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12,690	15,690	3,000	23.6
석유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1,440	2,440	1,000	69.4
간접세(Indirect taxation Revenue)	135,217	136,949	1,732	1.3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79,880	82,460	2,580	3.2
주류세(Wine equalisation tax)	1,120	1,190	70	6.3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	720	880	160	22.2
소비세 및 관세(Total excise and customs duty)	43,600	42,560	-1,040	-2.4
주요 은행세(Major bank levy)	1,620	1,570	-50	-3.1
농업세(Agricultural levies)	541	560	19	3.4
기타간접세(Other taxes)	7,735	7,729	-7	-0.1
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	39,254	39,988	734	1.9
재정수입(Total Revenue)	530,340	560,947	30,606	5.8

주: 발생주의 기준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130, Table 4.10

나. 지출

- FY2022-23 발생주의 기준 일반정부 지출(accrual expenses)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6,285억호주달러로 예상됨
 - 이러한 지출 감소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의 지원이 상당 규모 감소했기 때문
 - FY2023-24에서 FY2025-26 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GDP 대비 지출 비중은 FY2021-22 27.9%, FY2025-26 26.3%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추정 기간 동안 GDP 개선이 반영된 것

〈표 VI-10〉 호주의 일반정부 재정 지출(expenses) 추정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2021-22 MYEFO	2022-23 예산안				
		수정	추정			
	2021-2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4-25
총 지출	633.8	639.6	628.5	643.8	665.4	686.8
전년대비 증가율	-5.6	-5.4	-5.0	-0.5	0.5	0.6
GDP 대비 비중	28.8	27.9	27.3	27.2	26.7	26.3

주: 전년대비 증가율은 실질 증가율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활용하여 산출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139, Table 5.1.1

□ 기능별 지출 현황

- (국방) FY2021-22에서 FY2025-26까지의 지출 증가는 2016년 국방백서¹⁴⁴⁾ 및 2020년 군사구조계획¹⁴⁵⁾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증가를 반영
- (교육) FY2021-22에서 FY2025-26까지의 지출 증가는 학교 개선 패키지¹⁴⁶⁾ 시행과 사립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

144) the 2016 Defence White Paper

145) the 2020 Force Structure Plan

146) the Quality Schools package

- (보건) FY2021-22와 FY2022-23 사이의 지출 감소는 주로 COVID-19 비상 대응 조치의 일부 중단에 기인
 - FY2022-23에서 2025-26까지의 지출 증가는 주정부 공립병원의 서비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증가를 반영
- (사회보장·복지) FY2021-22와 FY2022-23 사이의 지출 감소는 FY2021-22에 COVID-19 재난 지원금¹⁴⁷⁾ 및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¹⁴⁸⁾의 높은 지출 수준에 기인
 - FY2022-23에서 FY2025-26까지의 지출 증가는 주로 노령연금,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보조인에 대한 지출 증가에 기인
- (교통·통신) FY2021-22와 FY2022-23의 지출 증가는 도로 및 철도 인프라에 대한 정부 우선순위 정책을 대폭 반영한 결과
 - FY2022-23에서 FY2025-26까지의 지출 감소는 단기 경기부양 이니셔티브의 종료에 기인
- (기타 경제 부문) FY2021-22와 FY2022-23의 지출 감소는 주로 COVID-19 팬데믹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고 FY2022-23에 COVID-19 비즈니스 지원 보조금¹⁴⁹⁾이 종료됨에 기인
- (기타 목적) FY2022-23에서 FY2025-26까지의 지출 증가는 주로 주 및 준주¹⁵⁰⁾에 지급될 일반 수입 보조금(대부분 부가가치세)¹⁵¹⁾과 긴급 대응을 위한 예비비의 보수적인 편성에 기인

147) the COVID-19 Disaster Payment

148) the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149) the COVID-19 Business Support Payment

150) 호주는 크게 6개 주(state;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테즈메이니아주)와 2개 준주(territory; 오스트레일리아수도준주, 노던준주)로 구성

151) 호주 연방정부가 각 주 및 준주에 지급하는 일반 세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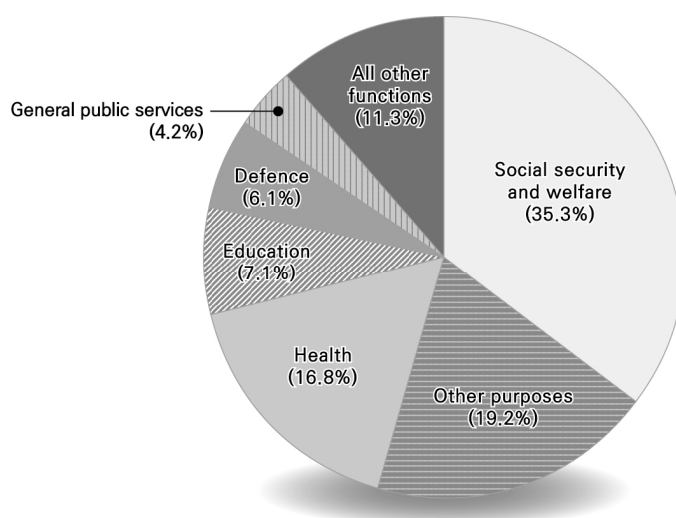
〈표 VI-11〉 호주의 FY2022-23 예산안 기능별 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기능	추정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일반 공공서비스	33,121	26,518	25,514	27,159	25,821
국방	35,882	38,268	39,672	41,661	44,544
공공질서 및 안전	6,713	7,014	6,364	6,265	5,729
교육	43,357	44,788	46,034	47,353	48,977
보건	111,467	105,754	102,575	106,225	109,932
사회보장 및 복지	227,800	221,685	229,996	237,837	248,953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8,431	8,221	7,174	6,944	6,274
여가 및 문화	4,716	4,493	4,330	4,238	4,206
연료 및 에너지	8,444	9,381	10,647	10,922	11,347
농림·임업·수산	4,119	4,810	3,846	2,690	2,602
광업·제조·건설	4,310	4,781	4,616	4,012	4,081
교통·통신	16,070	18,915	20,570	18,020	12,739
기타 경제부문	23,631	13,155	10,919	10,716	10,431
기타	111,508	120,685	131,575	141,328	151,202
총액	639,569	628,469	643,833	665,369	686,839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141 〈Table 5.3〉

[그림 VI-2] 호주의 FY2022-23 예산안 기능별 지출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143, Chart 5.1

〈표 VI-12〉 호주의 FY2022-23 상위 20개 지출 프로그램

(단위: 백만호주달러)

프로그램 ¹⁾	기능	추정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주와 준주에 대한 수입 보조금 (Revenue assistance to the States and Territories)	기타	76,495	84,787	88,405	92,667	94,158
노령 인구 지원 (Support for Seniors)	사회보장·복지	51,610	54,153	56,579	58,846	61,895
국가장해보험계획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사회보장·복지	30,773	35,756	39,444	42,857	46,083
의료 급여(Medical Benefits)	보건	30,431	30,794	31,674	33,296	34,989
노인 요양 서비스 (Aged care services)	사회보장·복지	24,551	27,770	30,083	31,432	33,010
주립 병원 지원 (Assistance to the States for public hospitals)	보건	25,013	27,333	28,717	30,659	32,653
가족 지원(Family Assistance)	사회보장·복지	19,295	20,640	21,387	21,705	22,222
장애인 재정 지원(Financial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y)	사회보장·복지	18,279	18,965	19,951	20,571	21,316
의약품혜택 (Pharmaceutical Benefits)	보건	15,633	16,414	16,289	16,413	16,468
사립학교 국가지원 (Non-government schools National Support)	교육	15,302	16,126	16,890	17,468	18,005
구직자 소득 지원 (Job seeker income support)	사회보장·복지	15,783	12,548	11,910	12,059	12,672
국가 파트너십 지출 - 도로 교통 (National Partnership Payments - Road Transport)	교통 및 통신	8,120	11,772	13,266	11,286	6,693
탁아보조금 (Child Care Subsidy)	사회보장·복지	9,918	10,713	11,319	11,828	12,403

〈표 VI-12〉의 계속

(단위: 백만호주달러)

프로그램 ¹⁾	기능	추정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간병인 재정 지원(Financial Support for Carers)	사회보장·복지	9,867	10,316	10,892	11,394	11,928
공립학교 지원 (Government schools National Support)	교육	9,726	10,284	10,808	11,220	11,652
공공 연금 ²⁾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Benefits)	기타; 일반공공서비스	8,654	9,118	9,125	9,140	9,486
군인 퇴직연금 ²⁾ (Defence Force Superannuation)	기타; 일반공공서비스	10,495	8,307	8,748	9,101	9,512
육군 능력 (Army capabilities)	국방	7,624	7,941	8,752	8,934	9,038
공군 능력 (Air Force capabilities)	국방	6,934	7,764	8,302	9,398	5,928
유류세 공제 계획 (Fuel Tax Credits Scheme)	연료·에너지	6,894	7,721	9,262	9,952	10,699
상위 20 지출 프로그램 합계		401,398	429,224	451,803	470,229	480,810
기타 프로그램		238,172	199,245	192,030	195,141	206,029
총지출		639,569	628,469	643,833	665,369	686,839

주: 1) 해당 프로그램 내의 기관 간 거래는 제외

2) 동 프로그램은 해당 연금의 명목이자 및 발생주의 지출로 구성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2022.3.29., p.144, Table 5.3.1

4 주요 재정정책

가. 강력하고 생산적인 경제 건설

- (소기업 지원) “기술 투자 촉진”¹⁵²⁾과 “숙련 및 훈련 촉진”¹⁵³⁾을 통해 소기업이 기업의 운영을 디지털화하고 직원의 숙련(skill)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기술 투자 촉진”을 통해 연간 총매출액이 5천만호주달러 미만인 소기업은 사업비용의 20%와 디지털 활용을 지원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연간 최대 10만호주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은 10억호주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소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숙련 및 훈련 촉진”을 통해 소기업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외부 교육 과정 비용에 대해 20%의 보너스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은 5억 5천만호주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기술 향상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낮은 실업률 유지 및 직장 복귀 지원) ReBoot 조직을 통해 취약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Workforce Australia¹⁵⁴⁾를 지원(5,280만호주달러)
 - ReBoot 조직을 통해 장기 실업자가 될 위험이 높은 약 5천명의 취약 청년들의 생활과 취업 능력을 개선할 계획
 - Workforce Australia를 통해 취약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주에게는 개선된 인센티브를 제공
 - 2022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약 180만명의 구직자가 동 플랫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

152) Technology Investment Boost

153) Skills and Training Boost

154) 2022년 7월 1일부터 jobactive를 대체하는 변형된 고용 서비스 플랫폼

- (경제 강화) 더욱 강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대학 연구 상업화 계획, 디지털 경제 전략 등에 투자하고, 정부 규제 완화 다음 단계를 이행
- (아이디어의 상업화) 정부는 22억호주달러 규모의 대학연구 상업화 계획¹⁵⁵⁾을 통해 미래 기업과 제품에 투자할 계획
 - 동 계획에는 청정 에너지, 의료 제품, 국방 및 기타 우선순위가 높은 제조 분야 연구를 포함(16억호주달러)
 - 선별된 대학이 우선순위 연구 및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계 파트너들과 상업화 결과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Trailblazer Universities Program을 포함(2.4억호주달러)
 - (디지털 경제에 투자) 정부는 2030년까지 호주를 상위 10대 디지털 경제·사회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경제 전략¹⁵⁶⁾에 따른 투자를 계속할 예정
 - 고객 개인정보 권리와 미래 방향성 보고서¹⁵⁷⁾에 따른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FY2022-23부터 3,840억호주달러를, FY2025-26부터 1,260억호주달러를 매년 투입할 예정
 - (정부 규제 완화) 정부 규제 완화 다음 단계를 위해 정부와 더 간단하고 빠르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현대화 프로그램¹⁵⁸⁾에 4억 8,050만호주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록 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개혁
 - 또한 정부는 연료·알코올 소비세 및 이에 상응하는 관세 관리를 간소화하여 연료 및 알코올 산업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

155) University Research Commercialisation Action Plan

156) Digital Economy Strategy

157) Future Directions for the CDR(Consumer Data Right): 동 보고서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의 기능을 확장하고 향상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며, 100가지 권장사항을 제공(참고: Point 정책정보포털,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20210263357, 검색일자:2022.5.9.)

158) Modernising Business Registers program

□ (무역 및 관광업 지원) 관광부문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무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투자할 예정

- “부흥 2030(THRIVE 2030)” 전략 및 실행 계획을 통해 관광 부문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6천억호주달러 규모의 관광 마케팅 회복 계획을 포함)
- 정부는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호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더 쉽게 경쟁할 수 있도록 Simplified Trade System에 1억 8,710만호주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예정

나. 생활비 지원

□ 전염병, 우크라이나 침공 및 기상이변으로 인해 생긴 가계와 기업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적이고 선별적인 생활비 지원 정책을 수립

- (저소득·중산층 세금 감면) 저소득·중산층 소득세 감면을 통해 생활비가 경감(420호주달러)될 예정으로, 이는 전망 기간 동안 41억호주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 (생활 보조금 지급) 적격 노인연금 수급자, 복지 수혜자, 재향 군인 및 복지혜택 카드 소지자에게 250호주달러의 일회성 면세 보조금¹⁵⁹⁾을 지급할 계획
 - 예산 규모는 15억호주달러, 대상은 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저렴한 주택’¹⁶⁰⁾ 지원) 주택금융투자공사¹⁶¹⁾가 커뮤니티 주택 공급자¹⁶²⁾에게 제공하는 저비용 대출 한도를 20억호주달러에서 55억호주달러로 상향 조정
 - 이번 대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취약계층에게 약 1만채의 ‘저렴한 주택’을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59) one-off, tax-exempt payment

160) affordable housing: 여러 형태의 주택 유형 중 하나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의미

161) 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NHFIC)

162) Community Housing Providers: 빈곤층,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또는 추가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대부분 특정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특징이 있음

다. 홍수 피해 복구 지원

- 정부는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지원(60억호주달러 이상의 지출 예상)
 - 소득 지원, 임시 숙소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22억호주달러 지원(가구 대상)
 - 보수, 새로운 장비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 6,500만호주달러 투입(농업인 및 기업 대상)
 - 지역사회 정화 및 복구를 위해 5억 8,860만호주달러 지원(비상대응 기금¹⁶³) 3억호주달러 포함)

라. 지역 경제 및 인프라 강화

- (지역 인프라) 다음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여(71억호주달러)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가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노던 준주¹⁶⁴) 주도(capital) 다윈(Darwin)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시아 지역 수출을 위해 관련 기반시설에 26억호주달러를 투자
 - (퀸즐랜드 주¹⁶⁵) 북부 및 중부) 수자원 인프라 및 공급망 프로젝트에 17억호주달러를 투자
 - (필바라 주¹⁶⁶) 저배출 생산을 증가시켜 북서부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15억호주달러를 투자
 - (헌터 지역) 공급망 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운송 및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에 7억 5천만호주달러를 투자

163) Emergency Response Fund

164) Northern Territory

165) Queensland

166) Pilbara

- (수자원 인프라) 물 안보¹⁶⁷⁾ 개선 및 관개용 토지 개방을 위해 National Water Grid Fund를 통해 74억호주달러를 투입할 계획
 - 둔고완(Dungowan) 댐 건설에 4억 3,300만호주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다윈 지역 물 안보 개선을 위해 3억 600만호주달러를 지원
 - 노스 버넷(North Burnett), 그레니트 벨트(Granite Belt) 지역의 관개 농업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각각 6억호주달러, 1억 2,650만호주달러를 투입
 - 헬스 게이트즈(Hells Gates) 댐 건설에 54억호주달러를 투입하여 퀸즐랜드 농업 부문에 변화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확대 및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
- (지역 통신망) 호주 전역의 통신망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이동통신 취약지역 지원 프로그램¹⁶⁸⁾과 지역 연결성 프로그램¹⁶⁹⁾에 13억호주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
 - 약 8천km에 달하는 지역 운송 경로와 주변에서의 이동통신 취약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 재해로부터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8억 1,180만호주달러 투입
 - MBN¹⁷⁰⁾의 고정 무선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고, 위성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4억 8천만호주달러 편성
 - 이를 통해 지방, 외곽지역, 도시근교의 최대 100만 가구와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도로 및 철도) 1,200억호주달러 규모의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 10년 프로젝트에 다음을 포함하여 179억호주달러를 추가 투입할 계획
 - 멜버른 복합 터미널 및 관련 인프라¹⁷¹⁾ 조성에 31억호주달러
 - 이를 통해 화물 운송 산업의 효율성과 수용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167) water security: 인간과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좋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물과 관련된 재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출처: 김익재 외, 『물관리 취약성과 물안보 전략Ⅲ』, 한국환경연구원, 2011, p.117.)

168) Mobile Black Spot Program

169) Regional Connectivity program

170) National Broadband Network(MBN): 호주 전역에 광통신망을 설치 중인 전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공사

171) Melbourne Intermodal Terminals Package

- 퀸즐랜드 주의 브리즈번-선샤인 코스트, 브리즈번-골드 코스트¹⁷²⁾를 연결하는 고속 철도 프로젝트에 27억호주달러
- 호주 남부 달링턴 - 안작 간 고속도로¹⁷³⁾ 프로젝트에 23억호주달러

마. 필수 서비스 보장

- (위드 코로나¹⁷⁴⁾ 시대 대비) 신종 변이 출현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치료제 및 의료 시스템 역량을 유지하는 데 힘쓸 계획
 - 팬데믹 이후 정부는 COVID-19 대응을 위해 주 및 준주에 116억호주달러를 지원한 바 있음
 - 금번 예산안을 통해 동절기 대응 계획 등 COVID-19 보건 지원 명목으로 60억호주달러를 추가 투입할 계획
 - COVID-19 대응 국가 파트너십¹⁷⁵⁾에 따라 9억 8,400만호주달러를 추가 지원
 - 높은 백신 접종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COVID-19 백신 프로그램에 10억호주달러를 투자
 - COVID-19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농촌이나 원주민 사회를 대상으로 보건 및 예방 접종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 (보건 정책) 메디케어 보장, 노인 돌봄 예산 추가 투입, 돌봄·지원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보건 정책을 강화할 계획
 - (메디케어)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계속 보장받을 수 있도록 5년에 걸쳐 3억 6,800만호주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
 - 예비 부모가 유전 질환 보인자인지 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 도입하여 FY2022-23부터 4년간 8,120만호주달러를 지원할 예정

172) Sunshine Coast, Gold Coast

173) Darlington to Anzac Highway

174) with COVID-19: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의미

175) National Partnership on COVID-19 Response: 공립 병원, COVID-19 검사 및 광범위한 공중보건 대응을 지원

- FY2021-22부터 5년 동안 24억호주달러를 투입하여 필수 의약품¹⁷⁶에 대해 본인 부담 비용을 낮출 계획
- (노인 돌봄) 노인을 위한 약물 관리 서비스 개선 등 노인 돌봄을 위해 FY2022-23에 4억 6,830만호주달러를 추가 투입할 계획
- (돌봄 및 지원 인력) 돌봄(care) 및 지원(support)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돌봄 및 지원 인력 전략”¹⁷⁷을 수립
 - 동 전략을 통해 해당 부문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품질 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구축하고자 함
- (지역사회 지원) 여성·아동의 안전, 교육성과 향상, 보육 접근성 제고, 원주민 격차 해소, 장애인 및 재향군인 생활 개선 등 지역사회 전반에 지원을 계속할 계획
 - (여성·아동) “2022-32 여성·아동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계획”¹⁷⁸ 실행을 위해 13억 호주달러 지원
 - 자금 지원은 예방, 조기 개입, 대응, 복구의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으로, 각 단계별 지원 금액은 각각 2억 360만호주달러, 3억 2,820만호주달러, 4억 8,010만 호주달러, 2억 9,090만호주달러
 - (교육) 지방 및 도서지역 학생들의 교육성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4년에 걸쳐 2,940만호주달러를 투자
 - 원주민 기숙 학교 지원 프로그램¹⁷⁹을 1년 연장하고 가족의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영연방 지역 장학금 프로그램¹⁸⁰을 도입할 예정
 - (보육) 지방 및 도서지역 가구에 대해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
 - 보육 서비스가 없거나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에 1,940만호주달러를 지원하여 최대 20개의 보육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

176) 낭성 섬유증(cystic fibrosis), 척수성 근위축(spinal muscular atrophy), 암 치료 의약품을 포함

177) National Care and Support Workforce Strategy

178) National Pla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2022-32

179) Indigenous Boarding Schools Grants program

180) Commonwealth Regional Scholarship Program

- (원주민) 5년에 걸쳐 15억호주달러를 투입하여 원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쓸 예정
 - 캔버라 지역에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문화구역인 Ngurra를 설립할 계획(3억 1,650만호주달러 투입)
- (장애인) 국가장애보험제도¹⁸¹⁾ 등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장애보험제도를 통해 396억호주달러를 추가로 지원하였고, 현재 50만명 이상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재향군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을 위해 “정신과 지원견 프로그램”¹⁸²⁾ 등과 같은 웰빙 서비스를 제공(1억 6,500만호주달러)

바. 불확실성에 대응

- 지정학적 환경 악화와 경제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테러 위협에 대처하고,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국방 역량 제고에 힘쓸 계획
 - (전략적 파트너십에 투자) 오키스¹⁸³⁾ 3자 안보 파트너십에 따라 FY2021-22~FY2022-23에 걸쳐 우크라이나인에게 3년 임시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할 계획
 - 이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 지원, 군사 지원, 재정착 서비스에 1억 5,650만호주달러를 지원하였음
 - 또한 2022년 3월 25일 기준, 러시아의 고위 공무원과 의회 의원, 군 장교, 군 관계자, 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488명과 33개 기관에 금융 제재 및 여행 금지를 적용 중

181)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182) Psychiatric Assistance Dog Program

183) AUKUS: 호주, 영국, 미국(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3국이 맺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의 3자 안보 파트너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 심화를 목적으로 함

- (국방 역량 제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대응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 국방 인력(Defence workforce)을 2040년까지 18,500명 증원
 - 또한 자주포 및 탄약 운반·보급 장갑차량¹⁸⁴⁾에 10억호주달러를 투자하여 육군의 장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
- (국민 안전 수호) REDSPICE¹⁸⁵⁾ 패키지에 10년 동안 99억호주달러를 투입하여 정보력, 공격이나 방어적인 측면에서 사이버 능력을 크게 강화할 예정
 - 동 패키지를 통해 ASD¹⁸⁶⁾의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고 향후 10년 동안 1,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지원하고 Five Eyes¹⁸⁷⁾ 및 오키스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184) Self-Propelled Howitzer, Armoured Ammunition Resupply Vehicle

185) Resilience, Effects, Defence, Space, Intelligence, Cyber and Enabler

186)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호주 정부 산하의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파인 잭*을 NSA**와 함께 운영하는 주체

* 파인 잭: 호주 중부 내륙 사막지대의 비밀 군사기지로 노턴 준주에 위치

** NSA: 국가안보국으로 미국 국방부소속의 정보기관

187) 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

VII. 캐나다188)

□ FY2022: 2022.4~2023.3.

□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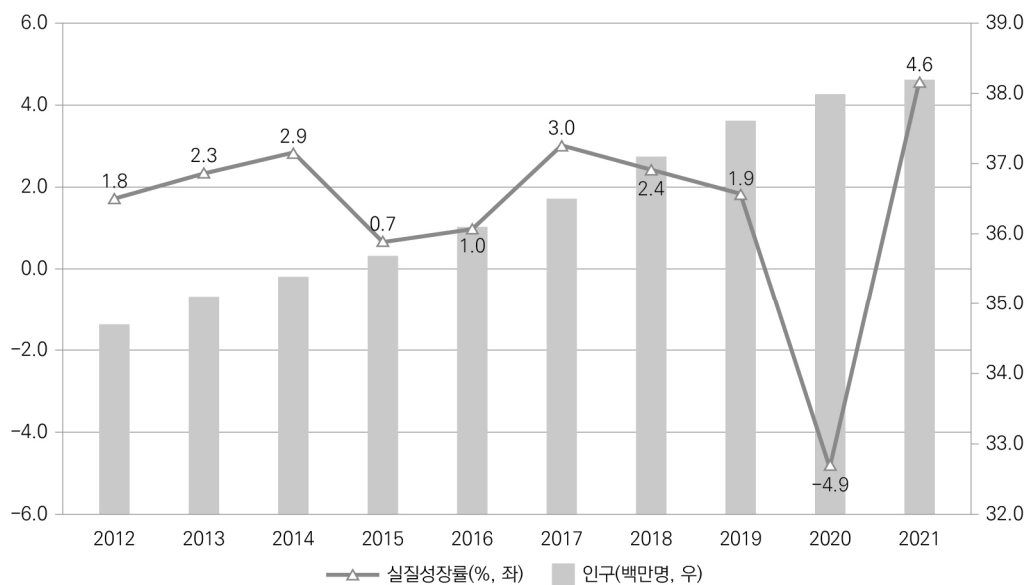
○ Budget 2022(2022.4.7.)

□ 환율: 1캐나다달러 = 약 913.26원(2021년도 1~12월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2021년 GDP 1조 9,908억달러

□ 인구: 2021년 약 3,825만명

□ GDP 성장률 및 인구추이



188)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22.4.21. 추출, <https://ecos.bok.or.kr/>) 기준; 경제규모, 인구, GDP (expenditure approach, CXC: Current prices, current exchange rates)는 OECD Stat(2022.4.21. 추출, <https://stats.oecd.org/>) 기준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22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3.9%, 7.7%,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5.8%, 3.9%로 전망
- (재정 전망) FY2022-23 재정적자는 52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2.0%)이며, 이후 FY2026-27까지 8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3%)로 점차 개선될 전망

□ 예산기조

- 캐나다 연방정부는 강력한 미래 경제 건설과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A Plan to Grow Our Economy and Make Life More Affordable」)
 - 주거, 기후대응, 일자리 및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정책을 제시

□ 세입 및 세출

- (세입) FY2022-23 총세입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4,08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5.2%)로 전망되며,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FY2026-27까지 15.7% 수준으로 증가예상
- (세출) 총세출은 FY2022-23 전년대비 10.1% 감소한 4,254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주거) 주택공급 확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혜택 확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기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오염저감 정책, 청정에너지 정책 추진,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확대
- (일자리 및 성장) 성장기금(Canada Growth Fund) 설립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 캐나다 전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 구현, 캐나다 소규모 기업 연방세율 적용 대상 확대 등 일자리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제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실질GDP 성장률)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4.6%의 강한 반등에 이어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21 경제 및 재정 업데이트(Economic and Fiscal Update, 이하 EFU) 대비 0.3%p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1분기 성장 둔화를 반영한 것에 기인
 - 2021~2026년 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2021년 EFU 전망보다 0.1%p 상향 조정된 2.9%로 전망
- (명목 GDP 성장률) 2022년 명목GDP 성장률은 2021년 EFU 전망 대비 1.0%p 상향 조정된 7.7%로 전망
- (실업률) 2022년 실업률은 2021년 EFU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된 5.8%로 전망되며, 2023년 이후 전망기간 동안 5.5%까지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21~2026년 평균 실업률은 2021년 EFU 전망 대비 0.3%p 하락한 5.8%로 전망
- (물가상승률)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 예측됨에 따라 2021년 EFU 전망 대비 0.8%p 상향 조정된 3.9%로 전망
 -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 내외 수준으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표 VII-1〉 캐나다 경제 전망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1-26
실질GDP 성장률	2021 EFU	4.5	4.2	2.8	2.0	1.8	1.8	2.8
	Budget 2022	4.6	3.9	3.1	2.0	1.9	1.8	2.9
명목GDP 성장률	2021 EFU	12.8	6.7	4.3	3.9	3.7	3.8	5.9
	Budget 2022	13.1	7.7	4.8	3.9	3.8	3.7	6.2
실업률	2021 EFU	7.6	6.1	5.7	5.7	5.6	5.7	6.1
	Budget 2022	7.4	5.8	5.5	5.5	5.5	5.5	5.8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21 EFU	3.3	3.1	2.3	2.1	2.1	2.0	2.5
	Budget 2022	3.3	3.9	2.4	2.2	2.1	2.0	2.6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2022.4.7., Table A1.1 일부 발췌

나. 재정 전망

- (재정수지) FY2022-23 재정수지는 -52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2.0%)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6-27에는 -8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3%)를 기록할 전망
- (총수입) FY2022-23 총수입은 전년대비 140억캐나다달러 증가한 4,08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5.2%)로 전망되며, 향후 FY2026-27까지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15.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총지출) FY2022-23 총지출은 전년대비 456억캐나다달러 감소한 4,523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
 - FY2022-23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대비 476억캐나다달러 감소한 4,254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전년대비 20억캐나다달러 증가한 269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프로그램 지출은 FY2022-23까지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이후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이자지출은 FY2020-2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¹⁸⁹⁾ 비율은 FY2022-23에는 45.1%를 기록한 후,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26-27에 41.5%를 기록할 전망

〈표 VII-2〉 캐나다 재정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20-21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총수입	316.4	394.4	408.4	429.5	450.8	475.1	496.0
총지출	628.9	497.9	452.3	463.3	476.2	492.9	506.1
프로그램지출	608.5	473.0	425.4	430.4	439.2	453.1	463.3
이자지출	20.4	24.9	26.9	32.9	37.0	39.8	42.9
재정수지	-327.7	-113.8	-52.8	-39.9	-27.8	-18.6	-8.4
연방채무	1,048.7	1,160.8	1,213.7	1,253.6	1,281.4	1,300.0	1,308.4
GDP 대비 비중(%)							
총수입	14.3	15.8	15.2	15.2	15.4	15.6	15.7
프로그램지출	27.6	18.9	15.8	15.3	15.0	14.9	14.7
이자지출	0.9	1.0	1.0	1.2	1.3	1.3	1.4
재정수지	-14.9	-4.6	-2.0	-1.4	-0.9	-0.6	-0.3
연방채무	47.5	46.5	45.1	44.5	43.8	42.8	41.5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2022.4.7., Table A1.4 일부 발췌

189)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2 예산기조

- 캐나다는 2022년 4월 7일 강력한 미래 경제 건설과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Budget 2022: A Plan to Grow Our Economy and Make Life More Affordable)
 - 이번 예산안에서는 주거, 기후 대응, 일자리 및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정책을 제시
 - (주거) 향후 10년간 주택건설 2배 추진, 생애 최초 주택구매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외국인 주택구매 금지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경제성장 및 혁신에 대한 투자) 성장기금(Canada Growth Fund)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캐나다 최초의 광물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 구현을 위한 자금지원, 소규모 기업 연방세율 적용 대상 확대 등 성장 및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
 - (기후) 기업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 지원, 배기가스 제로차량 구입 지원, 배기가스 제로차량 충전소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청정에너지 신규투자 등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 (기타) 이 밖에도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부담의 덴탈케어 제공, 의료 지연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아동수당·노령연금과 같은 주요 수당 인상 등의 정책 포함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22-23 총세입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4,08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5.2%)로 전망되며, FY2026-27까지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15.7%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조세수입) FY2022-23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94억캐나다달러(2.8%) 증가한 3,421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2.7%)로 전망
 - (개인소득세) 총세입의 약 55.2%¹⁹⁰⁾를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FY2022-23 전년대비 79억캐나다달러(4.1%) 증가한 1,973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FY2021-22 개인소득세는 가계소득의 강한 회복세로 전년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이후 전망기간 동안에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 법인세는 산업 부문 전반에 걸친 수익증가에 힘입어 FY2021-22에 3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FY2022-23에는 6.1% 감소한 후 전망기간 동안 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FY2022-23 법인세 감소는 상품가격의 안정화 및 팬데믹 기간 동안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회성 요인이 사라지는 것에 기인
 - (비거주자 소득세) FY2022-23 비거주자 소득세는 전년대비 6억캐나다달러 증가한 109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4.8% 증가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22-23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전년대비 38억캐나다달러 증가한 478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과세대상 소비전망에 따라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관세) FY2021-22 이후 관세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경기 회복과 관세 면제 수요 감소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수입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0) FY2020-21 기준

-
- (탄소세) 탄소세는 전망기간 동안 약 20억캐나다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 증가는 주로 재정계획 기간 동안의 탄소가격 상승에 기인
 - 탄소가격은 2021년 8월 발표된 “Update to the Pan-Canadian Approach to Carbon Pollution Pricing 2023-30¹⁹¹⁾”에 명시된 대로 2023년부터 톤당 15캐나다달러씩 인상되는 가격을 반영하여 전망
 - (고용보험) FY2022-23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전년대비 20억캐나다달러 증가한 258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전망기간 동안 노동시장의 상당한 성장으로 고용보험 수입은 연평균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5.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기타 세입) FY2022-23 기타 세입은 전년대비 11억캐나다달러 증가한 323억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191)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limate-change/pricing-pollution-how-it-will-work/carbon-pollution-pricing-federal-benchmark-information/federal-benchmark-2023-2030.html>, 2021.8.5., 검색일자: 2022.4.26.

〈표 VII-3〉 캐나다 세입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대비 %)

	2020-21	Projection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총소득세	237.0	272.5	276.6	287.1	299.2	314.7	328.6
개인소득세	174.8	189.4	197.3	205.7	214.7	225.5	236.1
법인세	54.1	72.8	68.4	69.9	72.5	76.8	79.5
비거주자소득세	8.1	10.3	10.9	11.5	12.0	12.4	13.0
총소비세	47.0	60.2	65.3	67.9	69.9	72.0	74.4
재화 및 용역세	32.4	44.0	47.8	49.5	51.2	52.8	54.7
관세	4.3	5.1	5.5	5.9	6.2	6.5	6.9
기타소비세	10.3	11.1	12.0	12.5	12.6	12.7	12.8
기타조세	0.0	0.0	0.2	0.9	0.9	1.0	1.0
총조세수입	283.9	332.7	342.1	355.9	370.0	387.8	404.1
탄소세	4.4	6.7	8.2	10.2	12.3	14.2	16.2
고용보험	22.4	23.8	25.8	28.0	30.4	32.2	33.3
기타 세입	5.7	31.2	32.3	35.4	38.1	40.9	42.3
총세입	316.4	394.4	408.4	429.5	450.8	475.1	496.0
GDP 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12.9	13.3	12.7	12.6	12.6	12.8	12.8
탄소세	0.2	0.3	0.3	0.4	0.4	0.5	0.5
고용보험	1.0	1.0	1.0	1.0	1.0	1.1	1.1
기타 세입	0.3	1.3	1.2	1.3	1.3	1.3	1.3
총세입	14.3	15.8	15.2	15.2	15.4	15.6	15.7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2022.4.7., Table A1.5 일부 발췌

나. 세출

- FY2022-23 총세출은 전년대비 476억캐나다달러(10.1%) 감소한 4,254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이후 총세출은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은 FY2022-23 1,251억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FY2024-25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 (노인지원) 노인부문 지출은 FY2022-23 682억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11.8% 증가할 전망이며, 전망기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여 연평균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보험) 고용보험 지출은 팬데믹 관련 임시 조치 만료와 실업률 하락에 기인하여 FY2023-24까지 244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며, 이후에는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근로자 소득지원) 캐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질병 및 간병수당 연장¹⁹²⁾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¹⁹³⁾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런 소득지원 프로그램 비용은 FY2021-22 177억캐나다달러, FY2022-23 4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아동지원) FY2022-23 아동수당(CCB: Canada Child Benefits)은 2020년 도입된,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임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252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이후 전망기간 동안은 예상 수급자 증대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¹⁹⁴⁾)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은 FY2022-23 900억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26-27에는 1,105억캐나다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192) sickness and caregiving benefits: 2022년 5월 7일까지 연장

193) 캐나다는 공중보건 폐쇄로 인한 직접적 피해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을 도입하였으며 2022년 5월 7일까지 시행예정

194) 중앙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출분으로 교부금 성격을 가짐

- (보건지출) FY2021-22 캐나다 보건지출(Canada Health Transfer: CHT)은 2022년 3월 25일 의료기금 20억캐나다달러 추가 지출을 포함하여 451억캐나다달러가 될 전망이며 FY2026-27에 560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캐나다 보건지출은 명목 GDP 성장률의 3년 이동 평균에 따라 증가하며 매년 최소 3% 증가 보장
-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지출(Canada Social Transfer: CST)은 매년 3% 증가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으며, FY2021-22 155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6-27 179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홈케어 및 정신보건) 2017예산에서 도입된 지방·주정부 홈케어 및 정신보건 지원금은 FY2022-23 이후 연간 12억캐나다달러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전망
- (유아교육 및 보육) 캐나다 전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¹⁹⁵⁾ 관련 이전지출은 FY2021-22 29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6-27 79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탄소세 반환) 탄소세는 다시 관할 정부부문으로 반환되는데, 탄소세 가격 상승에 따라 탄소세 이전지출은 FY2021-22 41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6-27 162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직접 프로그램 지출¹⁹⁶⁾) FY2021-22 직접프로그램지출은 2,375억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코로나19 지원 혜택이 종료되고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FY2026-27에는 1,936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낼 전망
 - (기타 이전지출)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지를 반영하여 부처에서 관리하는 지출은 FY2021-22 942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791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195) 캐나다 정부는 2021년 예산에서 향후 5년간 약 300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음. 캐나다 가정의 생활비 절약을 위해 하루 평균 10달러의 보육 공간을 제공하고 2022년 말까지 평균 비용의 50% 감소 계획.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A 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Plan," 2021.12.16.,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1/12/a-canada-wide-early-learning-and-child-care-plan.html>, 검색일자: 2022.4.26.

196) 부처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 프로그램 지출로 구분하여 부처에 예산을 배분

- (운영비용¹⁹⁷) 운영비용은 코로나19 백신 및 개인보호장비, 치료제 등 팬데믹 관련 비용 감소에 따라 FY2021-22 1,224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4-25 1,129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표 VII-4〉 캐나다의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대비 %)

	2020-21	Projection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A) (Major Transfers to persons)	200.1	144.0	125.1	124.6	130.4	136.4	142.9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58.5	61.0	68.2	73.6	78.0	82.6	87.2
고용보험(EI benefits) ¹⁾	58.4	39.0	31.3	24.4	24.8	25.4	26.3
코로나19 근로자 소득지원 ²⁾	55.8	17.7	0.4	0.0	0.0	0.0	0.0
아동수당(Child benefits)	27.4	26.3	25.2	26.6	27.6	28.5	29.4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B)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106.7	87.4	90.0	96.9	102.2	107.2	110.5
보건(Canada Health Transfer)	45.9	45.1	45.2	49.1	51.8	53.9	56.0
사회보장(Canada Social Transfer)	15.0	15.5	15.9	16.4	16.9	17.4	17.9
재정균등화 교부금(Equalization)	20.6	20.9	21.9	23.8	25.1	26.1	27.1
준주 교부금 (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4.2	4.6	4.6	4.9	5.1	5.2	5.4
지역사회구축기금 (Community Building Fund)	4.3	2.3	2.3	2.4	2.4	2.5	2.5
홈케어 및 정신보건 (Home care and mental health)	1.3	1.5	1.2	1.2	1.2	1.2	1.2
유아교육 및 보육(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0.0	2.9	4.5	5.6	6.6	7.9	7.9
기타 재정협정 (Other Fiscal Arrangements) ³⁾	15.4	-5.2	-5.6	-6.5	-6.8	-7.1	-7.5
탄소세 반환(Proceeds from the Pollution pricing framework returned)(C)	4.6	4.1	8.0	11.9	12.4	14.3	16.2

197) 운영비용은 100개 이상의 정부부처, 기관 및 공기업 운영비용을 반영

〈표 VII-4〉의 계속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대비 %)

	2020-21	Projection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직접프로그램지출(D) (Direct Program Expenses)	297.2	237.5	202.2	197.1	194.2	195.2	193.6
긴급임금보조금 (Emergency Wage subsidy)	80.2	20.9	0.0	0.0	0.0	0.0	0.0
기타 이전지출 (Other Transfer payments)	98.0	94.2	86.3	83.7	81.3	81.3	79.1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⁴⁾	119.1	122.4	116.0	113.4	112.9	113.8	114.5
총 프로그램지출(A+B+C+D) (Total Program Expenses)	608.5	473.0	425.4	430.4	439.2	453.1	463.3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9.1	5.8	4.7	4.4	4.5	4.5	4.5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4.8	3.5	3.3	3.4	3.5	3.5	3.5
직접프로그램지출 (Direct Program Expenses)	13.9	9.5	7.5	7.0	6.6	6.4	6.1
총 프로그램지출 (Total Program Expenses)	27.6	18.9	15.8	15.3	15.0	14.9	14.7

주: 1) 실업급여, 질병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간병급여 등이 포함

2)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anada Recovery Benefit,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포함

3) 퀘벡 주에 대한 청소년 회복 수당 및 Stand Programs에 대한 대체 지불, 역외 수익에 대한 Canada-Nova Scotia 협정에 따른 지불, 잠재적 재정안정화 지급금을 포함. 또한 특정 코로나19 대응조치(Safe Restart Agreement, Safe Return to Class Fund, the COVID-19 Essential Workers Support Fund, and Canada's COVID-19 Immunization Plan) 및 주택공급 개선 관련 자금도 포함

4) 자본상각비용(capital amortization expenses)을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2022.4.7., Table A1.6 일부 발췌

4 주요 재정정책

가. 주택·부동산 정책

□ (주택공급 확대) 연방정부는 향후 10년간 캐나다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 캐나다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궁극적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분석¹⁹⁸⁾하에 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한 예산을 투입

- 2022-23 회계연도부터 5년간 40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주택 가속화 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주택 공급사업을 추진
 - 향후 5년간 1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 가속화 기금의 목표
 - 주택 가속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설하는 주택 세대당 인센티브를 주거나 주택건설 계획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선행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빠른 주택건설을 추진
- 보다 신속하게 가격 경쟁력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2-23 회계연도부터 향후 2년간 신속 주택정책(Rapid Housing Initiative)에 15억캐나다달러를 제공
 - 최소 6,000개의 저가 주택이 공급될 것이며, 위 예산의 최소 25%는 여성 중심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
- 2023년부터 다세대 주택 개조 세액 공제(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를 도입하여 노인 또는 성인인 장애인을 위한 secondary suite을 건설할 경우 세액을 최대 7,500캐나다달러 환급할 계획

□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 캐나다인이 보다 많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여러 혜택을 마련

- 2023년부터 비과세 첫주택 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신설하여 무주택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해 4만캐나다달러까지 비과세로 저축 가능

198)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OECD 평균보다 적음

- 매년 최대 8천캐나다달러까지 5년간 총 4만캐나다달러를 저축할 수 있으며,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인출할 경우 원금과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제공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세액 공제(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를 기존 보다 2배 늘린 1만캐나다달러로 확대하며 2022. 1. 1. 기준으로 소급 적용
- (부동산 투기 억제) 단기간 매매에 대한 중과세,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 2023년 1월 1일부터 12개월 미만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사업 소득으로 보아 전액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
 - 단, 사망, 사고, 출산, 직장이동,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 12개월 이내라 할지라도 예외 인정
 - 캐나다 국민이 보다 많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주거용 주택 구매를 2년간 금지
 - 단, 레크리에이션 용도 구매 허용, 영주권자 및 유학생, 임시근로자 등은 주택 구매 가능

나. 기후 정책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000억 캐나다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오염저감) 캐나다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정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도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신차 판매분의 일정 비율을 무공해차량(zero-emission vehicle; ZEV)이 되도록 규정 개정 예정
 - 더 많은 캐나다인이 무공해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2025년 3월까지 연장하며, 5년에 걸쳐 17억캐나다달러의 예산 투입

- 2022년 캐나다 인프라 은행(Canada Infrastructure Bank)은 대규모 도시 및 상업용 ZEV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5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할 예정
 - 또한,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에 5년간 4억캐나다달러를 배정하여 지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자금 지원 예정
 - 기업들이 소유한 중형 및 대형 차량을 ZEV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위해 4년에 걸쳐 5억 4,750만캐나다달러 투입
 - 저탄소 경제기금(Low Carbon Economy Fund)¹⁹⁹⁾ 확장에 FY2022-23부터 7년 동안 22억캐나다달러를 지원
 - 농업 청정 기술 프로그램(Agricultural Clean Technology program)에 3억 2,940만캐나다달러를 투자(3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캐나다 전역의 농업 종사자들이 저탄소 고효율의 농업 방식을 따르도록 지원
- (청정 전력(clean electricity) 정책 추진) 청정 전력 개발 및 계획 수립 등 지원 확대
- FY2022-23부터 4년간 2억 5,000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국가의 중요한 청정 전력 프로젝트의 사전적 개발을 지원(지역 간 송전 능력 강화 및 소형모듈 원자로 등)
 - 스마트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사업에 7년간 6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고, 주정부와 협력해 탄소배출량 제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500만캐나다달러 지원
-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넷제로, 배터리, 수소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청정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확대
- 캐나다는 2022 예산안에서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탄소배출 제로, 배터리 저장 및 청정수소 기술에 중점을 둔 최대 30%의 투자 세액 공제 계획을 발표

199) 저탄소경제기금은 2017년 설립되어 캐나다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성장을 창출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약 132개 프로젝트를 지원함. 풍력, 태양열 발전, 전기 난방과 같은 배출 감소 기술을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

출처: 캐나다 연방정부, “What is the Low Carbon Economy Fund?,”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limate-change/low-carbon-economy-fund/what-is-lcef.html>, 검색일자: 2022.5.3.

- 투자 세금 공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2022 가을 경제 및 재정 업데이트(fall economic and fiscal update)에서 제공
-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²⁰⁰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탄소발생을 줄이고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위한 노력 지속
 -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 세액 공제율은 직접적으로 공기에서 CO₂를 포집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 60%, 기타 CO₂ 포집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 50%, 운송·저장·활용 장비에 대한 투자 37.5%이며,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세액 공제율은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예정
 - 세액공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FY2022-23부터 5년간 26억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연간 15억캐나다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청정 해양 및 수질 관련 정책) 해양안전 강화, 해양 생태계 보호, 원주민 및 해안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추가 조치 시행
 - 해양보호계획(Oceans Protection Plan) 확대를 위해 FY2022-23부터 9년간 20억 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원주민 사회, 산업, 투자자 및 모든 캐나다인이 해양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활동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
 - 2022년에 설립될 수질청(Canada Water Agency) 설립에 5년간 4,350만캐나다달러, 2022-23 Freshwater Action Plan²⁰¹에 1,960만캐나다달러, the Great Lakes Fishery Commission 지원을 위해 5년간 4,490만캐나다달러 지원 등 수질 개선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 노력

200) 대기에 배출되는 CO₂를 포집하여 저장한 CO₂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기술이며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꼽힘

201) 위 계획은 Great Lakes, the St. Lawrence River, Lake Winnipeg, Lake of the Woods, the Fraser River, the Saint John River, the Mackenzie River, and Lake Simcoe의 정화 활동을 지원

다. 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캐나다 성장기금: Canada Growth Fund) 중요한 국가 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당한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캐나다 성장기금 설립을 발표
 - 향후 5년간 정부예산 150억캐나다달러를 자본금으로 투자해 정부 투자 1달러 당 민간 자본 3달러 유치를 목표로 운용하게 되며, 저탄소 산업 및 신기술 육성에 투자하여 경제를 다각화하고 수출을 강화할 것이라 발표
- (성장하는 소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소기업 세율 적용대상 기업²⁰²⁾의 기준을 낮추어 더 많은 기업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함
 - 2022 예산안에서는 소기업 과세대상 자본 기준을 1,500만캐나다달러에서 5,000만캐나다달러까지 확대하여 9%의 연방 법인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FY2026-27까지 약 66억캐나다달러의 세금절감 효과를 통해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최초의 중요 광물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²⁰³⁾) 연방정부는 중요 광물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8년간 38억캐나다달러를 지원할 예정
 -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글로벌 광물산업에서의 주요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 공언
- (혁신투자청 설립) 캐나다의 낮은 비즈니스 R&D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캐나다 혁신투자청(Canada Innovation and Investment Agency)’ 설립에 10억캐나다달러 배정
- (공급망 인프라 확충) 연방정부는 경제 수요에 부합하고 기후변화 및 글로벌 이슈로 인한 성장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 6억 320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효과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인프라를 갖출 계획

202) 캐나다 연방 법인세율은 15%이나 사업소득 50만캐나다달러까지는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세율을 9% 적용하고 있음

20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캐나다는 주요 자원국으로서의 지위가 급부상하고 있음. 캐나다는 주요 광물들이 풍부한 자원 공급국이나 대부분 먼 지역에 매장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

- 캐나다 교통망을 확충·재정비하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 중심 솔루션 개발 등에 투자
- (유아교육 및 보육) 합리적 비용과 양질의 보육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보다 많은 여성이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및 경제 정책임
 - 2021년 예산에서 연방정부는 5년간 300억캐나다달러를 투자를 약속했으며, 그 이후 1년간 모든 주 및 준주와 합의하여 2022년 말까지 캐나다 가정의 보육비는 평균 50% 감소할 전망
 - FY2025-26까지 캐나다 전역의 모든 보육시설은 하루 평균 보육비가 10달러가 될 예정
 - 2022년 예산안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반 시설 기금(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Infrastructure Fund)에 FY2023-24부터 4년에 걸쳐 6억 2,500만캐나다달러를 배정하여 캐나다 전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 구현을 지원
- (이민)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을 위하여 캐나다는 '2022-24 Immigration Levels Plan'에서 연간 451,000명의 영주권을 승인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
 - 연방정부의 아프간 난민 지원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영주권자의 캐나다 정착을 위하여 5년간 21억캐나다달러의 지원을 약속
 -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 관련 접근가능하고 시기적절한 정부의 서비스 대응 능력 제고 목적의 기술 투자 등에 5년간 1억 8,730만캐나다달러를 지원
- (근로자 지원 및 양질의 직업 연결) 외국인 근로자 및 현장근로자, 장애인 등을 위한 근로자 지원 확대
 - 노동 이동성 공제(Labour Mobility Deduction)를 도입하여 건설업과 같은 현장직 근로자가 출장, 임시 이전 등 관련 비용을 매년 최대 4,000캐나다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FY2026-27까지 5억 9,500만캐나다달러 배정

- ‘Union Training and Innovation Program’에 향후 4년간 8,420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3,500명의 여성, 신규이민자, 장애인, 원주민, 유색 캐나다인의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캐나다 일자리 및 성장을 지원할 계획
- 임시외국인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²⁰⁴ 제도 개선에 향후 5년간 1억 5,900만캐나다달러를 지원
 - 고용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 포함
- 장애인을 위한 고용 전략 실행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참여 증가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2억 7,260만캐나다달러 배정

라. 보건 분야

- (국가 보조 덴탈케어²⁰⁵)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53억캐나다달러를 투입하여 연소득 9만캐나다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비용을 제공
 -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 12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2023년 18세 미만과 노인, 장애인으로 확대하며 2025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 연소득 7만캐나다달러 미만 가정에겐 분담금이 면제됨
- (의료지연 해소) 연방정부는 의료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주정부에 교부하는 의료 교부금(Canada Health Transfer)에 20억캐나다달러 추가 배정
 -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약 70만건의 진료가 취소 또는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FY2020-21에도 연방정부는 40만캐나다달러를 주 정부에 지원한 바 있음

204)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은 캐나다인이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오는 근로자들은 농업, 어류 및 기타 식품 가공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노동에 기여함

205) 캐나다인의 1/3이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지역사회 의료인력 확충) 도시와 떨어진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상환 면제(loan forgiveness to doctors and nurses) 제도 확대 시행 예정
 - 북부지역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상환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FY2023-24부터 4년간 2,620만 캐나다달러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
 - 1인당 50%까지 상환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 경우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최대 6만캐나다달러, 간호사는 최대 3만캐나다달러까지 학자금 상환이 면제됨
- (정신건강 개선) 연방정부는 2년간 'Wellness Together Canada(WTC) 포털'에 1억 4,000만캐나다달러를 투입하여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WTC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옴
-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²⁰⁶)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을 위해 FY2022-23부터 3년간 1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피해 감소·치료·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구축에 지원

마.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

- (퍼스트네이션 아동 지원) 연방정부는 FY2021-22부터 6년간 40억캐나다달러를 제공하여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수행함과 동시에 Jordan's Principle²⁰⁷ 이행을 위한 장기적인 개혁에 필요한 지원 자금을 제공
 - 연방정부는 2016년 이후 퍼스트네이션 아동들의 성장에 필요한 의료, 사회 및 교육 서비스 등의 지원을 위해 약 24억캐나다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꾸준한 지원을 해오고 있음

206) 오피오이드 위기란 주로 북미지역과 일부 유럽지역에서 합성 오피오이드(펜타닐 및 펜타닐 유사체 등) 과량 복용으로 인한 사망 및 내원 사례가 급속히 증가해 해당 국가에서 이를 '위기'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약물 과다 사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책을 실시

207) 캐나다 인권재판소는 2016년 퍼스트네이션 아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과 오랜 차별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를 Jordan's Principle이라 명명함.

□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 원주민들의 건강 및 정신건강 관리 지원,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아동들의 초중등 교육지원, 안전한 식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지원 등 원주민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제시

- 2022년에도 원주민들의 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해 4억 5,900만캐나다달러, 향후 2년간 원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2억 2,760만캐나다달러를 지원
- 퍼스트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족의 안전한 주거생활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7년간 약 40억캐나다달러를 지원할 계획
- 퍼스트네이션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3억 1,060만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원주민 지역사회의 안전한 식수관리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5년간 6억 3,900만캐나다달러 투자
- 팬데믹 기간 동안 토착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대출금 50%에 대한 상환면제 등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

바. 다양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건설

□ 연방정부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캐나다를 만들기 위해 성소수자 및 유색인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시

- (성소수자 지원) 건강,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직면한 성소수자(LGBTQ2)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FY2022-23부터 5년간 1억캐나다달러를 책정
- (인종차별 대응) 새로운 반인종차별 전략(Anti-Racism Strategy)을 포함한 인종차별 대응을 위해 FY2022-23부터 4년간 8,500만캐나다달러를 지원
- (흑인 단체지원) 흑인 봉사 지역단체 지원에 2년간 5,000만캐나다달러 할당

- 또한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성(gender) 기반의 폭력에 대응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제시
 - (노인 및 장애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노령연금(OAS) 및 소득보장보조금(GIS) 인상, 노인 및 장애인의 집수리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규모를 2배로 확대
 - (젠더 갈등) 연방정부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하여 젠더 기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FY2022-23부터 5년간 5억 3,930만캐나다달러의 예산 배정

사. 글로벌 리더십 강화

- (국방력 강화) 이번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캐나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5년간 80억캐나다달러 증액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가 포함되어 있음
 - 군사력 강화를 위한 장비 및 기술 투자에 5년간 61억캐나다달러 지원 계획
 - 군대 리더십 강화, 사법시스템 현대화 등의 지원에 1억캐나다달러, 여군을 위한 건강서비스 확충 등 군대 내 성 다변화를 위한 지원에 1억 4,430만캐나다달러 등 군 문화 변화 관련 지원에 5년간 2억 4,400만캐나다달러 투입
 -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에 5년간 9억 4,000만캐나다달러 배정
- (국제사회 지원) 2022년 예산안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세계 보건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 2022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검사, 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²⁰⁸⁾(ACT-A)에 추가로 7억 3,200만캐나다달러를 제공
 - 2020년부터 캐나다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적 지원에 동참하고자 27억캐나다달러 이상의 국제지원을 약속했으며, 2022년 ACT-A에 대한 지원금은 20억캐나다달러 이상이 될 전망

208)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ACT-A

- 캐나다는 2022년 전염병 예방 및 대응과 같은 글로벌 보건안보 우선순위 해결을 위한 지원에 FY2023-24부터 4년간 2억 9,600만캐나다달러를 지원할 계획

아. 공평한 조세시스템 및 효율적 정부

□ (공평한 조세시스템) 연방정부는 조세시스템을 보다 공평하게 만드는 추가 조치를 제안

- (캐나다 회복분담금(Canada Recovery Dividend)) 연방정부는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광범위한 회복을 위해 대형 금융기관의 2021 과세연도 소득 중 10억캐나다달러 초과분에 대해 일회성으로 15%의 세금을 부과
 - 또한 1억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은행 및 보험사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법인 세율을 1.5%p 인상하는 등 향후 5년간 61억캐나다달러의 세입 증가 예상
- (조세회피) 소득세법 개정으로 외국기업을 이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여 5년간 42억캐나다달러 세입 증가 추진
- (국세청 강화) 연방정부는 5년간 12억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국세청 기능 강화²⁰⁹⁾에 투자할 것이며, 이 조치로 5년간 34억캐나다달러의 추가 세입 확보 예상

□ (효율적 정부운영)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캐나다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 (계획된 지출감소 검토) 2022 예산에서 정부는 향후 4년간 발표된 정책에 대한 지출의 속도와 규모를 검토하여 30억캐나다달러를 절감할 계획
- (전략적 정책 검토)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전략적 정책 검토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향후 5년간 60억캐나다달러, FY2026-27에는 30억캐나다달러 절감을 목표로 함
 - 우선적으로 경제성장, 포용성 강화, 기후대응이라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정부 프로그램과 운영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재할당하기 위한 검토를 시행

209) 감사 확대, 범죄적 탈세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소 강화, 교육지원 확대 등

〈표 VII-5〉 캐나다의 2022년 예산안 주요 조치에 대한 투자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Projection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부동산 정책	0.7	2.0	2.2	2.1	2.2	1.0
강한 성장, 회복력 있는 경제	0.0	0.3	1.4	1.2	1.3	1.3
기후대응	0.0	1.3	2.2	3.0	2.9	3.0
중산층 일자리 창출	0.0	0.8	1.3	1.4	1.2	1.2
글로벌 리더십	0.0	1.7	1.5	1.9	2.0	2.3
강한 공공 보건의료	1.3	0.7	0.8	1.3	1.4	1.6
원주민과 화합	0.2	2.5	2.0	1.9	1.9	2.0
안전하고 포용적 지역사회	0.0	0.2	0.4	0.4	0.3	0.3
공평한 조세시스템	0.0	-2.0	-3.3	-3.6	-3.7	-3.9
효율적 정부	0.0	0.0	-0.7	-1.7	-2.7	-3.7

주: 1. +는 투자 증가분, -는 투자 감소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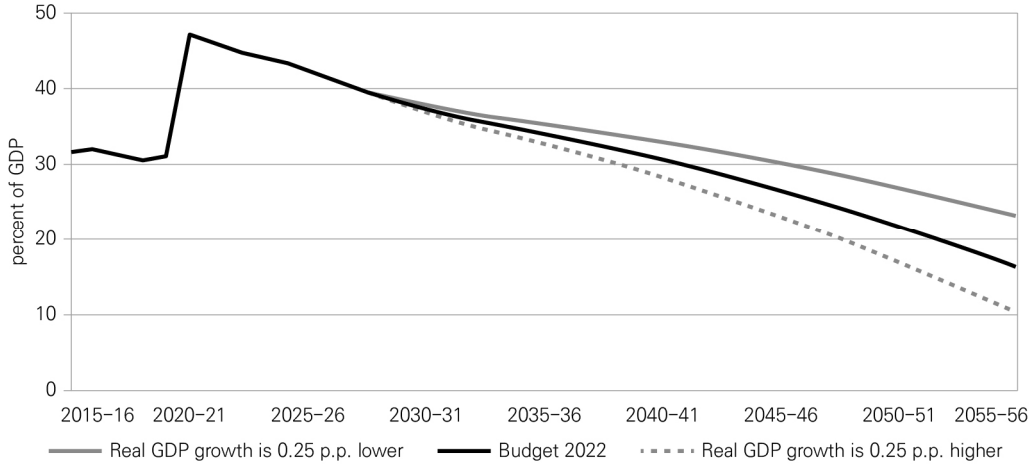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2022.4.7., Table 1

자. 재정건전화

- 캐나다의 GDP 대비 장기 국가채무 전망²¹⁰⁾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 공공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로로 순항하고 있음
 - 캐나다의 장기 국가채무는 불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 완만한 미래 생산성 성장률, 예상되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예산에서 연방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분야에 재투자하여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평가

210) 방법론 및 주요 가정은 원문 참고.

[그림 VII-1] 캐나다 장기 국가채무 전망



주: 점선은 2027년부터 실질GDP 성장률이 0.25p.p씩 높고/낮은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임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2022.4.7., Chart A1.4

□ FY2022-23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²¹¹⁾으로 본 FY2022-23 연말기준 총시장채무²¹²⁾는 1조 2,910억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590억캐나다달러 증가할 전망

- (유가증권 및 단기국채) FY2022-23 유가증권은 1조 630억캐나다달러, FY2022-23 단기국채는 2,130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소매채무 및 외채) FY2022-23 외채는 150억캐나다달러로 전망

211)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국내의 채무, 기타 금융부채 및 관련자산의 관리에 대한 목표·전략·계획을 설정

212) 캐나다의 총채무(Gross debt) 중 시장채무(Market deb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시장채무관리를 주로 다룸. 예산안 및 재무결산상 채무지표는 연방채무(누적 기준)이나, 예산안에서는 이와 더불어 시장채무(유가증권, 단기국채, 외채, 소매채무로 구성)를 중심으로 중기 채무전략을 보여줌.

〈표 VII-6〉 캐나다의 FY2021-22 시장채무(Market Debt)

(단위: 연말기준, 십억캐나다달러)

	2018-19 (실적)	2019-20 (실적)	2020-21 (실적)	2021-22 (추정)	2022-23 (전망)
유가증권(Domestic bonds)	569	597	879	1,031	1,063
단기국채(Treasury bills)	134	152	219	187	213
외채(Foreign debt)	16	16	15	14	15
소매채무(Retail debt)	1	1	0	0	0
총 시장채무(Total market debt)	721	765	1,114	1,232	1,291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2022.4.7., Table A2.3

정책분석 22-02

주요국 예산안 2022

발 행 2022년 6월 30일
발 행 인 김 재 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044)414-2114(代)
홈 페이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미래기획
I S B N 979-11-6655-14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주요국 예산안 2022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 www.kipf.re.kr

